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
연구보고	2017-31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7. 12.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연구보고 2017-31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7.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개발되어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 변화 분석과 더불어 분야별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작성됨. 2017년 연구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최근 6년간의 변화 추이를 영역, 분야, 지표별로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간의 연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 2017년(2016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 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영역	분야	지표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 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과 산정방법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성과(Outcome)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 둘째, 성별격차를 측정하는 지수
 - 셋째, 성평등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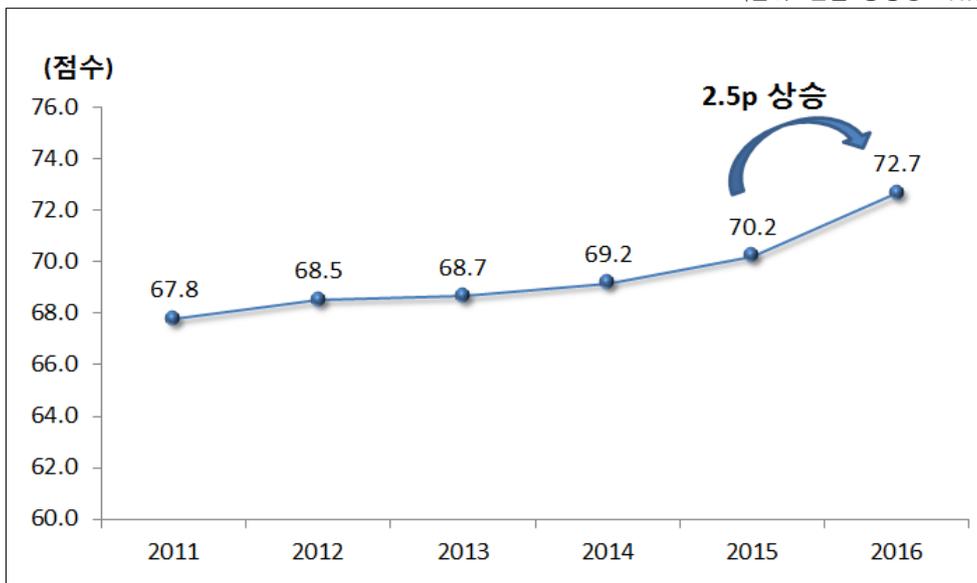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걸쳐 산정됨.
 - 1단계,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 2단계,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가중치(Weight)로 보정
 - 3단계, 분야별 점수를 산정
 - 4단계, 각 분야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지수 산정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통계생산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국가 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고, 성평등지수의 값은 '0.0'(불평등)에서 시작해 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수의 값도 높아져 '100.0'(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2.2로 전년 대비 2.0p 상승.
 -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1년 67.8에서 2012년 68.5, 2013년 68.7, 2014년 69.2, 2015년 70.2로 상승함. 2016년의 72.7은 2011년 대비 4.9p가 상승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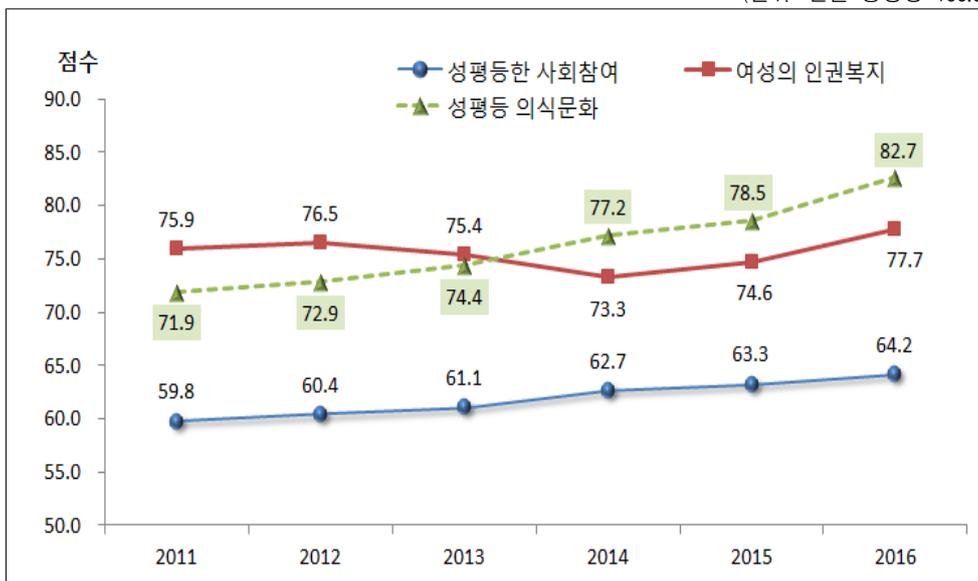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정책영역별로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순임.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11년 71.9에서 2016년 82.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2016년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냄.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됨.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까지는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그간 꾸준히 상승해 온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 1위 자리를 내어 줌.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 분야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하지만 2011년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4.4p 상승한 64.2를 기록함.

〈정책 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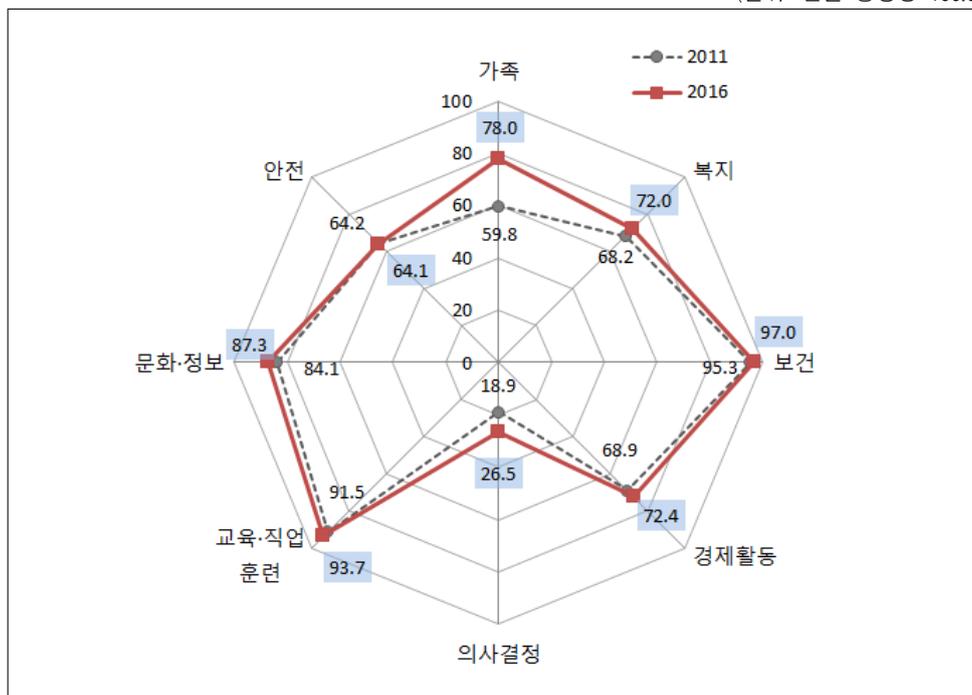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6년 보건 분야가 97.0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음.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7), 문화·정보 분야(87.3), 가족 분야(78.0), 경제활동 분야(72.4), 복지 분야(72.0)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26.5)이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64.1)임.
- 2016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로 18.2p가 상승됨. 그 다음은 복지, 경제활동, 문화·정보, 의사결정, 교육, 보건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 분야는 오히려 0.1p 악화됨.

〈분야별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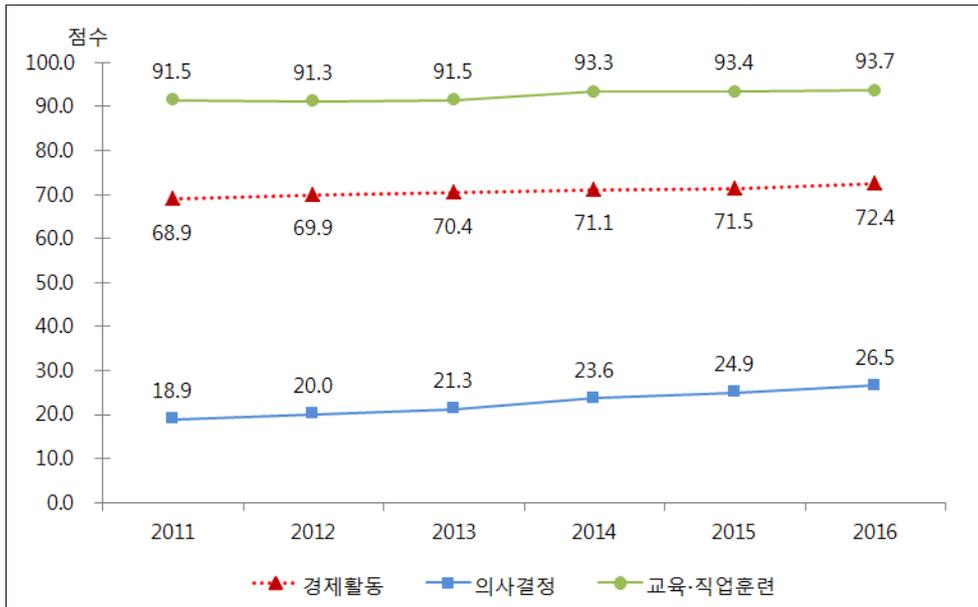
(단위: 완전 성평등=100.0)



-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68.9에서 2016년 72.4로 3.5p 상승함.
- 의사결정 분야 역시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5년간 7.6p 상승함.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므로 앞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5년 간 2.2p 상승하였음.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성평등이 달성됨과 동시에 직업훈련기회에 있어서도 성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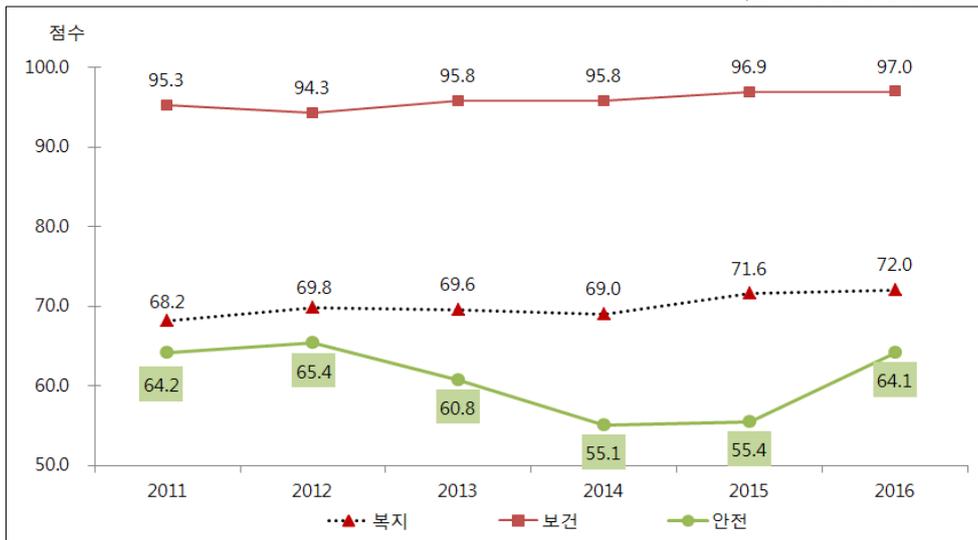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복지 분야는 2011년 68.2에서 2012년 69.8로 상승한 후 2013년 69.6, 2014년 69.0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5년에는 다시 71.6으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 또한 72.0으로 2011년에 비해 3.8p 상승하였음.
-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 분야는 2011년 95.3에서 2016년 97.0에 이르기 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안전 분야는 2011년 64.2에서 2016년 64.1로 0.1p가 하락하여 5년 간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유일한 분야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과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가 모두 악화되었기 때문임.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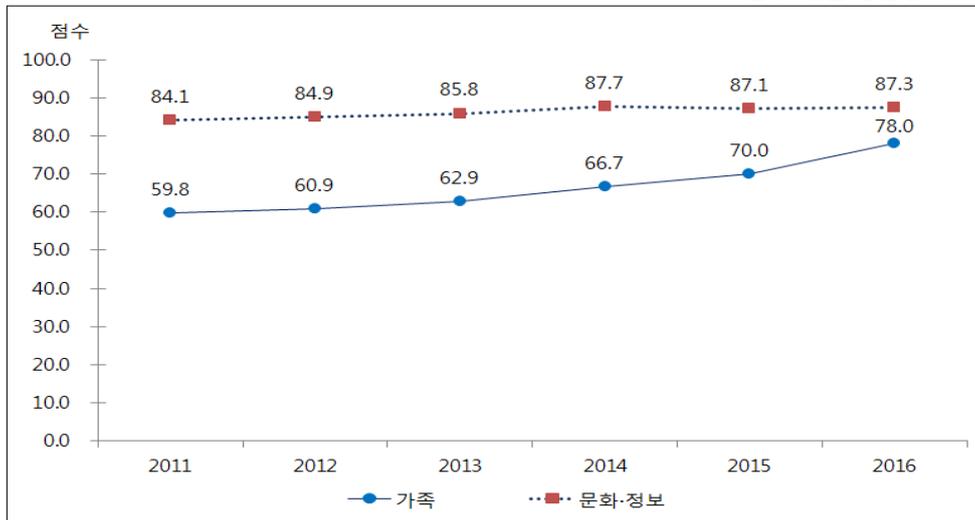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가족 분야는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 5년 동안 18.2p가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임. 육아휴직자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른 것임.
-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15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함. 8개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며, 세부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분야별 성평등지표 주이와 특징

-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임.
 -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에서 2016년 58.4%로 상승하여,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2011년 54.9%, 2014년 57.0%, 2016년 58.4%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2011년 77.4%, 2014년 78.6%, 2016년 78.9%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비 : 2011년 70.9에서 2016년 74.0으로 상승

- 남녀 임금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임금상승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 성비는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64.1%로 상승함.

※ 여성 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1,548천 원, 2014년 1,742천 원, 2016년 1,869천 원
※ 남성 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2,444천 원, 2014년 2,761천 원, 2016년 2,918천 원
※ 남녀 임금격차 : 2011년 63.3%, 2014년 63.1%로 하락, 2016년 64.1%로 상승

-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점차 상용근로자 중 여성 비중 높아져, 성평등 수준이 개선됨.

※ 여성 상용근로자 : 2011년 3,739천 명, 2014년 4,525천 명, 2016년 4,965천 명
※ 남성 상용근로자 : 2011년 6,922천 명, 2014년 7,630천 명, 2015년 8,008천 명
※ 상용근로자 중 여성 비율 : 2011년 35.1%, 2014년 37.2%, 2016년 38.3%로 지속적으로 상승

-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타 분야에 비해 절대적 수준이 낮음.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최근에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함.

※ 17대 국회(2004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13.0%)
※ 18대 국회(2008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41명(13.7%)
※ 19대 국회(2012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47명(15.7%)
※ 20대 국회(2016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51명(17.0%)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상승율이 남성보다 높아서, 공직부문 의사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전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2011년 8.4%, 2014년 11.1%, 2016년 13.5%).

※ 4급 이상 공무원(여성) : 2011년 684명, 2014년 955명, 2016년 1,236명
 ※ 4급 이상 공무원(남성) : 2011년 7,422명, 2014년 7,684명, 2016년 7,953명

- 정부위원회 위촉직위원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위원 비율이 훨씬 낮은 특징을 보임.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2011년 24.8%,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6.3%
 ※ 정부위원회 남성위원 비율 : 2011년 75.2%, 2014년 68.3%, 2015년 65.5%, 2016년 63.7%

- 관리직 규모는 남녀 모두 하락 추이를 보임. 다만, 남성의 하락폭이 여성보다 훨씬 커서, 성비는 2011년 이래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또한 전년대비 악화됨.

※ 여성 관리직 : 2011년 기준 52천 명, 2012년 51천 명, 2015년 37천 명, 2016년 32천 명
 ※ 남성 관리직 : 2011년 기준 463천 명, 2012년 413천 명, 2015년 316천 명, 2016년 298천 명

○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평균 교육년수는 여성의 상승율이 남성의 상승율보다 높아 남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여성 평균 교육년수 :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2015년 11.4년
 ※ 남성 평균 교육년수 : 2000년 11.5년,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2015년 12.8년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1년 여성이 75.0%, 남성이 70.2%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이후 남녀 모두 하락 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11년 75.0%, 2013년 74.5%, 2015년 74.6%, 2016년 73.5%
 ※ 남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11년 70.2%, 2013년 67.4%, 2015년 67.3%, 2016년 66.3%

- 직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여성비율은 2011년 32.6%에서 2016년 54.3%로 크게 상승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이수 근로자 비율(여성) : 2011년 32.6%, 2014년 49.8%, 2016년 54.3%
 ※ 직업교육훈련이수 근로자 비율(남성) : 2011년 37.7%, 2014년 54.6%, 2016년 59.1%

- 복지 분야는 2011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16년 가구주 빈곤율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여성은 3.8%p 하락, 남성은 0.9%p 상승함.

※ 2011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21.8%,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7.8%
 ※ 2014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17.3%,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8.2%
 ※ 2016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18.0%,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8.7%
 - 2011년 대비 2016년 빈곤계층 가구주 가구의 하락: 여성 3.9%p ↓, 남성 0.9%p ↑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여성비율은 점차 상승함.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이래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높고, 2016년 국민연금 여성비율은 2011년 대비 4.0%p 상승함.

※ 국민연금가입자 여성비율 : 2011년 39.6%, 2013년 41.4%, 2015년 42.9%, 2016년 43.6%
 ※ 공무원연금가입자 여성비율 : 2011년 41.2%, 2013년 42.4%, 2015년 43.9%, 2016년 44.6%
 ※ 사학연금가입자 여성비율 : 2011년 47.9%, 2013년 47.7%, 2015년 50.3%, 2016년 53.1%

- 장애인의 고용률 중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11년 이후 하락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 상승 후 2016년 소폭 하락함. 남성의 고용률은 2014년까지 상승 이후 2015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함. 이후 2016년에는 다시 상승함.

※ 여성장애인 고용률: 2011년 22.7%, 2014년 19.8%, 2015년 21.0%, 2016년 20.8%
 ※ 남성장애인 고용률: 2011년 44.8%, 2014년 49.4%, 2015년 44.7%, 2016년 47.1%

-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 2011년 95.3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16년 97.0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 성비는 2013년

전년대비 하락하나 2014년 이후 다시 상승 추이 유지

※ 여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26, 2011년 0.932, 2013년 0.929, 2015년 0.934
※ 남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53, 2011년 0.962, 2013년 0.962, 2015년 0.963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낮으나, 전반적으로 수검률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성평등 수준은 2016년 97.0으로 상승함.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11년 71.0%, 2013년 70.3%, 2015년 74.6%, 2016년 76.5%
※ 남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11년 73.9%, 2013년 73.7%, 2015년 77.5%, 2016년 78.9%

-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1년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5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하락함.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 2011년 31.2%, 2014년 28.6%, 2015년 32.1%, 2016년 30.4%
※ 남성 스트레스 인지율 : 2011년 25.9%, 2014년 24.4%, 2015년 29.8%, 2016년 27.1%

-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의 경우 2011년 이후 2012년 1.2p 상승했으나, 그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어 하락하여 2014년에는 55.1까지 하락하였음. 2015년과 2016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64.1을 기록하였음.

- 2016년 강력범죄 피해자는 2011년 대비 남성과 여성 모두 줄어든 가운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성평등 수준은 개선됨.

※ 여성피해자 : 2005년 14,847명, 2011년 23,544명, 2015년 29,617명, 2016년 21,751명
※ 남성피해자 : 2005년 3,736명, 2011년 4,553명, 2015년 3,528명, 2016년 3,057명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008년 이후로 안전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16년에 다시 상승함.

※ 여성 안전인식 비율 : 2011년 10.3%, 2012년 11.4%, 2014년 7.4%, 2016년 10.6%
※ 남성 안전인식 비율 : 2011년 14.8%, 2012년 16.2%, 2014년 11.7%, 2016년 15.9%

○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음. 하지만 가사노동 시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1년 5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78.0으로 상승함.

- 남녀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성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여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36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34분,	비취업자 4시간 41분
2014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30분,	비취업자 4시간 33분
2016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29분,	비취업자 4시간 31분

※ 남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31분,	비취업자 55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36분,	비취업자 1시간 4분
2014년 취업자 :	1일 평균 41분,	비취업자 1시간 8분
2016년 취업자 :	1일 평균 43분,	비취업자 1시간 10분

-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 소폭 하락한 뒤 2015년 이후 다시 상승함.

※ 여성 만족도 :	2011년 53.4%, 2013년 54.0%, 2014년 53.8%, 2015년 54.3%, 2016년 54.7%
※ 남성 만족도 :	2011년 57.2%, 2013년 57.4%, 2014년 56.6%, 2015년 57.4%, 2016년 58.3%

-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1994년에 자연출생성비인 106에 도달한 상태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05년에 128.5에서 2015년 105.5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16년에는 107.4로 다소 악화됨.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2011년 109.5, 2014년 106.7, 2015년 105.6, 2016년 107.4
------------------	--

-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매우 낮지만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여성 육아휴직자 :	2011년 56,735명, 2013년 67,323명, 2015년 82,467명, 2016년 82,179명
※ 남성 육아휴직자 :	2011년 1,402명,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
※ 여성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2011년 2.4%, 2013년 3.3%, 2015년 5.6%, 2016년 8.5%

○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 남녀 여가시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짐.

※ 여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41분,	비취업자 6시간 17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23분,	비취업자 6시간 3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15분,	비취업자 5시간 38분
2016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12분,	비취업자 5시간 28분

※ 남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4시간 11분,	비취업자 8시간 23분
2014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51분,	비취업자 7시간 33분
2016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43분,	비취업자 7시간 13분

- 여가 만족도는 2011년 대비 2013년도에 상승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하락한 후 2016년에는 소폭 상승함. 성비는 상승추이를 유지하고 있음.

※ 여성 만족도 :	2011년 18.0%, 2013년 25.8%, 2015년 24.8%, 2016년 26.9%
※ 남성 만족도 :	2011년 20.7%, 2013년 28.4%, 2015년 27.1%, 2016년 27.6%

- 성별 정보화 격차는 남녀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함.

※ 여성 정보화수준 :	2011년 94.4%, 2013년 94.4%, 2015년 95.3%, 2016년 93.6%
※ 남성 정보화수준 :	2011년 105.8%, 2013년 105.6%, 2015년 104.8%, 2016년 106.4%
※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일반국민 대비 남성과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2017년 발표된 2015년 통계기준 한국의 GDI는 188개국 중 3그룹(104위)으로 분류됨.
 - HDI 점수가 여성 0.863, 남성 0.929로 집계되어 GDI 점수는 0.929임.
- 2015년 통계기준 한국은 전체 188개국 중 10위(0.067)로 전년도 23위(0.125)대비 13계단 순위 상승을 보임.
 - 순위 상승요인은 생식건강 통계값의 개선 때문임. UNDP는 인구통계를 현행화하여 추계함에 따라 한국의 모성사망비는 27명에서 11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청소년 출산율 또한 인구 1,000명 당 2.2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함. 또한 중등 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비중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성불평등지수가 크게 개선됨.
- 한국의 2017년 GGI는 순위는 전체 144개국 중 118위로 2016년도 116위에 비해 2계단 하락함.
 - 단, 2017년도의 점수는 0.650점으로 전년대비 0.01점 상승
 - 주된 하락원인은 유사업무임금성비 하락과 문해율 통계의 미반영 때문임.

□ 국가성평등지표 개편 조사결과

- 2017년 분야별 가중치 조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가중치가 0.277로 가장 높고 의사결정(0.194), 안전(0.143), 교육·직업훈련(0.095), 복지(0.095), 가족(0.081), 보건(0.066), 문화·정보(0.046) 분야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분야의 가중치는 더 높아진 반면 문화·정보, 가족, 보건, 복지,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약간 낮아짐.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성평등의 관심이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반영된 것이며, 안전 분야 또한 지난 몇 년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임.
- 국가성평등지표의 분야별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지표는 다음과 같음.

분야	세부 분야	지표
경제 활동	노동시장참여	경제 활동 참가율(15~64세)
		고용률(15~64세)
	소득수준	임금성비(시간당 임금성비)
		성별소득격차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근로자
		상용근로자
육아휴직자		
의사결정	정치참여	국회의원 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행정참여	4급 이상(혹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정부(지자체)위원회 참여비율
	민간참여	관리자 비율
교육· 직업훈련	교육기회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교육자원	교육전문직 비율
안전	교육성과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안전의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복지	소득보장과 빈곤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
		공적연금가입자(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빈곤가구주 비율(국가)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상태 평가	스트레스 정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질병	유병률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	가족생활	가사노동 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가족가치관	유산상속 비율	
문화·정보	여가활동	여가시간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정보격차	성별 정보화 격차(국가)	

□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

- 국가성평등지수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 등의 성평등정책과 연계하여 제시함. 연계는 분야별 지표별로 연계하여 제시했으며, 국정과제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연번을 연계표로 활용함.
-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 중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나 개선 정도가 높지 않은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관련 부처에서 집중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는 웹을 통한 DB의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 상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국가성평등지수 웹DB 구축 화면〉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8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11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3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13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16
2. 산정방법	19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25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27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27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28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34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34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46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55
IV. 국가성평등지표 개편 연구	65
1. 성평등지수의 분야 가중치 설정	67
2. 분야별 구성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0
가. 경제활동 분야	71

나. 의사결정 분야	74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77
라. 안전 분야	80
마. 복지 분야	82
바. 보건 분야	84
사. 가족 분야	87
아. 문화·정보 분야	89
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요약	91
V.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99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01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04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16
■ 참고문헌	119
■ 부 록	121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23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6
<부록 3>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165
■ Abstract	203

표 목 차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6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화	14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15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8
<표 II-4> 2017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20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23
<표 III-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50
<표 IV-1>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69
<표 IV-2>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1
<표 IV-3> 소득수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3
<표 IV-4>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4
<표 IV-5> 정치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5
<표 IV-6>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6
<표 IV-7> 민간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7
<표 IV-8>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8
<표 IV-9> 교육자원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9
<표 IV-10>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0
<표 IV-11> 안전의식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1
<표 IV-12>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1
<표 IV-13>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3
<표 IV-14> 취약계층보호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4
<표 IV-15>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5
<표 IV-16> 질병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6
<표 IV-17>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6
<표 IV-18>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7
<표 IV-19> 가족가치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8

<표 IV-20> 여가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9
<표 IV-21> 문화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0
<표 IV-22> 정보격차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0
<표 IV-23>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1
<표 IV-24>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2
<표 IV-25> 교육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3
<표 IV-26>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4
<표 IV-27>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4
<표 IV-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5
<표 IV-29>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6
<표 IV-30> 문화정보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97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04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5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7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8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9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0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1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3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15

그 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I-2] 국가성평등 수준의 산정 방법	7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27
[그림 III-2] 2011년 및 2015년 대비 2016년의 분야별 성평등 개선 수준	28
[그림 III-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9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30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32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33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34
[그림 III-8]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	35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36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37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추이	38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39
[그림 III-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40
[그림 III-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41
[그림 III-15] 성별 4급 이상 공무원과 여성 변화 추이	41
[그림 III-16]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42
[그림 III-17] 성별 평균 교육년수	43
[그림 III-18]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44
[그림 III-19]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45
[그림 III-20]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45
[그림 III-21]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46
[그림 III-22]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변화 추이	47
[그림 III-23]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48
[그림 III-24]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49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50
[그림 III-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51
[그림 III-27]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52
[그림 III-28]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53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54
[그림 III-30]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55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55
[그림 III-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56
[그림 III-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변화 추이	57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58
[그림 III-35]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59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60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61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62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3
[그림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응답자 분포	68
[그림 IV-2]	분야별 가중치 산출 결과(2009년, 2017년)	70
[그림 IV-3]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72
[그림 IV-4]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4
[그림 IV-5]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6
[그림 IV-6]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79
[그림 IV-7]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2
[그림 IV-8]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3
[그림 IV-9]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5
[그림 IV-10]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88
[그림 V-1]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117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23
<부표 1-2> 임금격차	123
<부표 1-3> 상용근로자	123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24
<부표 1-5> 고용률	124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124
<부표 1-7> 30대 고용률	124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25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25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25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25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26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26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26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127
<부표 1-16> 5급 이상 공무원	127
<부표 1-17> 관리직 현황	127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28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28
<부표 1-20> 초·중·고등학교 교장	128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129
<부표 1-22> 공무원 수	129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130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130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30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자	130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131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31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32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32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133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133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34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35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36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36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137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137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38
<부표 1-40> 빈곤 가구주 비율	139
<부표 1-41> 공적연금 가입자	139
<부표 1-42> 장애인 고용률	140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140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140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141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141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41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142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42
<부표 1-50> 영양급여 (청구)수급자	142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142
<부표 1-52> 모성사망비	143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143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43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144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2015)	144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144
<부표 1-58> 자살 생각률	145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45
<부표 1-60> 강력범죄(홍악범죄) 피해자	146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146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147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147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47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148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48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48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49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149
<부표 1-70> 육아휴직자	149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150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150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151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151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52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152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152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53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54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154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55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6
<부표 3-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167
<부표 3-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168
<부표 3-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168
<부표 3-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169

<부표 3-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170
<부표 3-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172
<부표 3-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173
<부표 3-8>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 GGI 비교	174
<부표 3-9> GGI 1위 국가와 한국 간의 점수격차	176
<부표 3-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7년)	177
<부표 3-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78
<부표 3-12> GDI 영역과 지표	179
<부표 3-13> GDI 지표별 자료원	180
<부표 3-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182
<부표 3-15> 한국의 GDI 수준	183
<부표 3-16> 성별 경제활동인구	184
<부표 3-17> 성별 월평균 임금	184
<부표 3-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5)	185
<부표 3-19> GII의 영역과 지표	188
<부표 3-20> GII의 지표별 자료원	188
<부표 3-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91
<부표 3-2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5년 기준)	193
<부표 3-23>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195
<부표 3-24> 출생성비 비교	196
<부표 3-25>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197
<부표 3-26>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198
<부표 3-27>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198
<부표 3-28> 임금성비 비교	199
<부표 3-29>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200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88년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어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업무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된 이후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다양한 영역의 성평등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을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여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과소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8위¹⁾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2015년 이래 순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성평등 수준은 모든 영역에 걸쳐 성격차가 높게 나타나서,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118위, 교육적 성취영역은 105위, 건강과 생존영역은 84위, 정치적 권한 영역은 90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 분야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 환경을 파악하여 성평등 지표를 개발·측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변화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성평등 수준의 위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점검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에서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되어 매년 발표된다.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공식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9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가의 성

1) WEF(2017),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17.

4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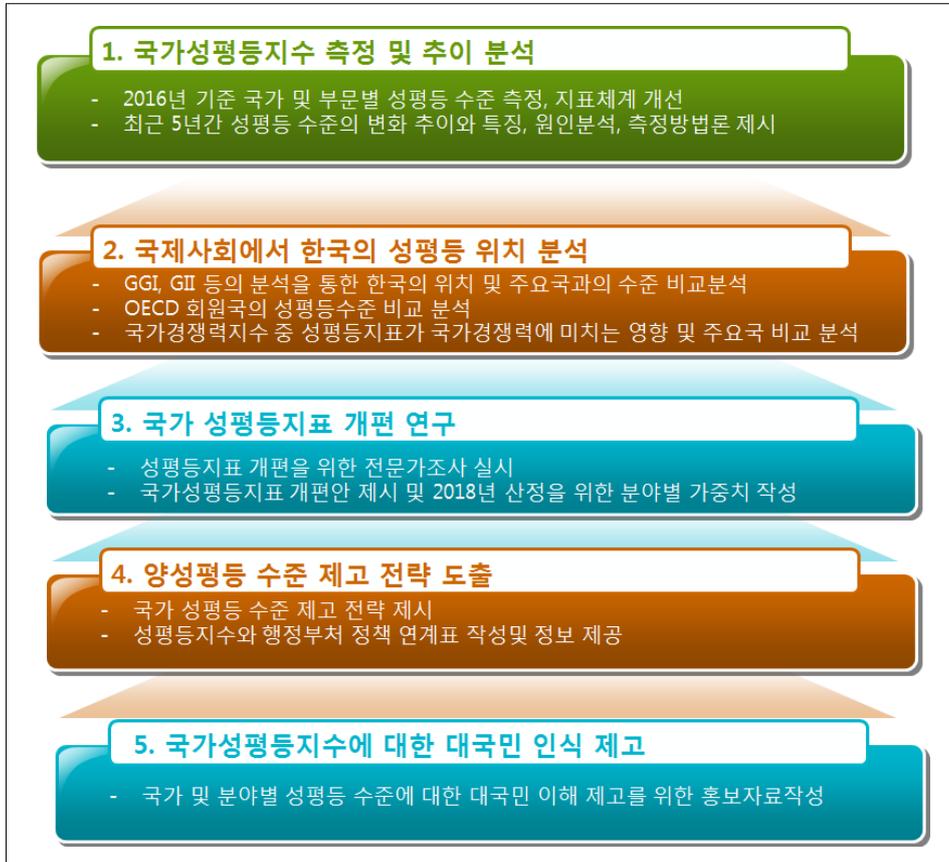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체계(2017년 기준)를 가지고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국가경쟁력, 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6년간 한국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성 불평등한 영역에 대해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종합지수뿐 아니라 분야별 지수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에 필요한 지표를 개편하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종합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8개 분야별 가중치에 대해 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과 추이 분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국가성평등지표 개편 연구, 성평등 제고 전략 도출, 국가성평등 지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5가지([그림 I-1] 참조)로 구분되며, 각 연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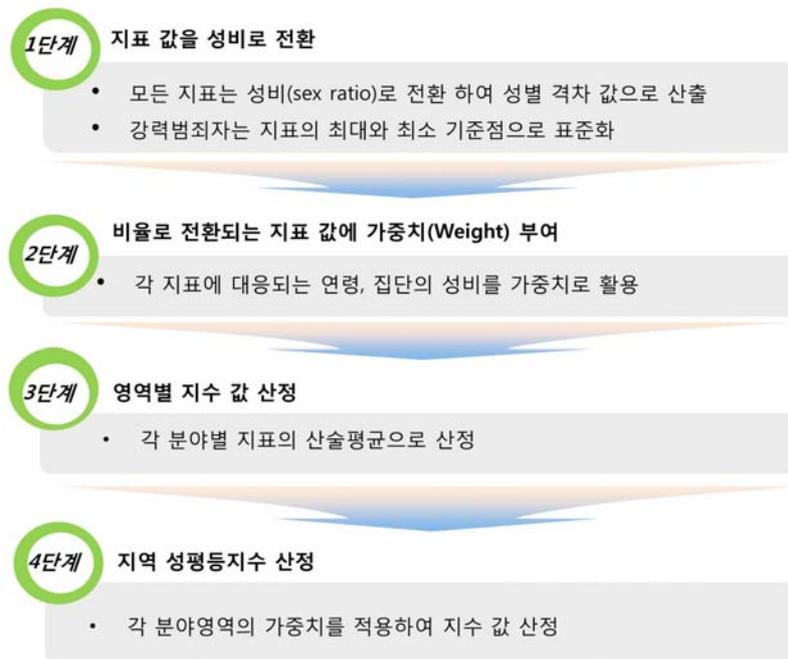
먼저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 지표를 측정하고 영역·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종합지수인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성평등 지표는 지표의 주기를 고려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수준은 최근 6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 정책 영역, 8개의 분야,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I-1>과 같다.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교육·직업훈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장애인 고용률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스트레스 인지율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과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지표 체계를 점검함과 동시에 관련 통계를 모두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표준화와 가중치 부여 절차를 거쳐 지수화 된다. 지수는

먼저 분야별 지수로 산정되면 이를 분야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종합지수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지수 산정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림 I-2] 국가성평등 수준의 산정 방법

그리고 국가성평등지수와 행정부처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과 연계표를 작성하여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 지수 중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개발

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를 비교분석한다.

3) 국가성평등지표의 개편 연구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와 성평등 의식 등을 반영하여 기존 국가성평등지표를 개편하고 분야별 가중치를 조정할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국가성평등지표와 지역성평등지표의 개편을 고려하여 조사되며, 분야별 가중치 부여를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별 적절성과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다.

4)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도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을 요약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였다. 정책 연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등의 정책을 활용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문헌연구 및 통계수집·분석
 - 국내외 성평등지수 관련된 문헌 연구
 -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비교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관련 통계 자료원 검토
 -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 2016년 국제 성평등지수(GII, GGI 등)의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 성평등지표 개편을 위한 자문 실시

-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개선과제, 국제기구 활용통계 점검 등에 대한 자문

○ 전문가 조사 실시

- 127명 전문가 대상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의견 조사
- 8개 분야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조사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 | | |
|---------------|----|
|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 13 |
| 2. 산정방법 | 19 |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는 2009년도에 기존 여성 및 사회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후 성평등 향상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간씩 변화해 왔다. 2009년 최초의 지표구성은 전문가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8개 분야 226개의 성평등지표 풀(pool)을 제안 받았다. 이후 자문회의 등을 통해 149개로 정리하고 분야별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를 결정하였다. 대표지표(representative indicator)는 우리나라 전체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따라서 대표지표는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남녀 성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라는 의미에서 관리지표(administrative indicator)로 분류 했다. 이와 같은 관리지표에는 여성특화지표와 같이 남녀 성비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표도 담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나 현재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생산되고 있더라도 생산주기가 길거나 통계적 대표성이 없는 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²⁾.

2009년에 개발된 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약간씩 구성상의 변화가 있었다. 개편된 지표는 성평등 수준이 완전 평등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적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고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각 연도별 지표의 변화는 <표 II-1>과 같다.

2) 김태홍 외(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 34.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화

연도	지표체계 개편 내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폴 구성 후 자문회의를 통해 8개 분야 149개 지표 구성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200명)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2개, 분야별 가중치 측정 ○ 최종 8개 분야(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21개의 대표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0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건강수명' 지표가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 평등수준 도달로 삭제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관련 삶의 질(EQ-5D)'로 대체 - '인구 10만명 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비율'로 대체 -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대체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1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지표명 변경 - 보건 분야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추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의 법적근거 마련 ○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지표 추가 -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 -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삭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수정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추가 - 보건 분야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추가

출처 : 주계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 인용 및 수정.

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이래 법적 기반을 가지고 발표되는 지수이다. 2009년 첫 개발 시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정·발표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게 되었다.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p>제 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p>제 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이하 생략)</p>

출처 : 법제처(2017.1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도록 개발되었다³⁾.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 수준보다 성과(Outcome)수준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의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지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지만, 대부분은 남녀의 성과 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발표되고 있는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GEI), 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3)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29~30 인용 및 수정.

또한 성과지표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은 수준(Level)이 아니라 성별 격차(Gap)를 활용한다. 지표의 수준을 측정하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으로 인해,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성취수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가 성별 격차로 산정된다는 것은 성평등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수준 향상보다 성격차를 좁혀 성별수준 차이를 해소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수준개선과 성격차를 해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석된다. 즉, 수준 개선을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으로 둔다면 정책의 우선 순위는 항상 낮은 수준의 여성 지표 개선에 있을 것이고, 성격차 해소에 둔다면 남녀의 수준 차이가 큰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성별 격차의 해소에 더 큰 관심을 둔 지수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지수 산정의 목적이 성평등 달성과 여성 지위와 권한 향상 중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지표구성도 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과 관리 목적은 성평등 달성뿐만 아니라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지표는 남녀 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했다. 이에 비해 관리지표는 남녀 격차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여성의 지위 및 권한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부록 1>과 <부록 2> 참조).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연계하여 구축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의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영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국가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영역의 분야는 시행령 15조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이들은 국가성평등지수에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영역은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연계되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속하는 조항으로는,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 조성, 제38조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로는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영역과 분야를 연계한 후 지표는 정책영역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단,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② 여성의 인권·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③ 성평등 의식·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출처: 김태홍 외(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 인용.

2. 산정방법⁵⁾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먼저 1단계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시킨다. 단, 대표지표 중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표준화를 통해 지표 값을 성비로 전환시키고 있다.

2단계는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값을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로 만드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남녀의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 성평등 기준점 '1'을 만족하며, 지표의 최저와 최고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력범죄피해자와 같은 부정적 지표는 그 값이 지나치게 클 경우 격차보다 수준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지게 되므로 최대치를 제한한다. 강력범죄피해자는 10만명 당 200명을 최대치로 제한하며, 지표의 값이 작을수록 성평등한 수준이 되고 아래의 표준화함수를 사용한다.⁶⁾

$$I = [(Max(x) - x)] / [(Max(x) - Min(x))]$$

3단계는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로 보정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항 성평등지표의 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인구로 조정한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에 의하면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중에서 상용근로자와 관리자의 경우 각각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와 남성취업자에 대한 여성취업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경험 근로자는 각각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했다. 한편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

5)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20-28에서 인용 및 수정

6) 지수의 표준화방법은 참고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서열화

$I = Rank(X)$, 정규화 $I = \frac{X - X_m}{\sigma}$, 최소-최대 $I = \frac{X - Min(X)}{Max(X) - Min(X)}$,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참조.

성비(Sex ratio at birth)가 1.06이기 때문에 남성 대비 여성 비에 1.06의 역수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는 지표를 2016년에 5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체하였다.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의 지표 값은 ‘(4급 이상 여성공무원)/(4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해 가중치, 즉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동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된 가중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인 비빈곤 가구주 비율과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각각 전체 가구주의 성비 역수와 18~59세 인구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나머지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인 여가 시간의 가중치는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이고, 안전 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성비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표 II-4〉 2017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	평균 교육년수	-
성별 임금격차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가족 분야		의사결정 분야	
가사노동 시간	취업률 고려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 1.06 역수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가족관계 만족도	-	관리자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육아휴직자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비빈곤 가구주 비율	전체 가구주의 성비 역수
건강검진 수검률	-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인구 성비 역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스트레스 인지율	-	장애인 고용률	-
문화·정보 분야		안전 분야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
여가만족도	-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전체인구의 성비
성별 정보화 격차	-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2016년에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에서 새로 추가되었거나 대체된 지표들은 이미 언급하였다. 1~3단계의 지표 산정단계를 통한 각 분야별 지표 값 계산 방식은 <표 II-5>와 같다.

4단계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에서 분야별 지수 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분야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하기도 한다.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⁷⁾.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국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 산정은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5단계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 분야별 가중치를 활용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 부여 방식은 계층적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산정한다. 계층적 분석법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에

7)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 5.)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 값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정보 0.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지수의 최종 지표 값은 개별 분야 별 지표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15-64세 인구
성별 임금격차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전국구+지역구
4급 이상 공무원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진화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화률 성비	$X = [F / M]$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직업훈련 참가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복지			
비빈곤가구주 비율	대상 남녀 가구주 가구비율로 조정된 비빈곤 가구주 가구 성비	$X = W_{mf} \times [F / M]$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성비	$X = [F / M]$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X = [F / M]^{(-1)}$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변경 후 산정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대상 인구 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times [(F / M)]$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 ³⁾	$X = [Sm / Sf]^{(-1)}$ Sm 혹은 Sf = $[(200 - x) / 200]$ 으로 표준화	Max(x)=200 Min(x)=0
가족			
가사노동 시간	남녀 취업구조를 통제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⁴⁾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F / M]^{(-1)} \times \frac{1}{1.0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단, 완전평등 기준점을 남성 육아휴직자를 여성 10%로 봄	$X = [F / M]^{(-1)} \times 10$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한 여가시간 성비 ⁵⁾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성별 정보화 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3)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5)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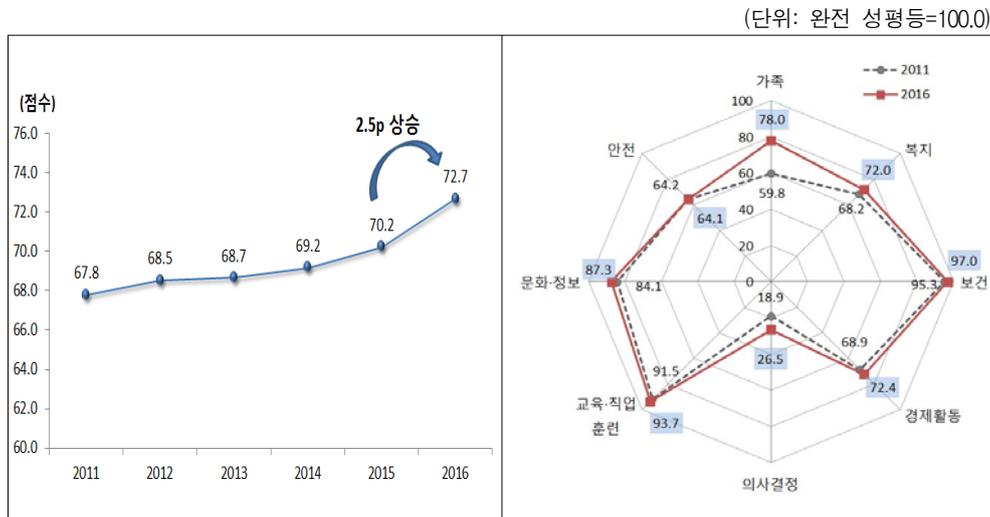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27
-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34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⁸⁾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1년 67.8에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면서 2016년에는 성평등지수 값이 72.7로 2011년 대비 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이후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시기는 2015~2016년으로 2.5p 상승을 보였다.⁹⁾

분야별로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7), 문화·정보 분야(87.3), 가족 분야(78.0)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26.5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낮았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 64.2, 복지 분야 72.0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가 72.4로 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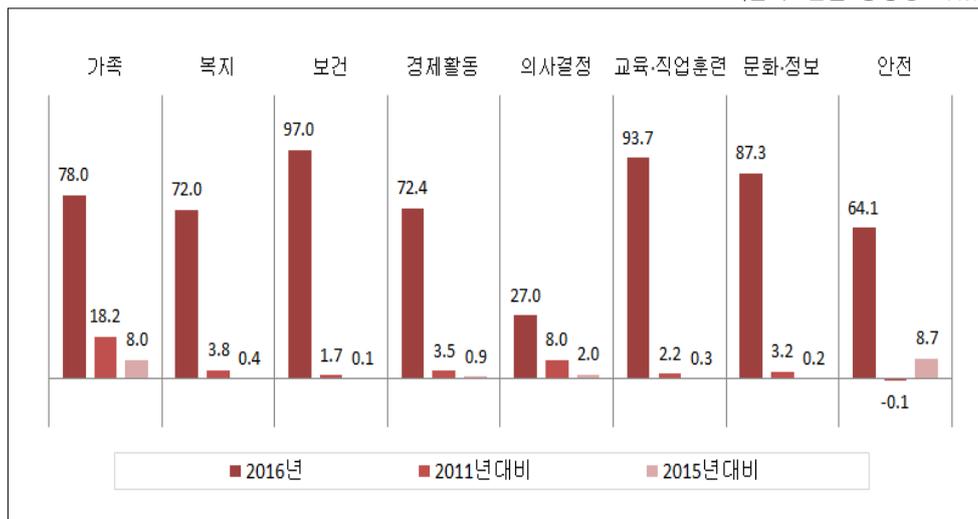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 8)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혹은 추정)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9) 국가성평등지수의 값은 0.0(완전 불평등)부터 100.0(완전 평등) 사이에 위치하며, 지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그리고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2016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5년 및 2011년과 비교하여 증감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11년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18.2p 상승)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선된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와 복지 분야로 각각 8.0p, 3.8p가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안전 분야는 지수 값이 오히려 0.1p 하락하였고, 보건, 문화·정보 분야, 교육·직업훈련 등의 분야는 지수 값이 미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안전 분야(8.7p 상승)였다. 가족 분야 또한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었으며(8.0p), 이어 의사결정(2.0p)이나 경제활동(0.9p) 분야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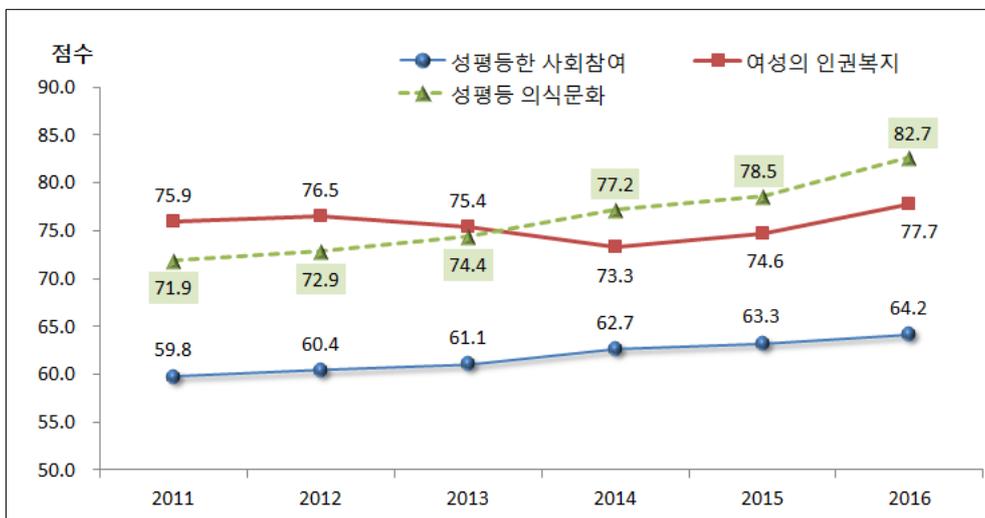
[그림 III-2] 2011년 및 2015년 대비 2016년의 분야별 성평등 개선 수준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82.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77.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4.2)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정책 영역별로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1.9, 2015년 78.5, 2016년 82.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하위지표인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이 2011년 84.1에서 2016년 87.3으로 3.2p가 상승하고, 가족 분야 지표 값도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 18.2p가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59.8에서 2016년 64.2로 상승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의사결정 분야 지표 값이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7.6p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5.9에서 2013년 75.4, 2014년 73.3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5년에는 지표 값이 74.6, 그리고 2016년에 77.7로 등락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같은 영역에 속하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지표 값이 2011년 각각 95.3, 68.2에서 2016년 각각 97.0, 72.0으로 높아진 데 비해, 안전 분야 지표 값이 2011년 64.2에서 2015년 55.4로 8.8p 하락했다가 2016년 64.1로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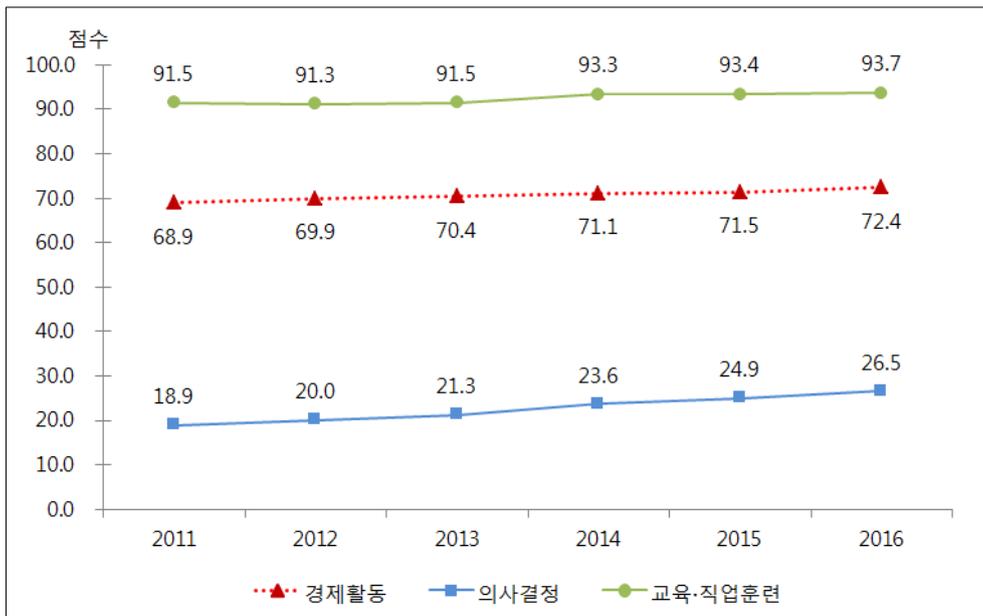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2016년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3.7이었고, 이어서 경제활동 분야 72.4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 26.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수 값은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1년 91.5, 2014년 93.3 그리고 2016년에는 93.7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같은 분야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86.5에서 2016년 91.9로 적게나마 상승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 성평등 수준에 도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도 지수 값이 2011년 68.9, 2015년 71.5 그리고 2016년 72.4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위지표인 성별 임금격차의 지표 값이 2012년 64.4에서 2015년 62.8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 64.1로 상승한 것,

동 분야의 또 다른 하위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직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각각 70.9, 72.5에서 2015년 각각 74.0, 79.2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도 지수 값이 2011년 18.9, 2015년 24.9 그리고 2016년 26.5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분야의 하위지표인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32.3에서 2015년 56.0으로 급증하였고, 비록 또 다른 하위지표인 관리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15.8에서 14.6으로 1.2p 하락하였어도 나머지 2개의 하위지표인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의 지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2.7p, 5.3p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 분야로 97.0이었고, 그 다음은 복지 분야로 72.0,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는 64.1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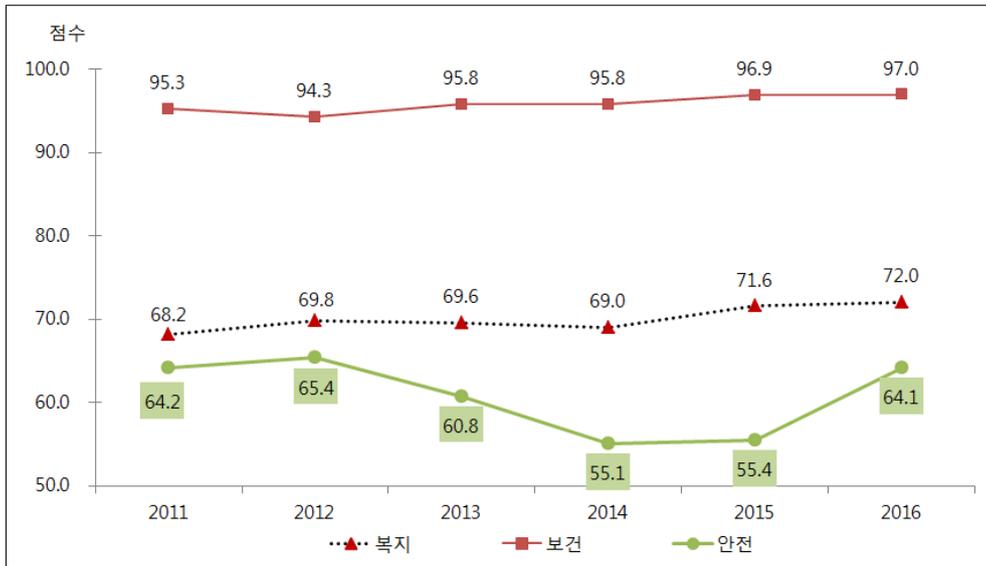
해당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과 그 변화 추이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보건 분야의 경우 하위지표로는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나뉜다. 그 중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¹⁰⁾의 지표 값이 2011년 92.8에서 2016년 95.5로 2.7p 상승하면서 하위지표들 중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성비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1년 각각 96.9, 96.1에서 2016년 각각 98.4, 97.0으로 각각 1.5p, 0.9p의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즉,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은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의 하위지표로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가구주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가 있다. 이들 하위지표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남성이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여성비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해당 지표 값이 2011년 69.2에서 2016년 82.0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비빈곤 가구주 성비의 경우 지표 값이 2011년 84.8에서

10) 스트레스 인지율은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변경하여 성비로 산정함.

2016년 89.8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에는 40.1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47.0으로 상승했다가 2016년 44.2로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 속하는 하위지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성비의 지표값은 2011년 69.6으로 시작해 2016년 66.7로 2.9p 하락했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의 지표값은 2011년 58.8에서 2016년 61.6으로 2.8p 상승했다. 즉,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악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건수가 남성 피해자 건수 보다 더 많이 상승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주: 분야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표 값임.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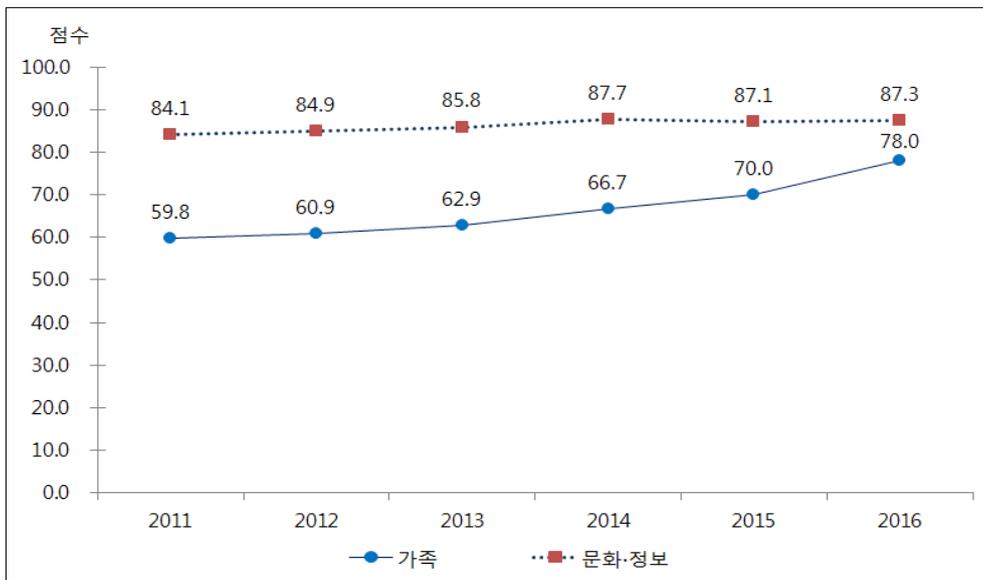
3)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기준으로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이 87.3으로 가족 분야(78.0) 보다 9.3p 더 높았다. 또한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지표

값의 변화추이를 보면,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59.8에서 2014년 66.7 그리고 2016년에는 78.0으로 급증하였다.

가족 분야의 이러한 성평등지수의 상승은 앞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하위지표인 육아휴직 성비 지표 값이 2011년 24.7에서 2016년 92.7로 68.0p 만큼 급증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가사노동 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도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된 주된 요인은 육아휴직자 성비의 지표가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도 2011년 84.1에서 2014년 87.7까지 상승하다가 2016년 87.3으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분야의 하위지표인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지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3.1p, 7.7p 상승한데 반해 성별정보화격차 지표는 1.3p 하락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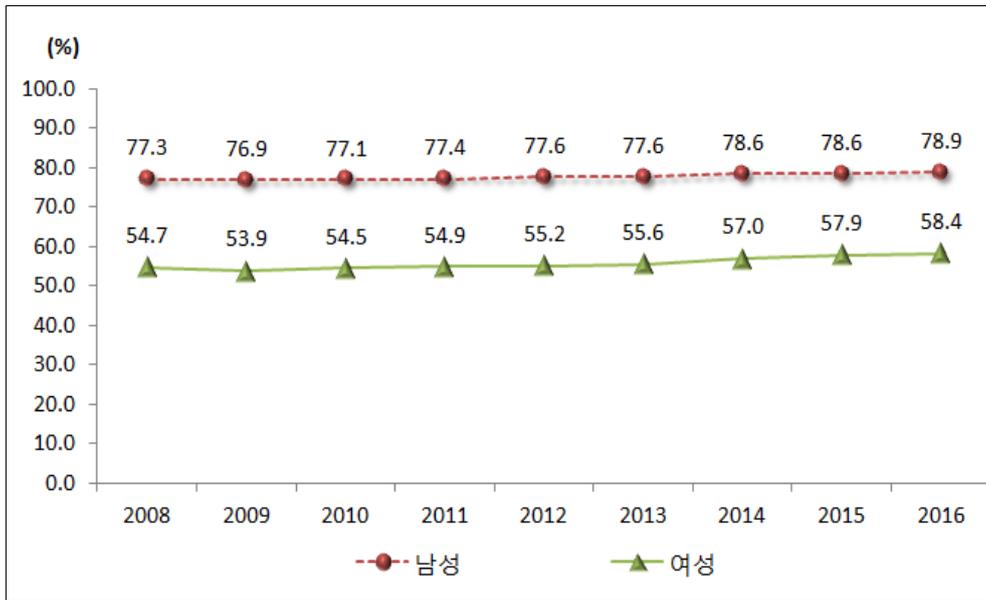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2009년 66.0에서 2015년 71.5, 2016년 72.4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에도 8개 분야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경제활동 분야에 속하는 세부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직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61.5%에서 2009년 60.8%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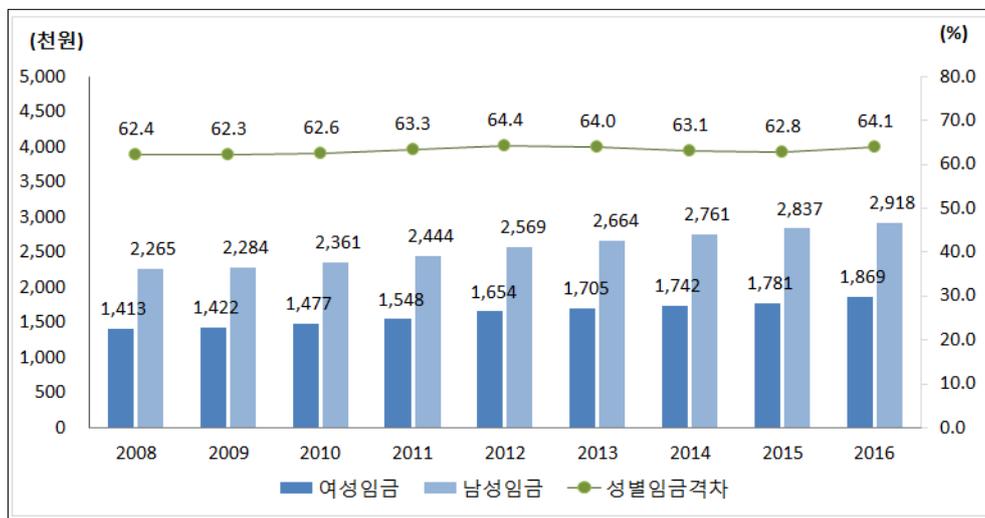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성별로 나누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를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77.3%에서 2012년 77.6%로 상승하였고, 2014년 78.6%에서 2016년

78.9%로 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8년 54.7%에서 2012년 55.2%로 상승하였고, 2014년 57.0%에서 2016년 58.4%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70.9에서 2015년 73.7, 2016년 74.0으로 상승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 여충액은 2008년 2,265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361천 원 그리고 2015년 2,837천 원, 2016년 2,918천 원이었다. 이어 여성의 월급여충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1,413천 원으로 남성임금의 62.4%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2010년에는 1,477천 원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781천 원, 1,869천 원으로 임금상승율이 남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¹¹⁾

이를 기반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2008년 62.4%에서 2009년 62.3%로 전년에 비해 미미하게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임금격차가 상당히 개선되어 201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64.4%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성별 임금격차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62.8%를 나타내었다. 2016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64.1%로 2015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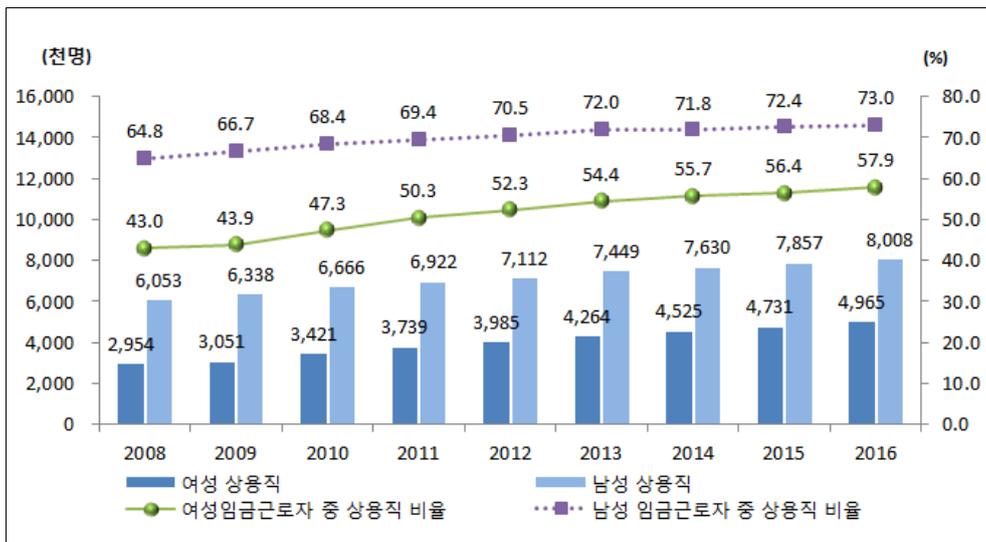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Ⅲ-8]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

11)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 이상 사업체, 월급여충액 기준임.

경제활동 분야의 마지막 세부지표인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직 근로자 비율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8년 2,954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421천 명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731천 명, 4,965천 명이 되었다. 남성 상용직 근로자 또한 2008년 6,053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666천 명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857천 명과 8,008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2008년 43.0%에서 2010년 47.3%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6.4%, 57.9%로 상승하였다.¹²⁾ 즉,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2.5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7.9, 79.2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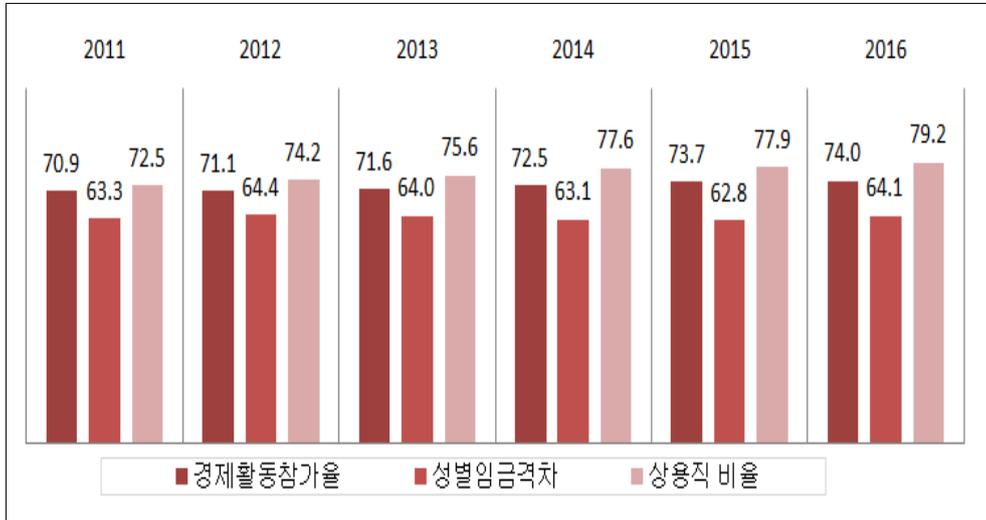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12)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frac{\text{여성 상용직}}{\text{전체 상용직}}$ 을 나타내고, 여성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frac{\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text{여성 임금근로자}}$ 를 나타냄.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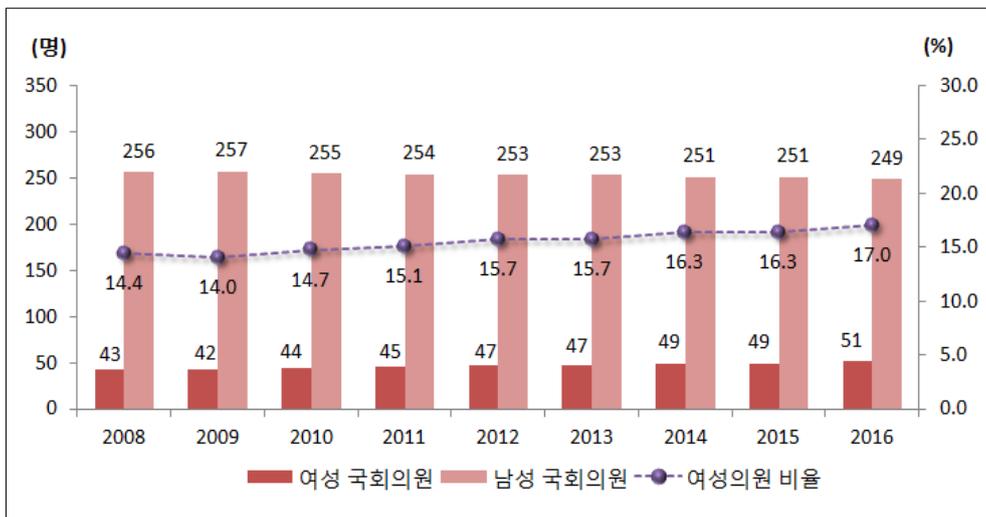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를 통해서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상용직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72.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79.2로 6.7p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제고시켰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지표 값도 2011년 70.9에서 2016년 74.0으로 3.1p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개선시켰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의 지표 값은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소폭 하락되기도 하였으나 2011년 63.3에서 2016년 64.1로 0.8p 상승되어, 이 또한 성평등 수준을 소폭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년의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18.9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3년 21.0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5.0, 27.0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국회의원 성비 지표의 경우, 여성 국회의

원 수는 2008년 이후부터 보궐 선거 혹은 전국구 의원 승계 등으로 인해 여성비율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여성 국회의원 수는 44명(14.7%)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7명(15.7%)으로 상승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9명(16.3%)으로 상승하였다. 2016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여 51명(17.0%)으로 해당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17.1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9와 19.8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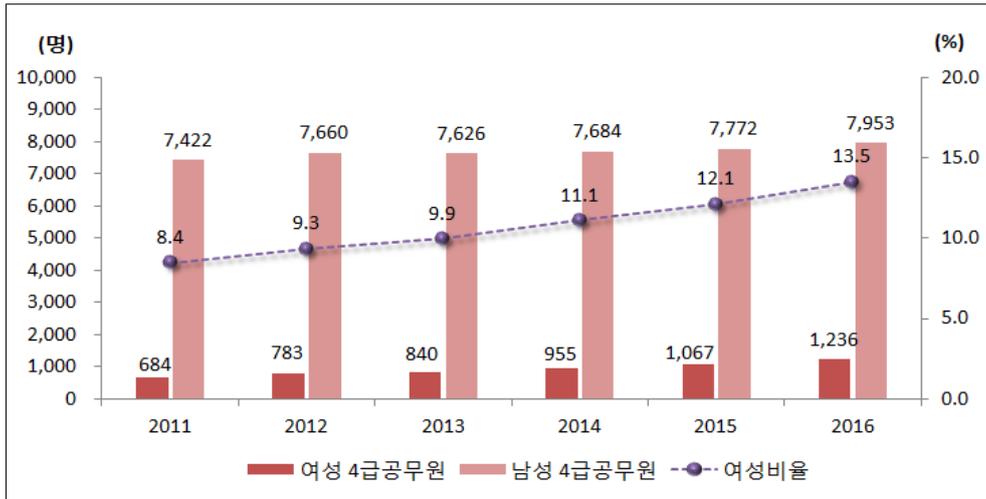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통계.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 지표인 4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1년 684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2년 783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 1,000명을 넘어 2015년과 2016년 각각 1,067명, 1,236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4급 이상 공무원 또한 2011년 7,422명, 2013년 7,626명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72명과 7,953명으로 증가하였다.

2011~2016년 동안의 남녀 4급 이상 공무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성은 동기간에 연평균 1.4% 상승하는데 비해, 여성은 연평균 12.6%로 급증(2011년 684명에서 2016년 1,23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3년 9.9% 그리고 2016년

은 13.5%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10.4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11.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14.0과 15.7이었다.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통계 인사통계」.

[그림 Ⅲ-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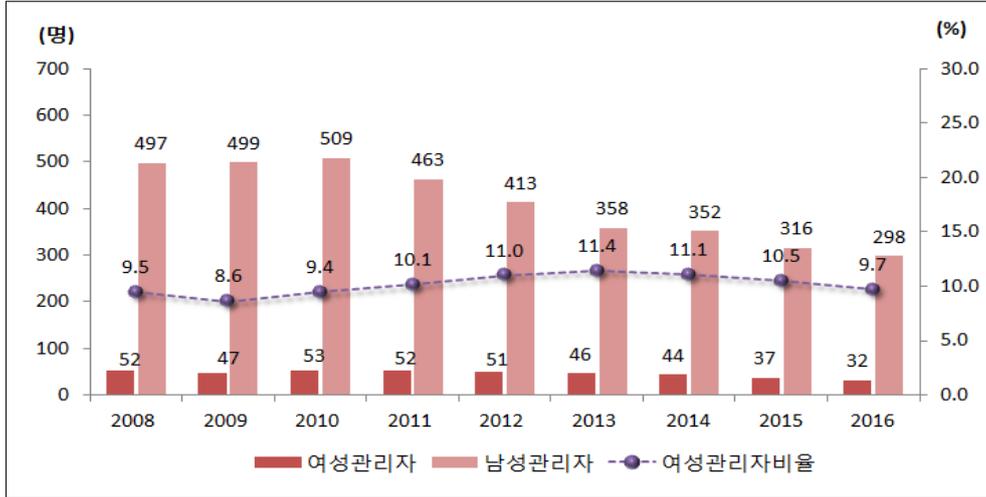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 관리직 수를 보면,¹³⁾ 2008년 549천 명에서 2014년 397천 명 그리고 2016년 33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관리자 변화 추이를 보면 여성관리자 수는 2008년 52천 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인 결과 2015년과 2016년 각각 37천 명, 32천 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 관리자는 2008년 497천 명에서 2010년 509천 명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316천 명, 298천 명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전체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9.5%에서 2013년 11.4%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는 소폭 하락하여 2016년에는 9.7% 수준에 그쳤다.¹⁴⁾ 그 결과 관리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15.8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13년 17.8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

13) 통계청 제6차 표준직업분류체계는 2007년부터 시행됨.

14) 전체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 = $\frac{\text{여성관리직 취업자}}{\text{전체 관리직 취업자}} \times 100$

하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16.0, 14.6을 기록하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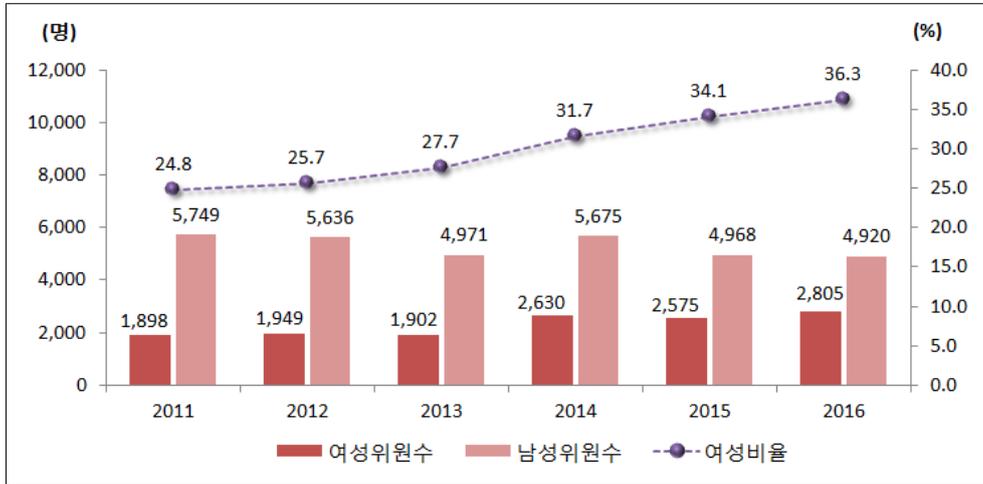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보면, 여성위원은 2011년 1,898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2,575명, 2,805명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위원은 2011년 5,749명에서 2013년 4,97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다가 2016년 4,92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정부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2011년 24.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36.3%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32.3에서 2013년 37.5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0.9와 56.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사결정 분야의 지표 값과 그 변화를 보면,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수는 급증하는 반면에 남성위원은 등락은 보이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이후 급증하였고, 지난 2011년에 비해 2016년에는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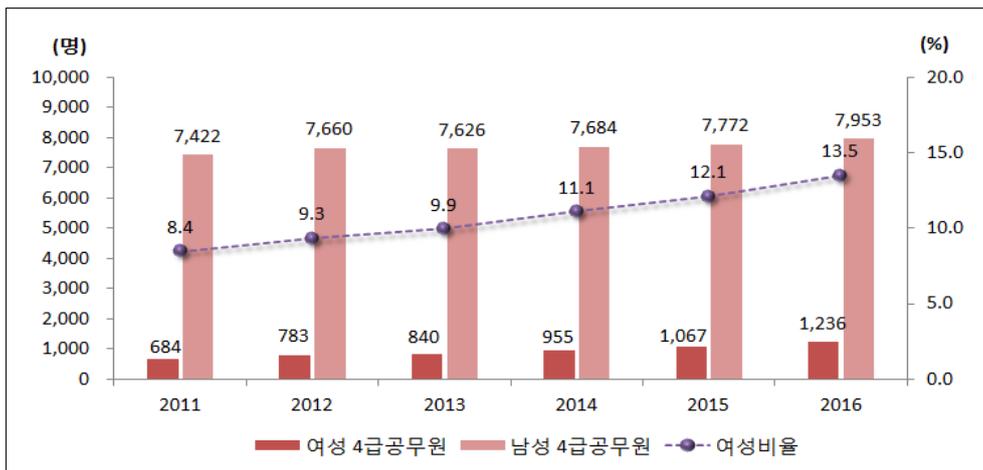
15) 관리자 성비는 $\frac{\text{여성관리자 취업자수}}{\text{남성관리자 취업자수}} \times \frac{\text{15세 이상 남성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 \times 100$ 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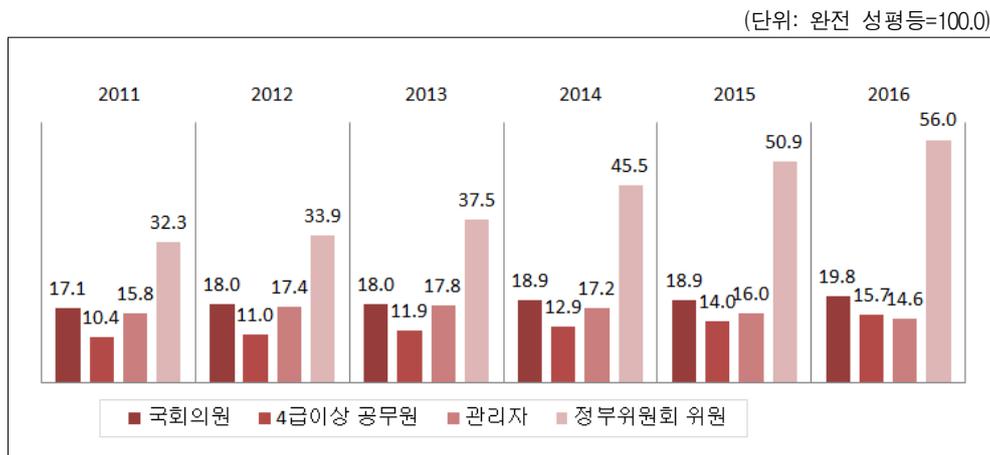
그리고 정부는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는 통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3년 9.9%, 2015년 12.1%로 상승하고 2016년은 전년대비 1.4%p 상승한 13.5%를 보인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15] 성별 4급 이상 공무원과 여성 변화 추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분야의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이를 구성하는 4개의 세부지표 값 중 관리자 성비 지표 값을 제외한 세 개의 지표값이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켰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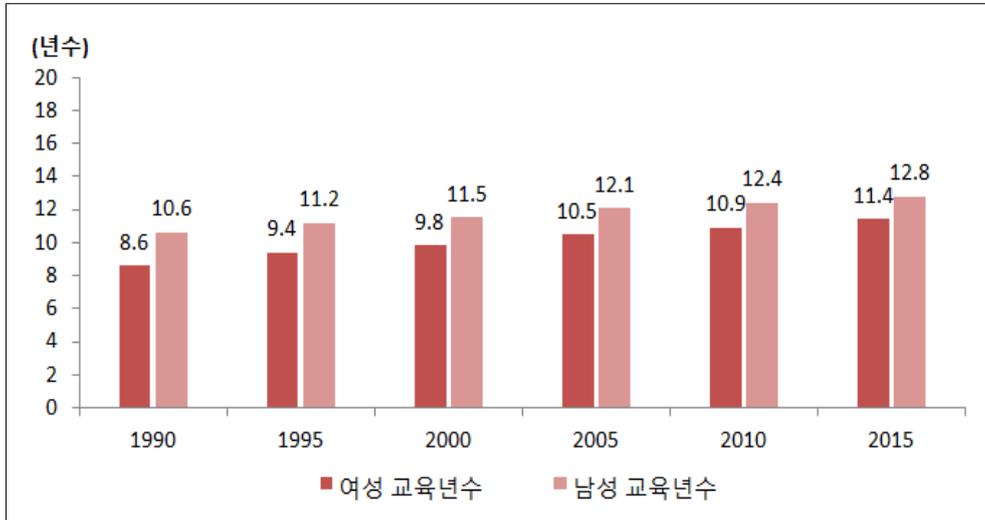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16]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6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91.5에서 2012년의 91.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2년부터 계속 상승하여 2015년 93.4, 2015년은 93.7을 기록하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먼저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여성은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그리고 2015년 11.4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그리고 2015년 12.8년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년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여성은 0.9년, 남성은 0.7년 증가하여,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증가기간이 남성보다 약간 더 길었다. 이로 인해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8.1에서 2014년 88.8 그리고 2016년 89.3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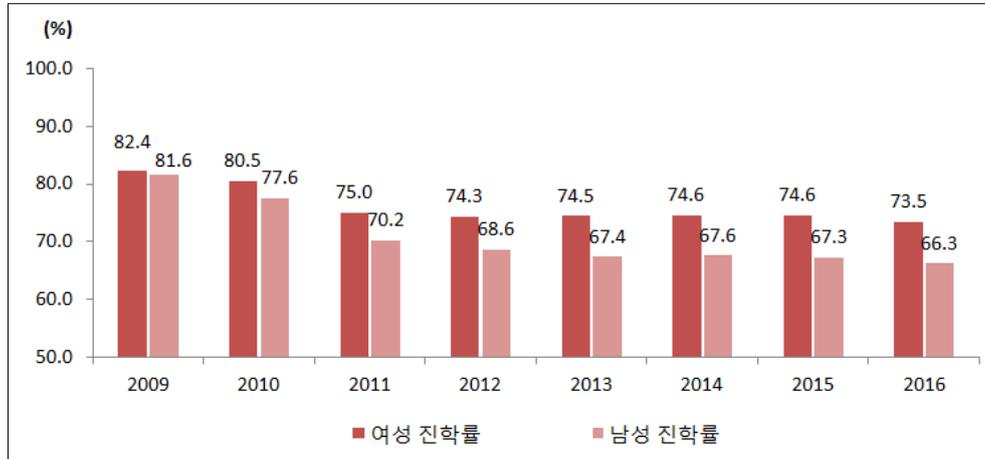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Ⅲ-17] 성별 평균 교육년수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해당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그림 Ⅲ-18]과 같이 최근 남녀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남성 진학률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진학률은 2009년 82.4%에서 2010년 80.5% 그리고 2012년 74.3%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74.6%와 73.5%로 나타났다. 남성 진학률은 또한 2009년 81.6%에서 2010년 77.6% 그리고 2013년 67.4%로 하락했으며, 2014년 67.6%로 소폭 반등하였다가 2016년 다시 66.3%로 하락하였다.

남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2016년 기간 동안 여성의 경우 연평균 1.8%가량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에 남성은 3.1%가량 하락하여,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평등수준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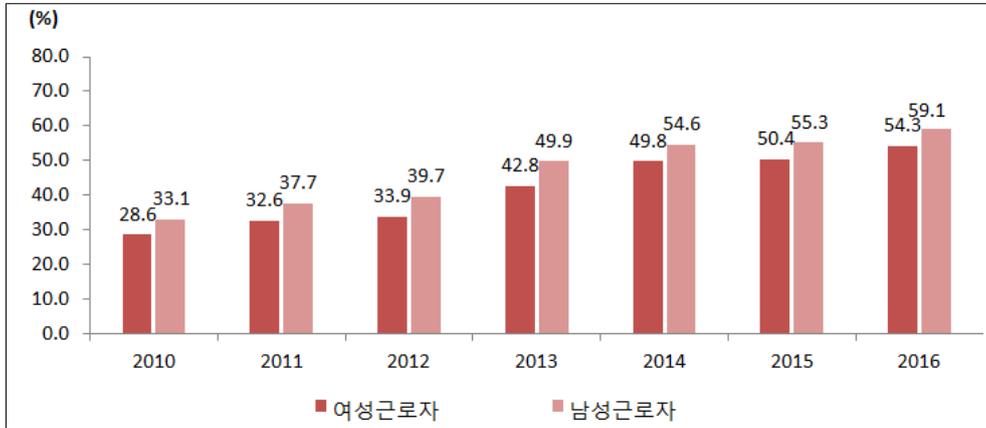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18]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지표를 보면 남성근로자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010년 33.1%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49.9% 그리고 2015년 55.3%, 2016년에는 59.1%였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도 2010년 28.6%, 2013년 42.8%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50.4%, 54.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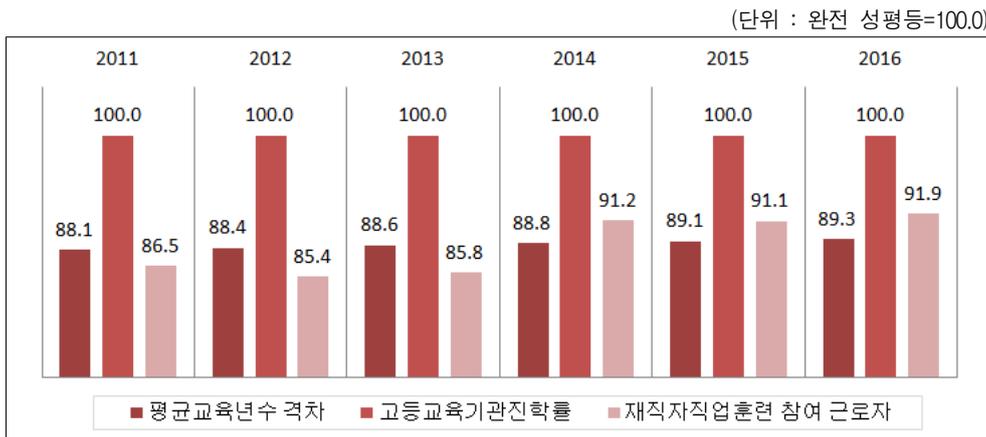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성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의 남녀격차는 큰 차이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6.5에서 2013년 85.8 그리고 2016년 91.9로 상승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분석.

[그림 Ⅲ-19]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이를 종합해보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지표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완전 성평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가 2011년 91.5에서 2016년 93.7로 상승함에 따라 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0]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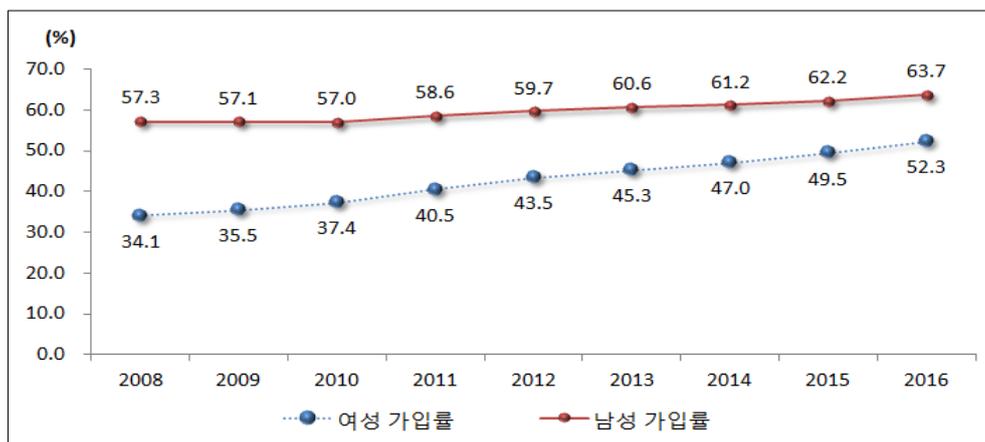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타났으나 동 분야의 지수 값은 2011년 68.2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였다. 즉, 2012년에는 69.8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1.6, 72.0으로 상승하였다.

복지 분야 세부지표 중에서 먼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 추이를 성별로 보면,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 중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08년 57.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57.0%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11년 58.6%, 2013년 60.6%, 2016년 63.7%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6.4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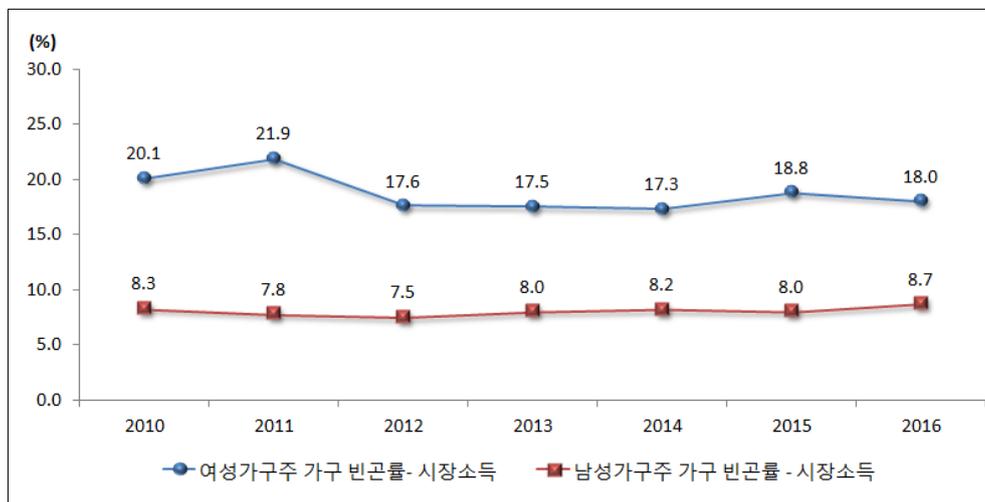
반대로 전체 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4.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37.4%, 2013년 45.3% 그리고 2016년 52.3%를 나타내었다. 즉, 2010~2016년 동안에 성별 가입률 현황을 보면 남성가입자 비율은 연평균 0.7% 상승한데 비해서 여성은 연평균 1.6%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가입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9.4와 82.0로 크게 높아졌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그림 III-21]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남녀가구주의 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¹⁶⁾은 2010년 20.1%에서 2011년 21.9%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2년 17.6%, 2014년 17.3%였고, 2015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18.8%를 나타낸 후 다시 하락하여 2016년에는 18.0%를 기록하였다. 한편,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2010년 8.3%에서 2012년 7.5%로 하락한 이후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8.2%, 8.0%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에는 8.7%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 비빈곤 가구주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4.8, 2013년 89.7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88.3, 89.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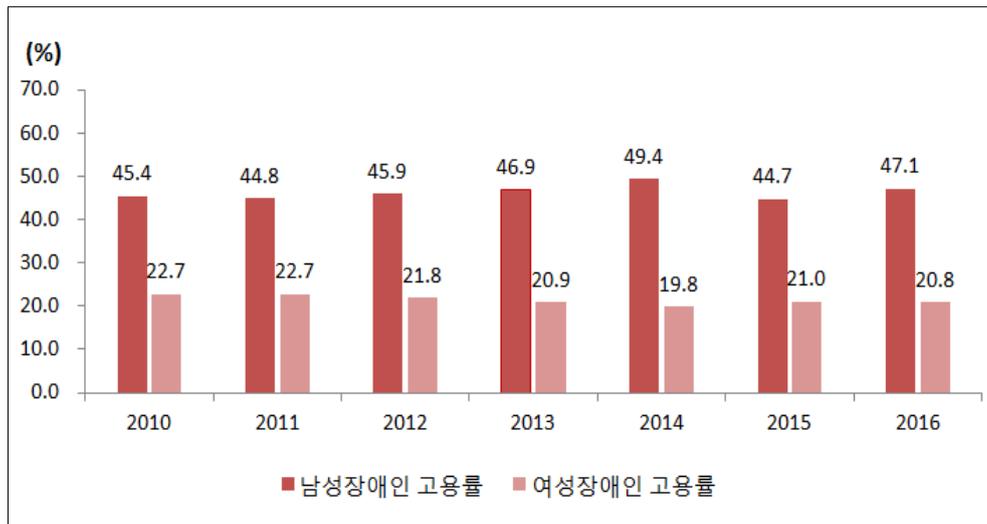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Ⅲ-22]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변화 추이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22.7%에서 2012년 21.8%, 2014년 19.8%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한 뒤에, 2015년 21.0%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20.8%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45.4%에서 2012년 45.9%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4년 49.4%로 지속

16) 본 연구에서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그리고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을 의미함. 즉, 가구원을 고려하여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을 의미함(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48).

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고용률이 44.7%로 전년대비 4.7%p 하락한 후 2016년에는 47.1%로 다소 높아졌다. 이러한 성별 장애인 고용률의 추이 변화의 결과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비교적 많은 증감을 거듭하였다. 2011년 50.7에서 2013년 44.6, 2014년 40.1 등으로 급감하였고, 2015년에는 47.0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44.2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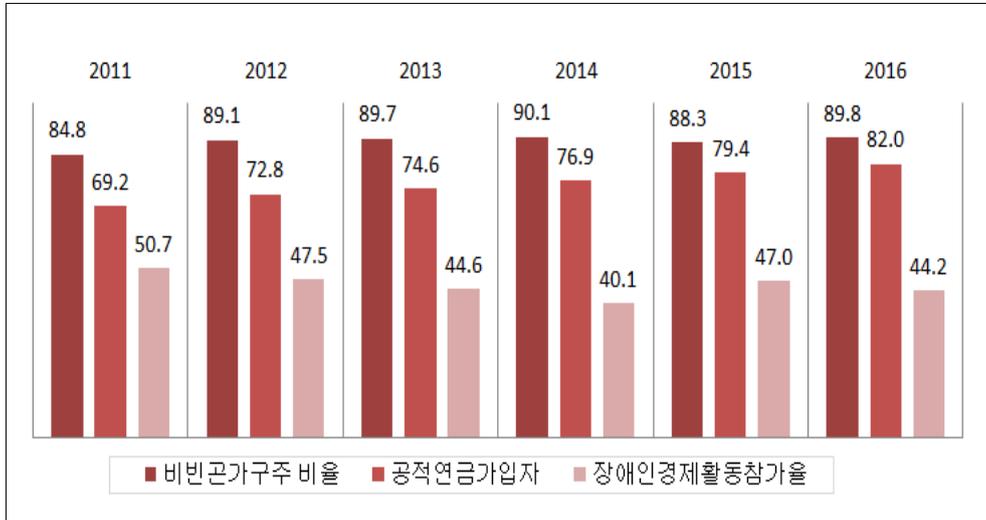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그림 III-23]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지금까지 분석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현황을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2015년 79.4 그리고 2016년에는 82.0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빈곤 가구주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4.8에서 2013년 89.7, 2014년 90.1로 상승한 이후, 2015년에는 88.3으로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는 89.8로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 40.1로 급감한 뒤, 2015년에 47.0으로 다소 상승하였다가 다시 2016년에는 44.2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지표 값의 변동으로 인해서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72.0으로 2015년(71.6)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4]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97.0을 기록하여,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먼저 건강 관련 삶의 질(EQ-5D¹⁷⁾)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0년 0.931이었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12년에는 0.934로 상승했으나 2013년 0.929로 소폭 하락했고 이후 다시 반등해 2016년 0.946을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2010년 0.966을 보인 후, 2011년 0.962로 소폭 하락하였고,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962, 0.96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6.9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96.9, 97.0이었다.

17)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함.

〈표 III-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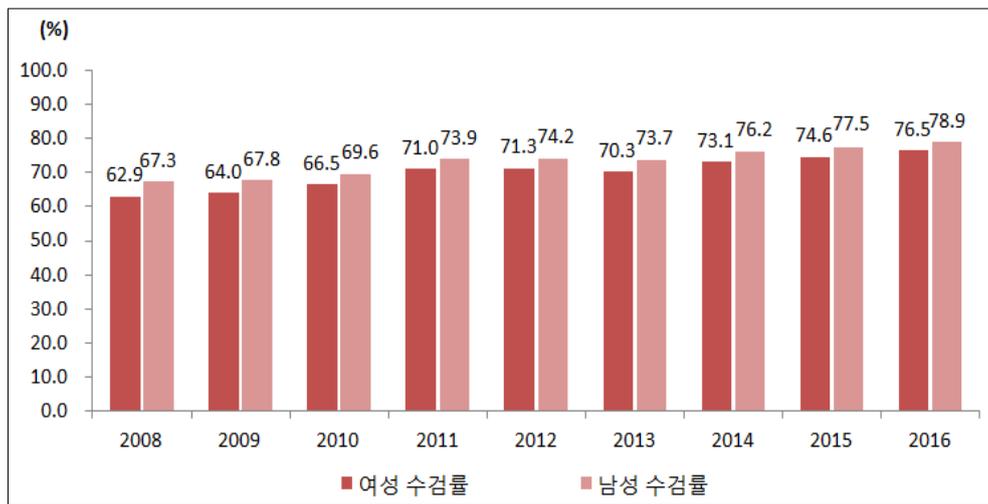
(단위: 점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0.948	0.947	0.948	0.945	0.947	0.947
여성	0.931	0.932	0.934	0.929	0.934	0.934
남성	0.966	0.962	0.963	0.962	0.963	0.963

주: 2015년 남성과 여성의 EQ-5D 지수는 추정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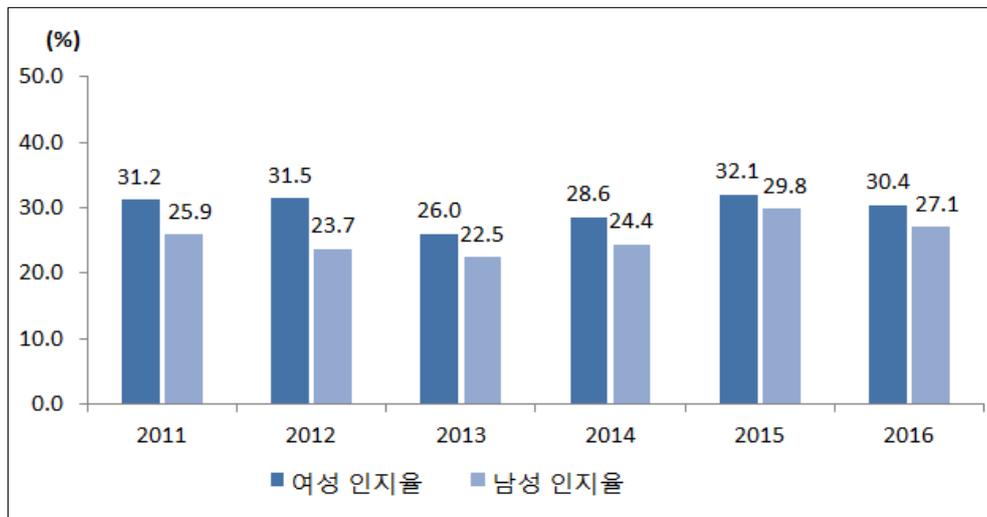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 인원 비율은 2011년 71.0%이었고, 그 후 다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71.3%, 70.3%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4년 73.1% 이후에는 소폭 상승하여 2016년 76.5%를 나타내었다. 이어 남성을 살펴보면 2011년 73.9%에서 2012년 74.2%로 소폭 상승하였고, 그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73.7%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5%, 78.9%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 수검률의 남녀격차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1년 9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97.0을 기록하였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보건 분야의 마지막 세부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¹⁸⁾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여성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여성비율이 2011~2012년에는 약 31% 정도였으나, 그 이후 하락하여 2013년 26.0%이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다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에는 32.1%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30.4%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남성비율은 여성보다 전체적으로 낮았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남성비율은 2011년 25.9%에서 2013년 22.5%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 상승하여 2015년에는 29.8%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2016년 소폭 하락하여 27.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92.8에서 2012년 89.8로 3.0p 하락하였으나,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6.7과 95.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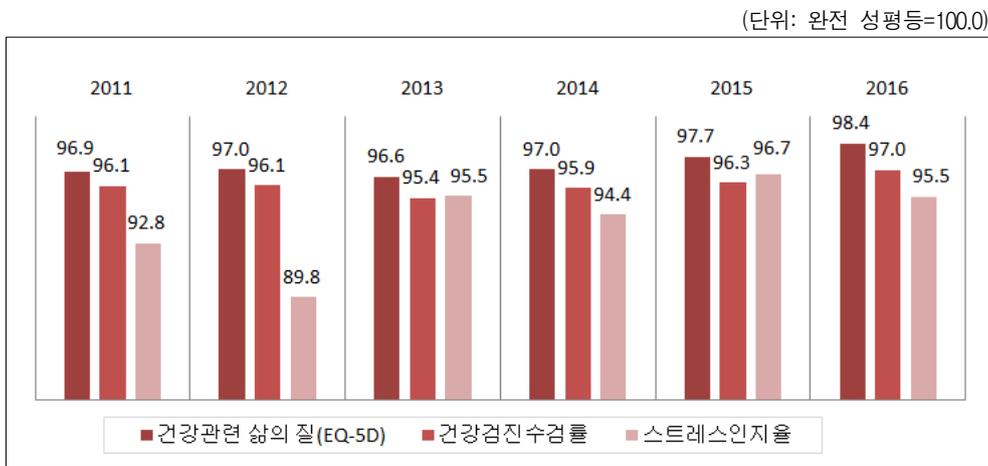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 18)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19세 이상 표준화된 통계임.
- 19)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는 기존 ‘건강관련 삶의 질’와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 값이 성평등 수준에 해당하는 ‘100’에 접근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지표임.

지금까지 보건 분야의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에 95.3에서 2012년 94.3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16년에는 97.0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분야 세부지표들의 지표 값들이 대부분 80.0~90.0 이상이고,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지표 값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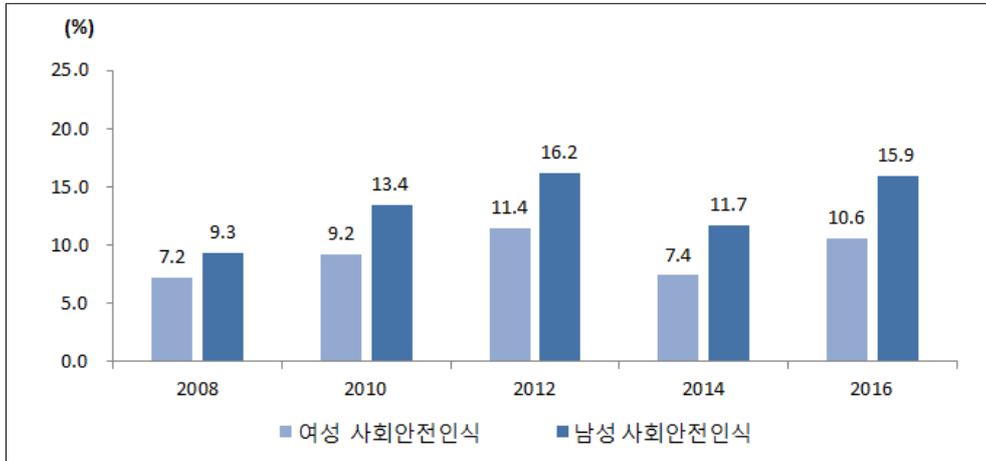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27]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64.2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6년에는 다시 64.1을 나타내었다. 지수 값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64.2에서 2012년 65.4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60.8로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5.1과 55.4로 급락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64.1로 상승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안전하다고 인식한 여성비율이 2012년 11.4%였으나 2014년에는 7.4%로 급감하였고, 그 이후 2015년에는 9.0%으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10.6%로 다시 10%를 넘어섰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2년 안전하다고 인식한 남성비율이 16.2%에서 2014년 11.7%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15.9%로 다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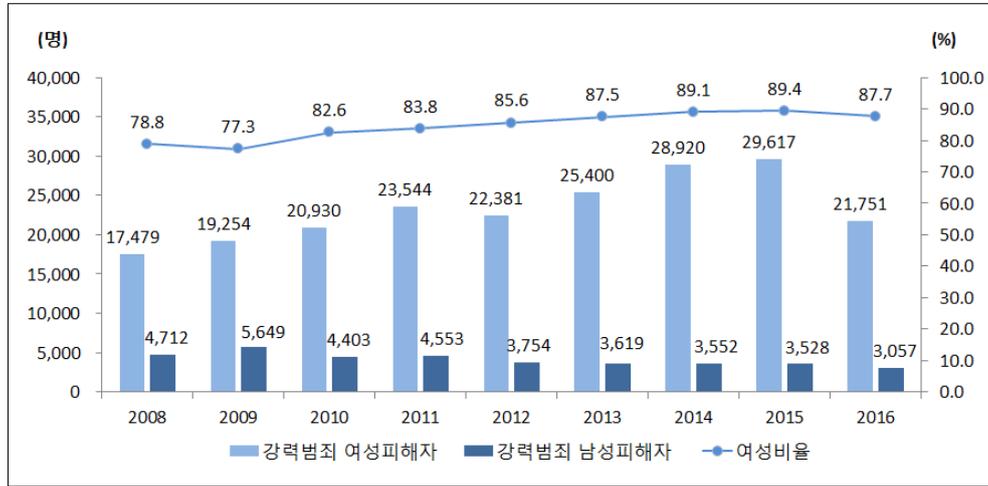
주 : 13세 이상 인구대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Ⅲ-28]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강력범죄 건수는 2010년 20,930건에서 2011년 23,544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22,381건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 범죄 피해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4년 28,920건, 2015년 29,617건으로 분석기간 중 가장 많은 여성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그 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여 21,751건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피해자는 여성피해자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403건, 4,553건이었다. 2011년 이후 피해자가 남성인 강력범죄 피해건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528건, 2016년 3,075건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82.6%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2년 85.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9.1%, 89.4%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87.7%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6년 강력범죄(흉악범) 건수를 보면 여성피해자가 21,751건으로 전년에 비해 7,866건이 감소한 반면에, 남성 피해자는 471건이 감소하여 2016년에 3,057건을 기록하였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여성피해자는 전년대비 26.6% 하락한 것이며, 남성은 전년대비 13.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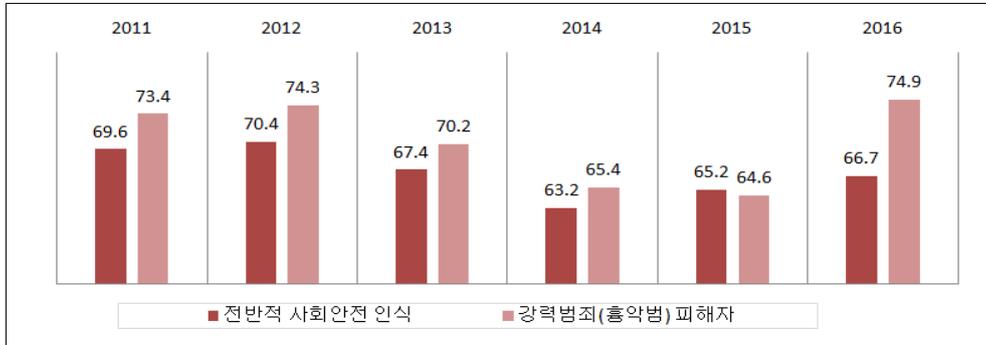
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피해자의 합임.
 자료: 대검찰청(2008~2015), 「범죄분석」, 경찰청(2016), 「범죄분석」 원자료 분석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앞에서 분석한 안전 분야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먼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인식 성비의 지표 값은 [그림 III-30]에서와 같이 2011년 69.6에서 2012년 70.4로 상승하였다. 2013년과 2014년은 소폭 하락하여 각각 67.4와 63.2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65.2와 66.7을 기록하였다.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를 보면 2011년 73.4에서 2012년 74.3으로 상승을 나타낸 후 2015년까지 하락하여 2015년 64.6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74.9로 2015년에 비해 10.3p 상승하였다. 이상과 같이 안전 분야의 경우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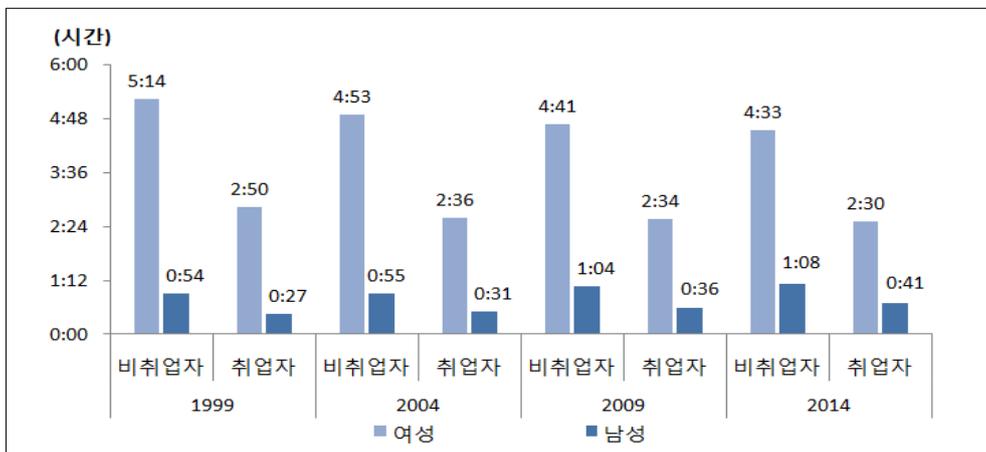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0]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다. 성평등 인식·문화 영역

1) 가족 분야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분야이다. 동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5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62.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70.0과 78.0으로 상승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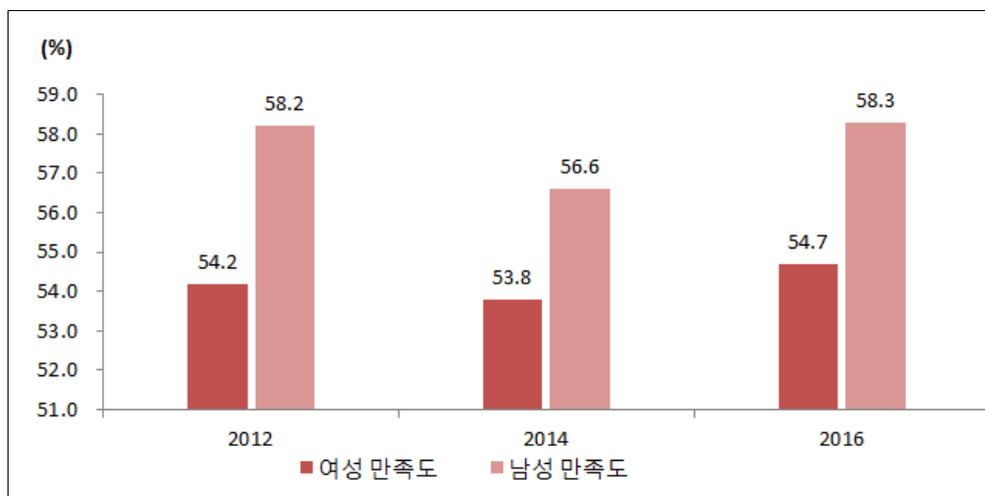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Ⅲ-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20)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2004년, 2009년, 2014년 등 5년 주기로 생산됨에 따라 2016년 통계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를 활용하여 산정한 추정값임.

가족 분야 세부 지표인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은 적으나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 취업자는, 2004년 31분, 2009년 36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41분, 42분으로 점진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으며, 남성 비취업자의 경우 2004년에는 55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시간 8분, 1시간 9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04년 2시간 36분에서 2009년은 2시간 34분으로 2분 정도 감소하였고, 2014년과 2016년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2시간 30분, 2시간 28분으로 소폭 감소했다. 여성 비취업자는 2004년 4시간 53분, 2009년 4시간 41분 그리고 2014년과 2016년은 각각 4시간 33분, 4시간 29분으로 취업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하는 폭이 약간 더 크다. 즉, 여성은 절대적인 시간이 남성보다 많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가사노동의 변화 추이로 인해서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절대적 시간의 남녀 차이로 인해 성불평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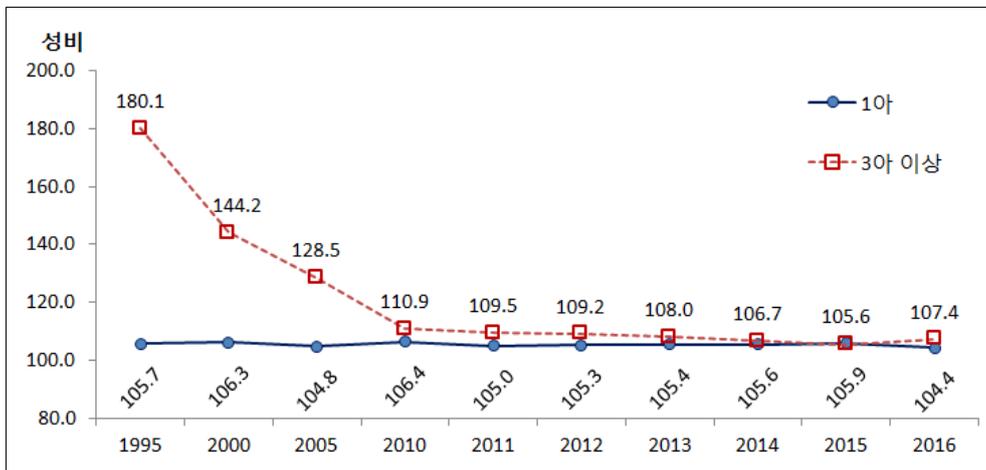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III-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또 다른 지표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매우 만족,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1년 53.4%, 2012년 54.2% 그리고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3.8%, 54.7%였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7.2%에서 2012년 58.2% 그리고 그 이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56.6%와 58.3%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3.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 95.1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93.8로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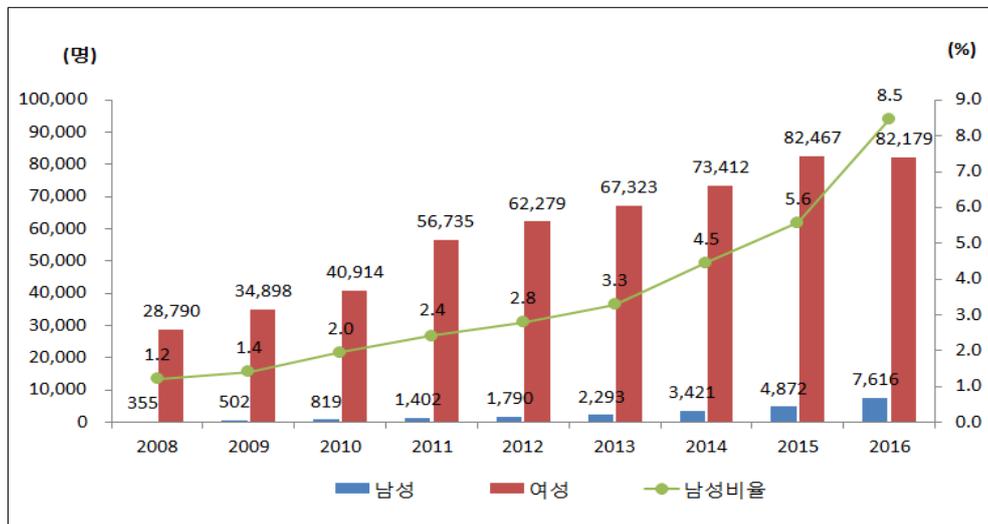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III-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변화 추이

또 다른 가족 분야 세부지표인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1994년에 자연출생 성비인 106.0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1994년 이후 첫째 아 출생성비는 104.5~106.5 수준에서 변동했다. 특히 2002년에 106.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104.5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5.6과 105.9로 상승하여 자연출생 성비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그림 III-33]에서와 같이 1994년에 205.4로 최근 20년 이내에 최고치를 보인 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가 급감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40대

의 수치가 유지되었으나 이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어 2007년 115.7로 처음으로 110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6.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여 2010년 110.9, 2011년 109.5, 2013년 108.0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 추이는 2015년과 2016년까지 이어져 셋째 아출생성비가 각각 105.6, 107.6로 자연출생성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6.8 그리고 2014년에 99.3이었고, 2016년에는 98.7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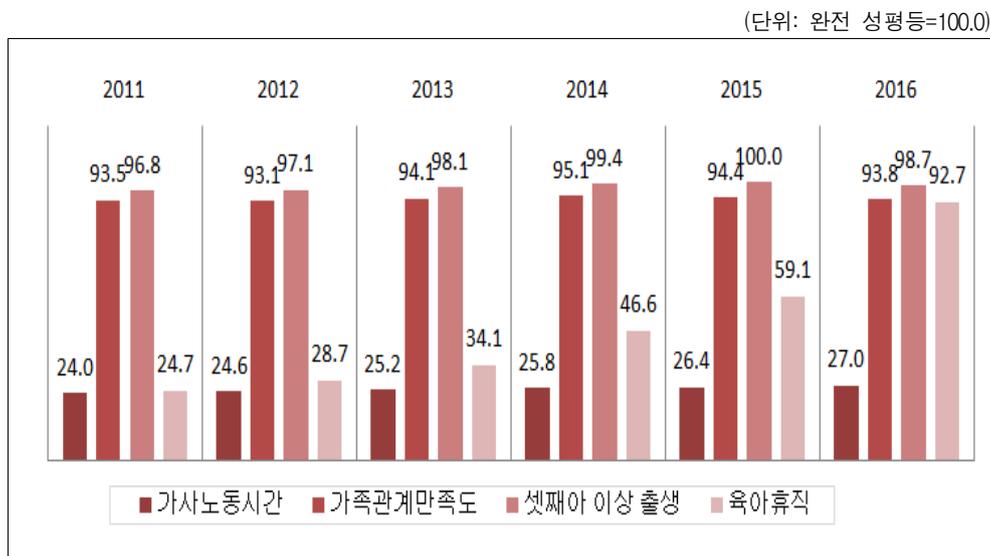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마지막 세부지표인 육아휴직을 보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5년 10,492명에서 급증하여 2011년 56,735명 그리고 2013년 67,323명, 2016년에는 82,179명에 달했다.²¹⁾ 2016년 출산전후 휴가자 수가 89,834명인 것을 염두에 두면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 근로자 수가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208명에서 2010년 819명 그리고 2013년 2,293명, 2016년 7,61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여전히

21) 육아휴직자 지표는 2014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임.

히 이용실적이 미미하였다. 즉,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휴직자 비율을 보면 2005년 1.9%에서 2013년 3.3% 그리고 2016년 8.5%로 급증하였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이전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음을 것으로 나타났다.²²⁾ 그 결과 육아휴직자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24.7에서 2013년 34.1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9.1, 92.7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5]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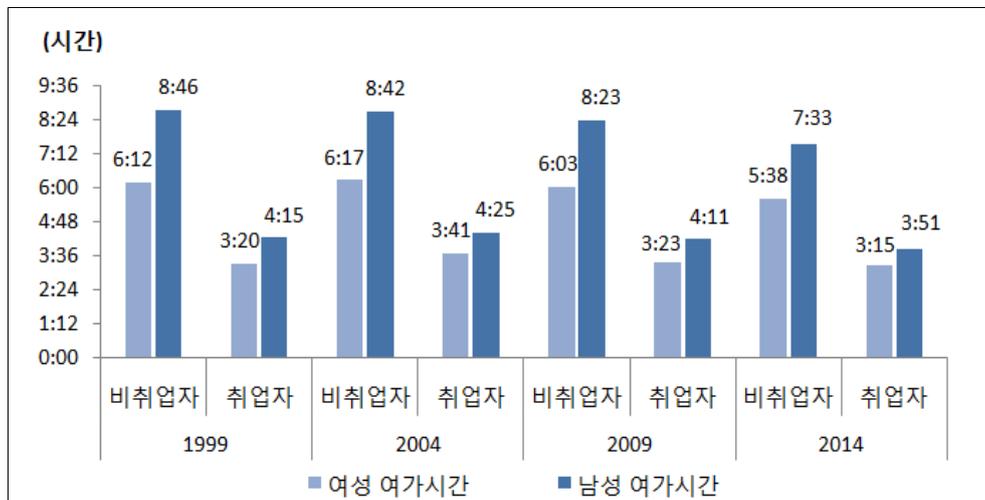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세부지표인 가사노동 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그리고 육아휴직자 성비들의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인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도 지표 값이 2016년에 93.8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93.5에서 2014년 95.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 남성 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의 1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완전평등상태로 측정함. 남녀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를 모니터링하면서 남성 휴직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준을 상향조정함.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1년 84.1에서 2012년 84.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7.1과 87.3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III-37]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여가시간이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평균 4시간 25분, 2014년 3시간 51분 그리고 2016년 3시간 43분, 남성 비취업자는 2004년 8시간 42분, 2014년 7시간 33분, 2016년 7시간 13분으로 여가시간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3시간 41분, 2014년 3시간 15분, 2016년 3시간 11분이었고, 여성 비취업자는 2004년 6시간 17분, 2014년 5시간 38분, 2016년 5시간 28분으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취업여부와 성별에 관계없이 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취업자의 두 배 이상 길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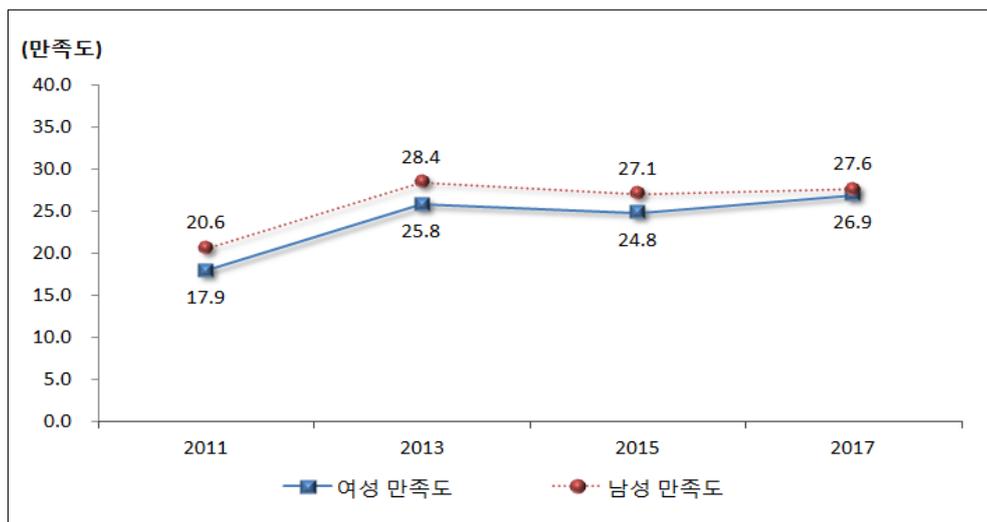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23) 여가시간을 조사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2004년, 2009년, 2014년 등 5년 주기로 생산됨에 따라 2016년 통계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를 활용하여 산정한 추정 값임.

이에 따라 여가시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76.7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78.6, 79.2로 높아졌다. 즉, 남녀 여가시간의 성평등 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보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여가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2011년 17.9%에서 2013년 25.8%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24.8%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6.9%로 상승하였다.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또한 여성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여가활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20.6%에서 2013년 28.4%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27.1%로 하락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7.6%로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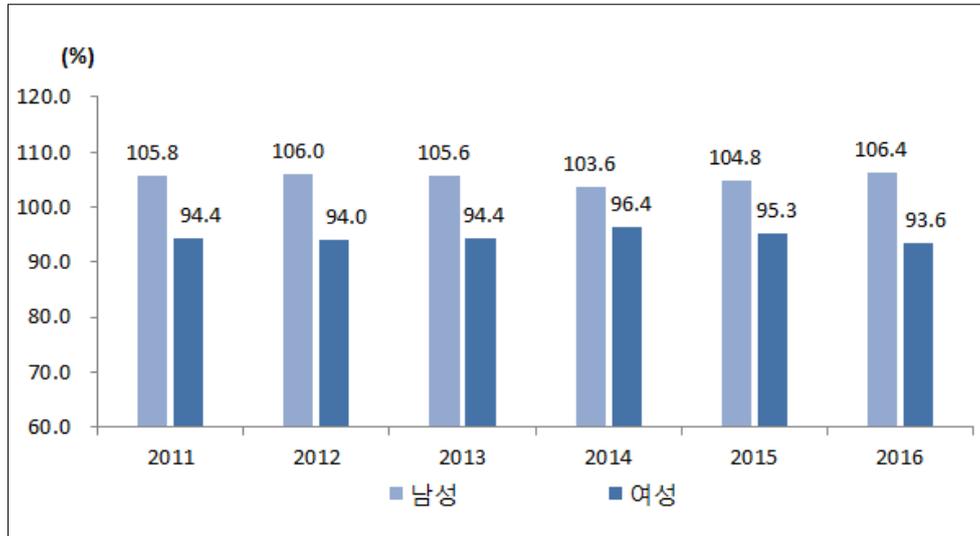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Ⅲ-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인 성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1년 105.8%에서 2012년 106.0%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2014년에는 103.6%로 하락하였다. 2015년에는 다시 104.8%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106.4%로 상승하였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1년 94.4%에서 2012년 94.0%로 하락하고, 2014년 96.4%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95.3%

와 93.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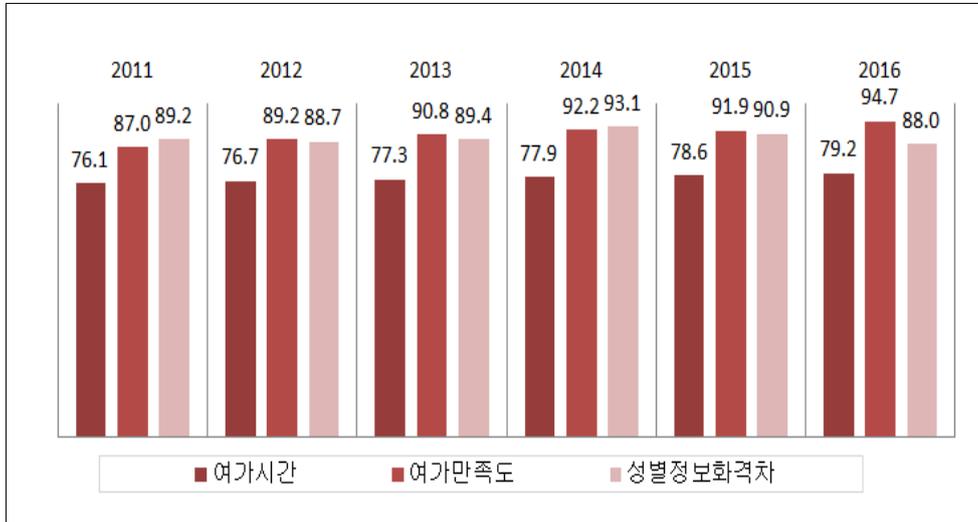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앞에서 살펴본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7.0에서 2016년 94.7로 7.7p 상승하였고, 여가시간 성비 지표 값도 동일한 기간에 76.1에서 79.2로 3.1p만큼 상승하였다. 반면 성별 정보화 격차는 89.2에서 88.0으로 1.2p 하락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또한 성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4) 정보화 수준은 정보격차지수로서 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일반국민 대비 남성 혹은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9]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IV

국가성평등지표 개편 연구

- | | |
|-------------------------|----|
| 1. 성평등지수의 분야 가중치 설정 | 67 |
| 2. 분야별 구성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 70 |

1. 성평등지수의 분야 가중치 설정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2009년에 개발되었고, 그 이후 기간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평등 지표체계와 지표의 변화가 소폭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최근 성평등과 관련된 사회·문화·경제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별 가중치, 하위지표 그리고 최종 지표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재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다른 복합지수와 마찬가지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영역에 성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지수는 3개의 정책영역에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3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과 연계되며, 8개 분야는 2009년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되어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8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로, 성평등지수를 8개 분야별로 지표를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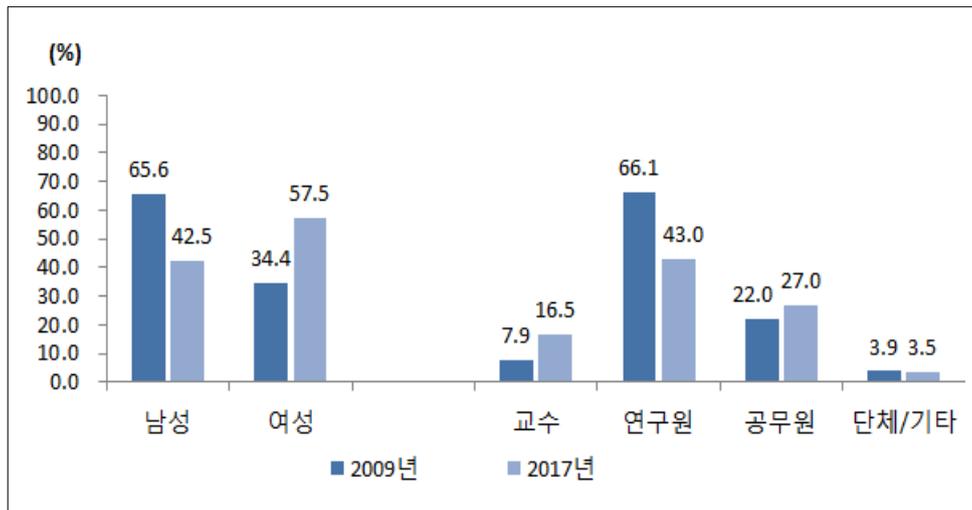
첫 번째로는 국가성평등 정책의 포괄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성평등정책이 가족, 보건,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를 포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는 국가통계의 활용문제로 인해 제한된 분야의 성평등을 측정하고 있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양한 분야의 남녀 삶을 측정하고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성평등정책이 특정 부처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범정부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국가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점검해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의 가중평균을 통해 종합지수를 산정한다. 분야별 가중치 조사는 2009년 처음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할 때에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결정되었다. 2017년 분야별 가중치 결정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09년보다 적은 127명이었다. 조사는 웹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였고 조사내용은 성평등지수 8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조사는 성평등지수 8대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27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가 2017년의 경우 각각 57.5%와 42.5%이었다. 응답자 중 연구원이 전체의 43.0%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27.0%, 교수 16.5%,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여성 응답 비율은 상승되고, 연구원의 응답 비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교수, 공무원 등의 응답이 높아진 특징을 보인다.



[그림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응답자 분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에 필요한 8대 분야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분야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1970년대 초 사티(Saaty)에 의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 목표나 평가 기준이 다수일 때 개별항목의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는 계층적 분석법에 의한 국가성평등지표의 분야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8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IV-1> 참고).

〈표 Ⅳ-1〉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성평등 정책 부문	← 동일 →												성평등 정책 부문				
	A가 중요						B가 중요										
	⑨	·	⑦	·	⑤	·	③	·	①	·	③	·	⑤	·	⑦	·	⑨
A	⑨	·	⑦	·	√	·	③	·	①	·	③	·	⑤	·	⑦	·	⑨
척도	중요도 정도																
①	두 개의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함(equal)																
③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함(weak)																
⑤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함(strong)																
⑦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very strong)																
⑨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absol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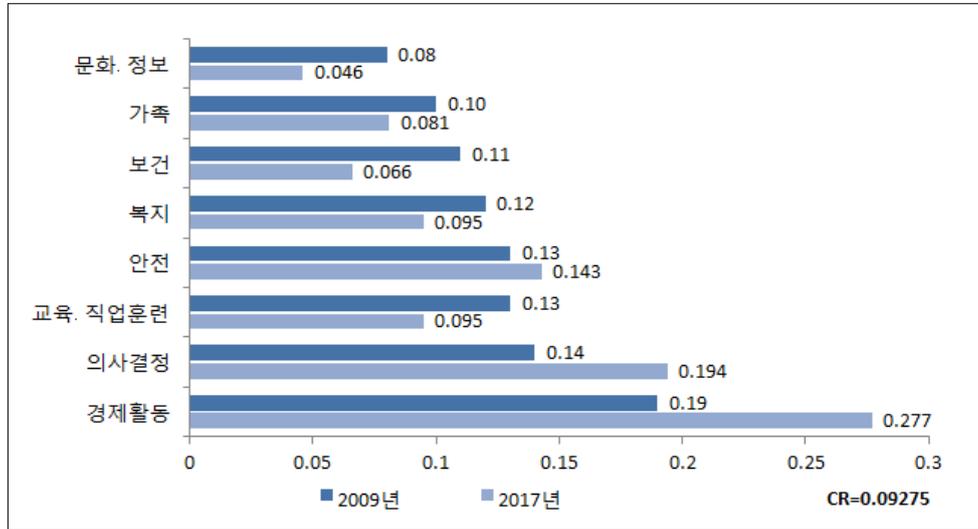
※ 짝수 척도(②, ④, ⑥, ⑧)는 근접한 홀수들의 중간임.

분석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의 기하평균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더불어 응답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분야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가중치가 0.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0.194), 안전(0.1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직업훈련(0.095), 복지(0.095), 가족(0.081), 보건(0.066), 문화·정보(0.046)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분야의 가중치는 더 높아졌고, 문화·정보, 가족, 보건, 복지,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성평등의 관심이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에 집중된 현상이 반영된 것이며, 안전 분야 또한 지난 몇 년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이 방법론은 응답자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분야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은 9.3%를 보여, 응답의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5) CR값은 10% 이하일 때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짐.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장 및 지수개발』, 인용.



[그림 IV-2] 분야별 가중치 산출 결과(2009년, 2017년)

2. 분야별 구성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성평등 지표 구성은 기존 분야별 지표 구성을 기반으로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보완하였고, 연구자, 교수,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분야별 성평등지수에 활용될 지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표별 평가는 각 분야를 세부 분야로 구분한 후 세부 분야별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적절성은 해당 지표가 세부 분야를 측정하는데 얼마나 적합한가를 의미하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우선순위 혹은 중요도는 해당 지표가 성평등을 측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순위로 표시하는 것이다. 최대 3순위²⁶⁾까지 표기하게 하여 순위로 포함된 비율²⁷⁾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야별 지표는 세부 지표별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은 분야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이다.

26) 세부분야의 지표가 5개 이상인 경우 3순위까지 표기하며, 3~4개 이하일 경우 2순위까지 2개 이하일 경우 1순위까지만 제시하도록 함.

27) 최대 3순위까지 포함확률을 최소 0에서 최대 1값으로 제시함.

가.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측정은 노동시장 참여, 소득수준, 고용안전 및 일·가정 양립으로 세분화 하여 각 세부 분야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1) 노동시장 참여

노동시장 참여는 총 8개의 지표를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1차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률(15~64세)의 적절성이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4.33점, 최저임금 미만 고용비율 4.06점 등의 순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NEET 비율²⁸⁾,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은 다른 성평등지표에 비해서 적절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이 0.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은 고용률(15~64세)과 최저임금 미만 고용비율이 각각 0.75%, 0.62%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EET 비율,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65세이상), 구직단념자 등은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IV-2〉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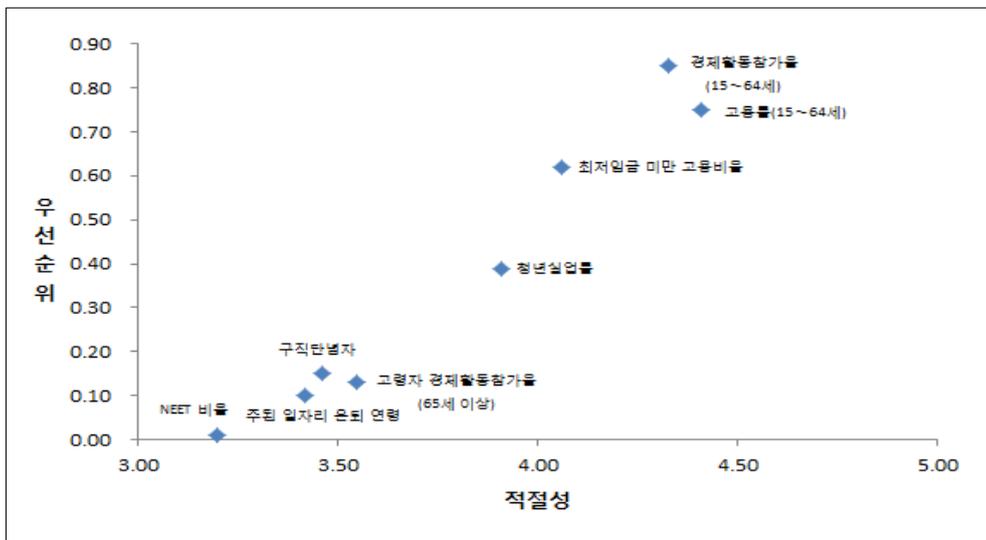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4.33	0.85
고용률(15~64세)	4.41	0.75
최저임금 미만 고용비율	4.06	0.62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3.42	0.10
NEET 비율	3.20	0.01
구직단념자	3.46	0.15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65세 이상)	3.55	0.13
청년실업률	3.91	0.39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28)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직업이 없으면서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함. 취업 의사 없이 부모에게 기대 사는 청년을 말하며, 최근엔 실업자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는 인구,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시장참여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고용 비율은 모두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각각 4.0점 이상, 62% 이상으로 관련 전문가에게서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 받았다. 이에 비해 NEET 비율,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구직단념자 등은 다른 성평등지표에 비해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에 노동시장 참여 분야의 산정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최저임금 미만 고용 비율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 고용형태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등과 같은 성별 고용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성평등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IV-3] 노동시장참여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4개의 지표를 연구자와 자문회의를 통해 사전 선정했고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임금성비(시간당 임금성비)와 성별 소득 격차 지표의 적절성이 각각 4.5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저임금근로자 4.04점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초임수준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절성을 보였다.

소득수준 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임금성비(시간당성비)가 0.87, 성별 소득 격차 0.76으로 상당히 높았고, 초임수준, 저임금근로자의 우선순위는 각각 0.17, 0.20로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소득수준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임금성비와 성별 소득 격차가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적합한 지표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 소득수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임금성비(시간당 임금성비)	4.54	0.87
초임수준	3.76	0.17
저임금근로자	4.04	0.20
성별 소득격차	4.54	0.76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3)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세부지표는 6개의 지표를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1차 선정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얻은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표 IV-4>와 같다. 적절성은 상용근로자가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 4.20, 성별 근속년수 지표 4.19 그리고 육아휴직자 4.06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고용안정성 인식(3.74점), 전반적 근로여건의 만족도(3.53점) 등은 다른 성평등지표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분야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근로자 0.69, 상용근로자 0.67 그리고 성별 근속년수 0.55로 상당히 높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들 지표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 근로여건의 만족도 0.20, 고용안정성 인식 0.30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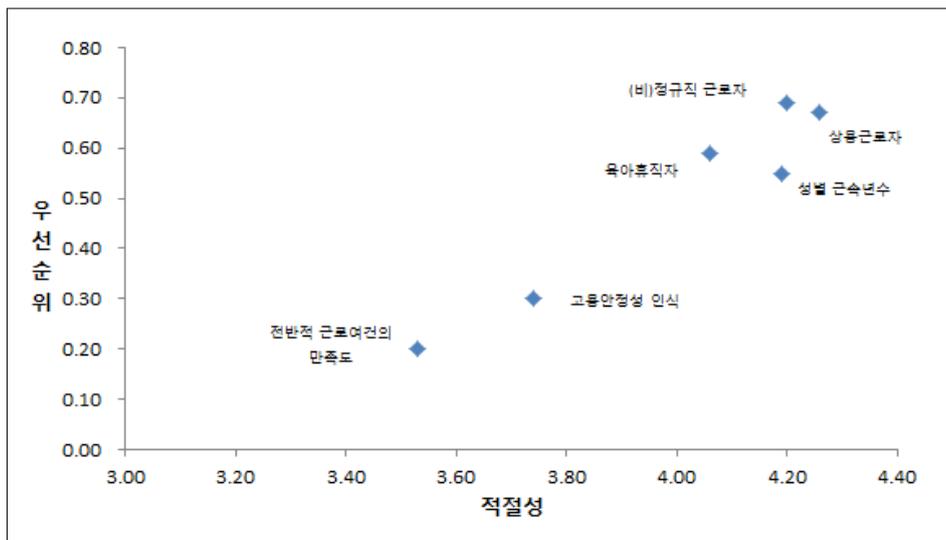
고용안정·일·가정양립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그림 IV-4]에서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지표로 가장 적합한 지표로 고려했고 성별 근속년수와 육아휴직자 지표 또한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V-4〉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비)정규직 근로자	4.20	0.69
상용근로자	4.26	0.67
성별 근속년수	4.19	0.55
고용안정성 인식	3.74	0.30
전반적 근로여건의 만족도	3.53	0.20
육아휴직자	4.06	0.59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그림 IV-4]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나.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는 정치참여, 행정참여, 민간참여로 세분화하여 각 세부분야별로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세부분야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참여

정치참여에 속하는 성평등지표의 적절성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국회의원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표의 적절성을 4.3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비율, 주요정당(여당, 제1야당) 보직자 비율이 각각 3.81점, 3.87점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치참여 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표 IV-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0.85로 매우 높았고 국회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비율, 주요정당(여당, 제1야당) 보직자 비율 등의 지표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게 평가하였다.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정치참여 분야의 지표로, 국회의원 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가장 적합한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표 IV-5> 정치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국회의원 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39	0.85
국회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비율	3.81	0.08
주요정당(여당, 제1야당) 보직자 비율	3.87	0.07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2) 행정참여

행정참여는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8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8개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고위공무원 비율, 정부(지자체)위원회 참여비율의 적절성이 각각 4.42점, 4.20점, 4.20점으로 전문가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정참여 분야의 우선순위는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정부(지자체)위원회 참여비율 지표의 우선순위는 차례로 0.82, 0.62로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고위공무원 비율,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비율,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장·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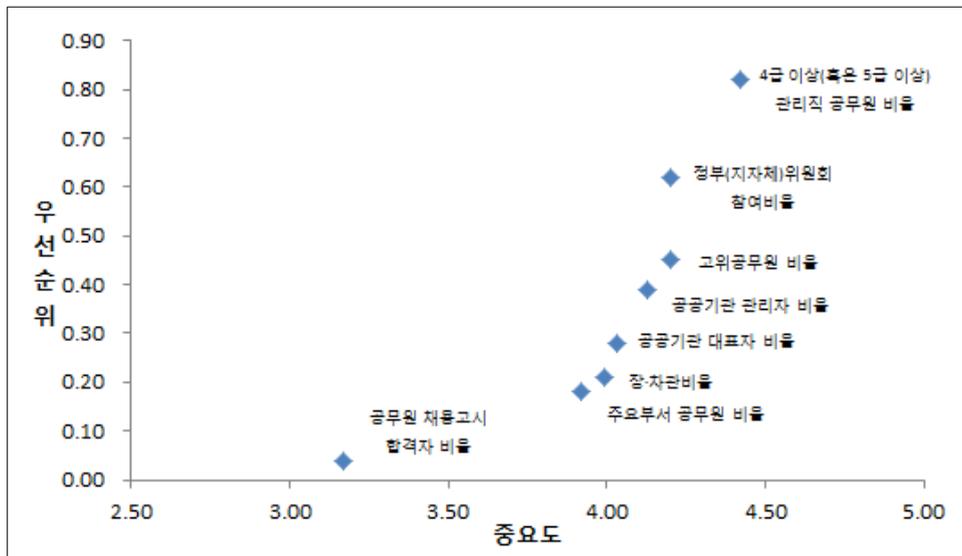
비율, 공공기관 관리자 비율 지표는 우선순위를 낮게 평가하였다.

행정참여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통해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이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행정참여 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6〉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4급 이상(혹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4.42	0.82
고위공무원 비율	4.20	0.45
정부(지자체)위원회 참여비율	4.20	0.62
장·차관비율	3.99	0.21
공공기관 대표자 비율	4.03	0.28
공공기관 관리자 비율	4.13	0.39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3.92	0.18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비율	3.17	0.04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그림 IV-5] 행정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3) 민간참여

민간참여는 관리자 비율, 사업체 대표자 비율, 노동조합 임원 비율의 지표를 자문회의에서 선정하였고, 이를 전문가 대상으로 적절성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자 비율 4.47점, 노동조합 임원 비율 4.00점 그리고 사업체 대표자비율 3.96점으로 3개 지표 모두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우선순위 평가를 보면 관리자 비율 지표가 0.86로 매우 높은 반면, 사업체 대표 비율과 노동조합 임원 비율은 0.9, 0.5로 우선순위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 볼 때 관리자 비율이 적절성과 우선순위 모두를 고려할 때 민간참여를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IV-7〉 민간참여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관리자 비율	4.47	0.86
사업체 대표자 비율	3.96	0.09
노동조합 임원 비율	4.00	0.05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성으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세부분야별 지표로 구성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1) 교육기회

교육기회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개의 지표로 구성하였고 이들 지표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국가) 지표의 적절성이 각각 3.94점, 3.90점 그리고 3.87점으로 비교적 적절한 지표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교육기회 지표들은 3.00점 수준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하였다.

우선순위는 적절성이 높은 세 지표 중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0.59로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국가)은 약간 낮은 0.54를 보였다. 이들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 즉, 고등교육 장학금 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율 등의 우선순위가 0.20 미만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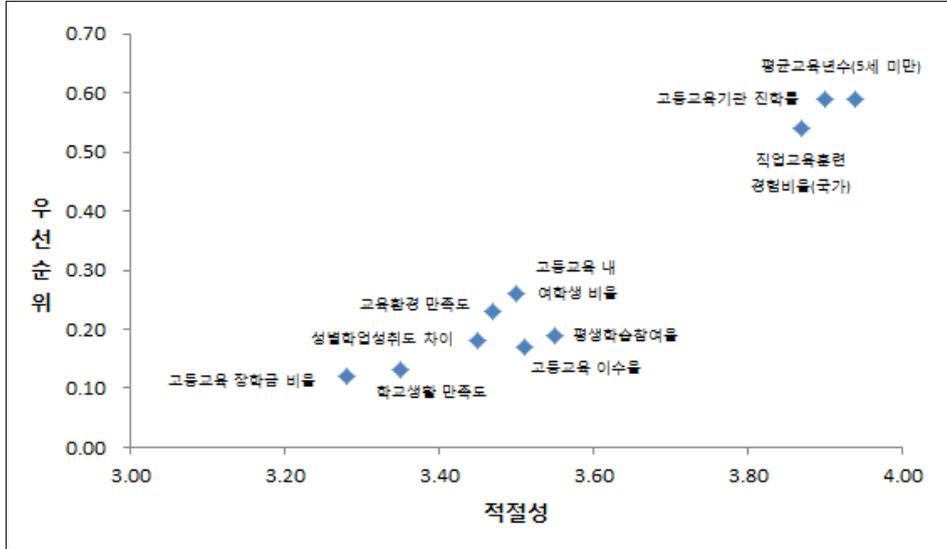
즉, 교육기회 분야에서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국가) 지표는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각각 3.90점 내외, 55.0% 내외로 상당히 높았고, 이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장학금 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의 경우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8〉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	3.94	0.5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3.90	0.59
고등교육 내 여학생 비율	3.50	0.26
고등교육 이수율	3.51	0.17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국가)	3.87	0.54
평생학습 참여율	3.55	0.19
성별학업성취도 차이	3.45	0.18
고등교육 장학금 비율	3.28	0.12
학교생활 만족도	3.35	0.13
교육환경 만족도	3.47	0.23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교육기회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교육기회에서의 성별격차를 측정하는 성평등지표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6] 교육기회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2) 교육자원

교육자원은 초·중·고 교사 비율과 교육전문직 비율의 2개의 지표를 두고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먼저 두 지표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교육전문직 비율은 4.03, 초·중·고 교사 비율은 3.67로 교육전문직이 초·중·고 교사 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순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우선순위를 보면 교육전문직 비율이 0.58로 초·중·고 교사 비율(0.42)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자원 분야의 두 지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교육전문직 비율이 교육자원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9> 교육자원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초·중·고 교사 비율	3.67	0.42
교육전문직 비율	4.03	0.58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3) 교육성과

교육성과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전공일치도의 세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먼저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세 지표 중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지표가 4.2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3.99), 전공일치도(36.4)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교육성과 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절성이 가장 높은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지표가 0.83으로 매우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과 전공일치도 지표의 우선순위는 0.04, 0.13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 볼 때 교육성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0〉 교육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4.24	0.83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3.99	0.04
전공일치도	3.64	0.13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라.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안전의식과 범죄피해로 세분화하였고 세부분야별 지표로 구성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1) 안전인식

안전인식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를 가지고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체크하고 있다. 두 지표에 대해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각각 4.31점, 4.34점으로 두 지표 모두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안전인식 분야의 우선순위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0.71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지표의 우선순위(0.29) 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했다.

안전인식 분야의 경우 제시된 두 지표가 모두 적절하여 두 중 어느 지표를 선정해도 문제는 없으나, 대표지표는 우선순위가 높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표 IV-11〉 안전의식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4.31	0.7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4.34	0.29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2) 범죄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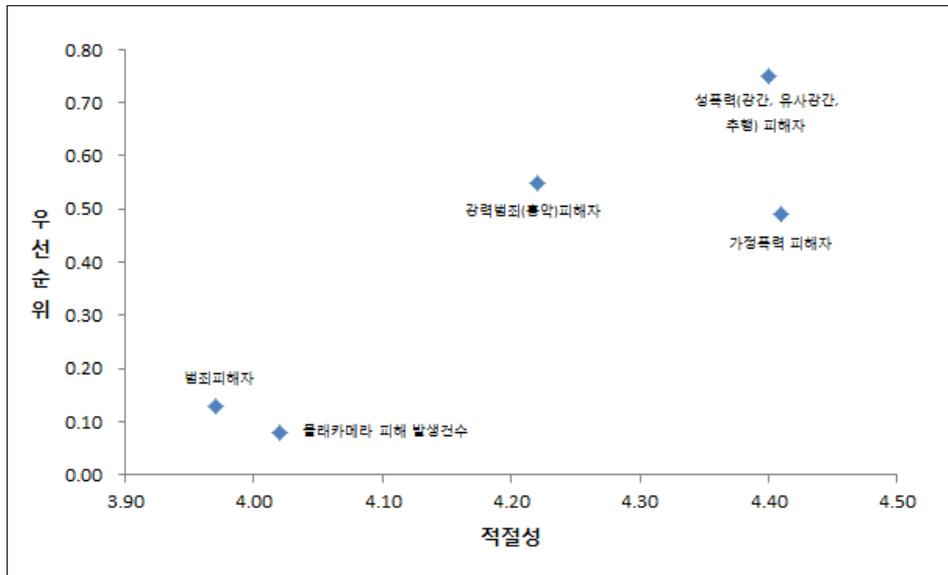
범죄피해는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의 결과 5개의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 지표의 적절성을 조사할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몰래카메라 피해 발생 건수 등의 지표 적절성이 각각 4.41, 4.40, 4.22, 4.02로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가 0.75로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했고,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우선순위는 0.55, 0.49로 평가하였다.

〈표 IV-12〉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4.22	0.55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	4.40	0.75
가정폭력 피해자	4.41	0.49
범죄피해자	3.97	0.13
몰래카메라 피해 발생 건수	4.02	0.08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범죄피해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해 볼 때,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성 4.40, 우선순위 0.75로 범죄피해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적절성 4.41, 우선순위 0.49), 강력범죄 피해자(적절성 4.22, 우선순위 0.55) 등이 다음순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7] 범죄피해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마.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소득보장과 빈곤, 취약계층 보호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각 세부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과 빈곤

소득보장과 빈곤 분야는 7개의 지표로 구성했고 이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 가입자(혹은 국민연금가입자), 빈곤가구주 비율(국가), 국민연금 평균 급여비, 상대적 빈곤율, 노후준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5점 중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하였다.

반면 우선순위는 약간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와 빈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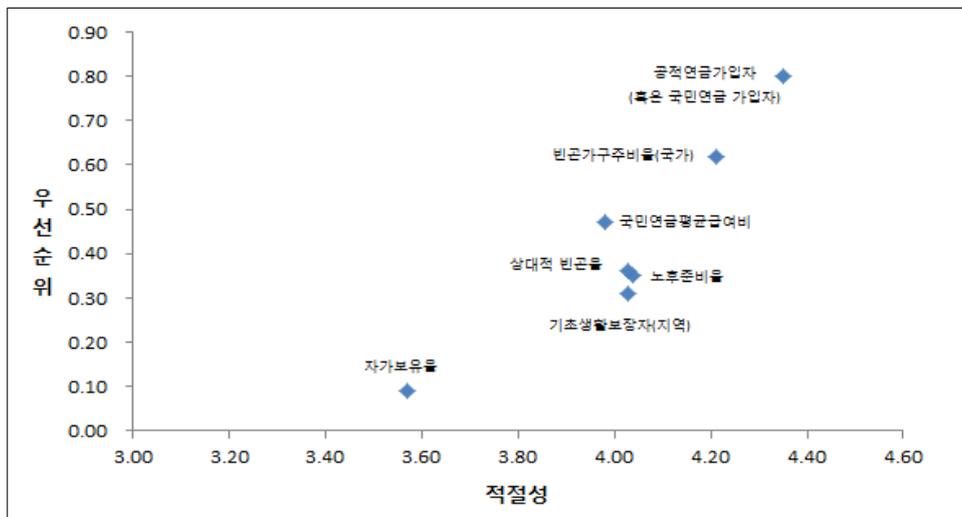
구주 비율 지표의 우선순위는 0.80, 0.62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데 비해, 국민연금 평균 급여비와 상대적 빈곤율, 노후준비율 등은 0.4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V-13〉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공적연금 가입자(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4.35	0.80
국민연금 평균 급여비	4.04	0.35
빈곤가구주 비율(국가)	4.21	0.62
상대적 빈곤율	4.03	0.36
기초생활보장자(지역)	3.98	0.47
노후준비율	4.03	0.31
자가보유율	3.57	0.09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소득보장과 빈곤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다면 전문가는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하고 있고 빈곤가구 비율을 다음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소득보장과 빈곤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2) 취약계층보호

취약계층보호는 장애인 고용률과 학대피해노인 지표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체크하였다. 먼저 적절성에 대한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률은 4.26, 학대피해노인은 4.02로 두 지표 모두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0.78로 높게 평가한 반면 학대피해노인은 0.22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취약계층보호 분야의 적절성과 우선순위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전문가들은 장애인고용률을 적절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로 보았고 학대피해노인은 적절한 지표이긴 하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IV-14〉 취약계층보호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장애인고용률	4.26	0.78
학대피해노인	4.02	0.22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바.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건강상태 평가, 질병, 보건의료 이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세부분야별 지표로 구성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세부분야별 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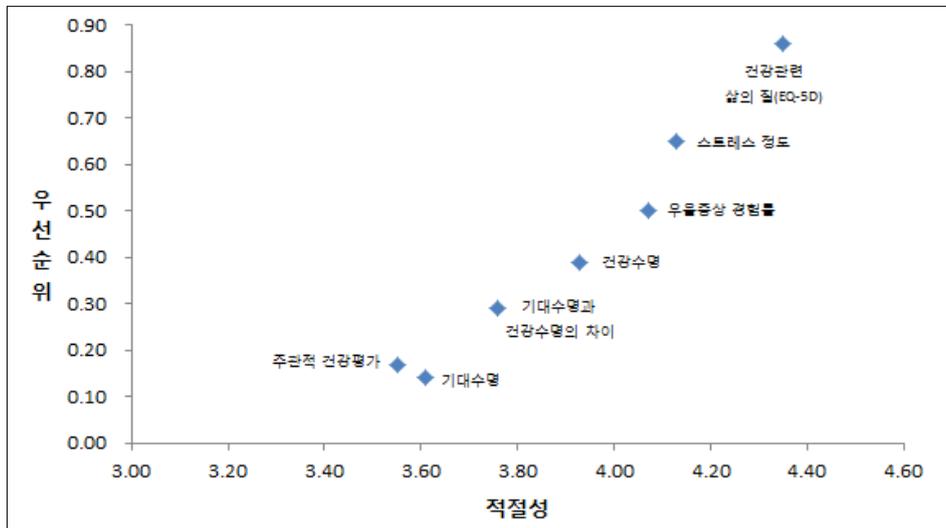
건강상태 평가는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전문가 조사에서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이 4.35로 가장 높고, 스트레스 정도 4.13, 우울증상 경험률 4.07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 우선순위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이 0.86, 스트레스 정도 0.65, 우울증상 경험률 0.50로 나타났다.

〈표 IV-15〉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기대수명	3.61	0.14
건강수명	3.93	0.3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3.76	0.29
주관적 건강평가	3.55	0.17
스트레스 정도	4.13	0.65
우울증상 경험률	4.07	0.5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4.35	0.86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건강상태와 평가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측정지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이 우선 선정될 지표로 평가되었으며,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상 경험률이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IV-9〕 건강상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2) 질병

질병 분야는 유병률, 만성질환 유병률, 활동제한일수(활용제한율), 모성 사망비 4개의 성평등 지표를 제안하였고 전문가는 이들 중 유병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에서 4점 이상으로 높은 적절성 평가를 주었다. 또한 두 지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병률은 우선순위를 0.75로 평가했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우선순위를 0.84로 평가하였다.

요약하면 적절성과 우선순위로 평가해 보면 질병 분야의 측정 지표로 가장 적합한 지표는 만성질환 유병률이고 유병률이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질병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유병률	4.10	0.75
만성질환 유병률	4.20	0.84
활동제한일수(활용제한율)	3.77	0.22
모성 사망비	3.67	0.19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3)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는 건강검진 수검률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두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가 4.39로 매우 높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3.94로, 두 지표 모두 높은 평가를 보였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0.8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0.12로 낮게 나타나서, 이 분야의 측정지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더 적합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표 IV-17〉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건강검진 수검률	4.39	0.88
의료서비스 만족도	3.94	0.12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사. 가족 분야

가족 분야는 가족생활과 가족가치관으로 구분하여 성평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부분야별 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생활

가족생활은 가사노동 시간 등 5개의 지표를 1차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5개 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과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지표의 적절성이 각각 4.53점, 4.47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가족돌봄 시간과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공평하게 분담 견해) 지표에서도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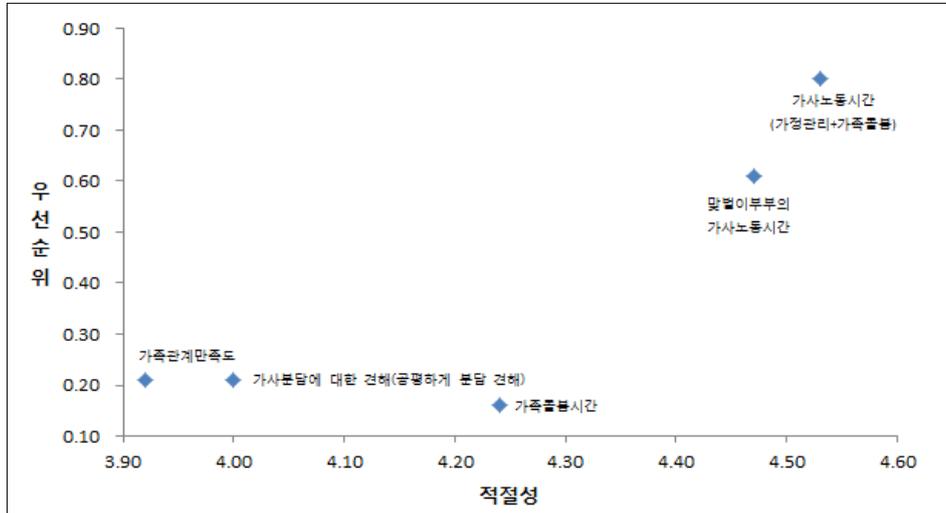
5개 지표에 대해 우선순위를 평가해 본 결과, 적절성평가에서와 동일하게 가사노동 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지표에서 각각 0.80, 0.61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표 IV-18〉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4.53	0.8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공평하게 분담 견해)	4.00	0.2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4.47	0.61
가족돌봄 시간	4.24	0.16
가족관계 만족도	3.92	0.21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가족생활 분야는 구성지표 대부분을 높게 평가했지만 우선순위면으로 볼 때 가사노동 시간과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비율을 가족생활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평가하였다.



[그림 IV-10] 가족생활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은 유산상속 비율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 대해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산상속 비율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의 적절성이 각각 3.70점, 3.51점으로, 두 지표는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 우선순위에서도 두 지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유산상속 비율은 0.58이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0.42로 유산상속 비율이 약간 앞섰으나, 두 지표 간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9> 가족가치관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유산상속 비율	3.70	0.5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3.51	0.42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 포함 비율임.

아.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여가활동, 문화활동, 정보격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표를 1차 구성하여 성평등을 측정하고자 접근하였다. 세부분야별 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여가활동 분야는 여가시간 등 4개의 지표로 1차 구성하였다. 4개 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만족도가 각각 4.21와 4.02로 평가되었고 생활체육 참여율과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각각 3.78과 3.95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우선순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여가시간이 0.78로 가장 높았고 여가활동 만족도(0.57),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0.35), 생활체육 참여율(0.30)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적절성과 우선순위로 볼 때 전문가들은 여가시간이 여가활동 분야에서 가장 적절한 지표로 평가했으며, 여가활동 만족도를 다음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여가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여가시간	4.21	0.78
여가활동 만족도	4.02	0.57
생활체육 참여율	3.78	0.30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3.95	0.35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2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2) 문화활동

문화활동 분야는 국내 및 해외여행 비율,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로 1차적으로 구성했다. 이들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지표의 적절성이 3.86, 국내외 여행일수 3.52, 국내 및 해외여행 비율 3.49로 세 지표 모두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0.61으로 평가해서 다른 두 지표에 비해 큰 차이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활동 분야의 세 지표는 적절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문화활동 분야의 대표 측정 지표로 평가하고 있었다. 단, 적절성이 세 지표 모두 특별히 높지 않으므로 향후 이 분야의 지표를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21〉 문화활동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국내 및 해외여행 비율	3.49	0.31
국내외 여행일수	3.52	0.0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86	0.61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3)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연구진 검토와 자문회의를 통해 3개의 지표가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 3개 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성별 정보화 격차(국가)가 4.22로 매우 높게 평가했고 스마트기기 활용시간과 인터넷 이용률(지역)은 각각 3.54와 3.83으로 다소 낮았으나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성별정보화 격차가 0.85로 다른 두 지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평가했고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각각 0.08, 0.07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정보화 격차는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스마트기기 활용시간과 인터넷 이용률은 대체로 적절한 평가를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중요도를 매우 낮게 평가했다.

〈표 IV-22〉 정보격차 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중요도)
성별 정보화 격차	4.22	0.85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3.54	0.07
인터넷 이용률	3.83	0.08

주: 적절성은 5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1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요약

지금까지 논의된 분야별 성평등지표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 분야는 노동시장 참여, 소득수준,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구성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참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지표, 소득수준은 임금성비(시간당 임금성비)와 성별소득격차를, 고용안정 및 일·가정양립은 (비)정규직 근로자, 상용근로자, 육아휴직자를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를 기존 지표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성비, 상용근로자, 육아휴직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향후 고용률, 성별 소득격차, (비)정규직 근로자 지표들과 비교한 후 성평등을 대표하는 지표를 최종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23)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경제 활동	노동시장 참여	경제 활동 참가율(15~64세)	4.33	0.85
		고용률(15~64세)	4.41	0.75
		최저임금 미만 고용 비율	4.06	0.62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3.42	0.10
		NEET 비율	3.20	0.01
		구직단념자	3.46	0.15
		고령자 경제 활동참가율(65세 이상)	3.55	0.13
		청년실업률	3.91	0.39
	소득수준	임금성비(시간당 임금성비)	4.54	0.87
		초임수준	3.76	0.17
		저임금근로자	4.04	0.20
		성별소득격차	4.54	0.76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근로자	4.20	0.69
		상용근로자	4.26	0.67
		성별 근속년수	4.19	0.55
		고용안정성 인식	3.74	0.30
		전반적 근로여건의 만족도	3.53	0.20
		육아휴직자	4.06	0.59

의사결정 분야는 정치참여, 행정참여, 민간참여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요약한 결과, 정치참여는 국회의원 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을, 행정참여는 4급 이상(혹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참여 비율을, 민간참여는 관리자 비율을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지표 구성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로, 의사결정 분야는 향후 지표 구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4〉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의사 결정	정치참여	국회의원 비율/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39	0.85
		국회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 비율	3.81	0.08
		주요정당(여당, 제1야당) 보직자 비율	3.87	0.07
	행정참여	주요정당(여당, 제1야당) 보직자 비율	3.87	0.07
		4급 이상(혹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4.42	0.82
		고위공무원 비율	4.20	0.45
		정부(지자체)위원회 참여 비율	4.20	0.62
		장·차관비율	3.99	0.21
		공공기관 대표자 비율	4.03	0.28
		공공기관 관리자 비율	4.13	0.39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3.92	0.18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비율	3.17	0.04
		민간참여	관리자 비율	4.47
	사업체 대표자 비율		3.96	0.09
	노동조합 임원 비율		4.00	0.05

교육 분야는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성파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기회는 평균 교육년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교육자원은 교육전문직 비율을, 교육성파는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지표 구성과 비교할 때,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기존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평가되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존 지표에 없었던 교육전문직 비율,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적절성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어 향후 최종 지표 구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교육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교육· 직업훈련	교육기회	평균 교육년수(5세 미만)	3.94	0.5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3.90	0.59
		고등교육 내 여학생 비율	3.50	0.26
		고등교육 이수율	3.51	0.17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국가)	3.87	0.54
		평생학습참여율	3.55	0.19
		성별학업성취도 차이	3.45	0.18
		고등교육 장학금 비율	3.28	0.12
		학교생활 만족도	3.35	0.13
		교육환경 만족도	3.47	0.23
	교육자원	초·중·고 교사비율	3.67	0.42
		교육전문직 비율	4.03	0.58
	교육성과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4.24	0.83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3.99	0.04
		전공일치도	3.64	0.13

안전 분야는 안전의식과 범죄피해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의식은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범죄피해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를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지표 구성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선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와 동일하게 높은 적절성을 보였지만 우선순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성폭력은 젠더 폭력에 대한 대표적 지표로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추가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V-26〉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안전	안전의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4.31	0.7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4.34	0.29
	범죄피해	강력범죄(홍약)피해자	4.22	0.55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추행) 피해자	4.40	0.75
		가정폭력 피해자	4.41	0.49
		범죄피해자	3.97	0.13
		몰래카메라 피해 발생건수	4.02	0.08

복지 분야는 소득보장과 빈곤,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보장과 빈곤은 공적연금 가입자(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빈곤가구주 비율을, 취약계층 보호는 장애인 고용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복지 분야의 지표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 이 분야 측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복지 관련 지표의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필요는 있다.

〈표 IV-27〉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복지	소득보장과 빈곤	공적연금 가입자(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4.35	0.80
		국민연금 평균 급여비	4.04	0.35
		빈곤가구주 비율(국가)	4.21	0.62
		상대적 빈곤율	4.03	0.36
		기초생활보장자(지역)	3.98	0.47
		노후준비율	4.03	0.31
		자가보유율	3.57	0.09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고용률	4.26	0.78
		학대피해노인	4.02	0.22

보건 분야는 건강상태 평가, 질병,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스트레스 정도, 건강관련 삶의 질(EQ-5D)를, 질병은 유병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는 건강검진 수검률을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안전 분야의 지표 구성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표의 포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될 필요는 있다.

〈표 IV-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보건	건강상태 평가	기대수명	3.61	0.14
		건강수명	3.93	0.3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3.76	0.29
		주관적 건강평가	3.55	0.17
		스트레스 정도	4.13	0.65
		우울증상 경험률	4.07	0.5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4.35	0.86
	질병	유병률	4.10	0.75
		만성질환 유병률	4.20	0.84
		활동제한일수(활동제한율)	3.77	0.22
		모성 사망비	3.67	0.19
	보건의료 이용 및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4.39	0.88
		의료서비스 만족도	3.94	0.12

가족 분야는 건강생활과 가족가치관으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은 가사노동 시간과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가사노동을, 가족가치관은 유산상속 비율을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 분야의 경우 기존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가사노동 시간 하나만 동일하고 이외 부분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육아휴직을 경제활동분야 중 일·가정양립 세부지표 항목에서 측정함에 따라

가족 분야에서 빠져있다. 셋째 아 출생성비는 초저출산 시대에 평가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 시간 지표를 유지하고 가족가치관으로 유산상속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단, 유산상속 비율은 공식통계가 없어 향후 통계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적합한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29〉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 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가족	가족생활	가사노동 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4.53	0.8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공평하게 분담 견해)	4.00	0.2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4.47	0.61
		가족돌봄 시간	4.24	0.16
		가족관계 만족도	3.92	0.21
	가족가치관	유산상속 비율	3.70	0.5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3.51	0.42

문화·정보 분야는 여가활동, 문화활동, 정보격차로 세분화하여 구성 지표에 대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여가시간과 여가활용 만족도를, 문화활동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정보격차는 성별 정보화 격차를 적절성과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안전 분야의 지표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동일한 결과이다. 단 문화활동 분야에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이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IV-30〉 문화정보분야 성평등지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

분야	세부 분야	지표	적절성	우선순위 (중요도)
문화·정보	여가활동	여가시간	4.21	0.78
		여가활용 만족도	4.02	0.57
		생활체육참여율	3.78	0.30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3.95	0.35
	문화활동	국내 및 해외여행 비율	3.49	0.31
		국내외 여행일수	3.52	0.0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86	0.61
	정보격차	성별 정보화 격차(국가)	4.22	0.85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3.54	0.07
		인터넷 이용률(지역)	3.83	0.08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 101 |
|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 104 |
|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116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국가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8이었으나, 2015년에는 70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 72.7로 개선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7), 문화·정보 분야(87.3), 가족 분야(78.0)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반면의사결정 분야가 26.5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낮았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 64.2, 복지 분야 72.0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가 72.4로 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성평등 수준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로 지난 5년간 18.3p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의사결정 분야 7.6p, 복지 분야 3.2p, 경제활동 분야 3.5p 순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2011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던 분야는 안전과 보건 분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2011년 대비 1.7p 증가에 그쳤고 안전 분야는 2011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더 악화되어, 동기간 0.1p 하락하였다.

한편 정책영역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높은 정책영역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82.7)이었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77.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4.2) 순이었다.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016년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3.7이었고, 이어서 경제활동 분야 72.4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 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세 정책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영역이지만 2011년 이래 상승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68.9, 2015년 71.5 그리고 2016년 72.4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위지표인 성별 임금격차의 지표 값이 2012년 64.4에서 2015년 62.8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 64.1로 상승한 것, 동 분야의 또 다른 하위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직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각각 70.9, 72.5에서 2015년 각각 74.0, 79.2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수 값은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1년 91.5, 2014년 93.3 그리고 2016년에는 93.7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같은 분야의 하위 지표 중의 하나인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86.5에서 2016년 91.9로 적게나마 상승한 것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 성평등 수준에 도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도 지수 값이 2011년 18.9, 2015년 24.9 그리고 2016년 26.5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분야의 하위지표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32.3에서 2015년 56.0으로 급증하였고, 비록 또 다른 하위지표인 관리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15.8에서 14.6으로 1.2p 하락하였어도 나머지 2개의 하위지표인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의 지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2.7p, 5.3p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 분야로 97.0이었고, 복지 분야 72.0, 안전 분야 6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은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2012년 이래 2014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보건 분야는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나뉜다. 그 중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²⁹⁾의 지표 값이 2011년 92.8에서 2016년 95.5로 2.6p 상승하면서 하위지표들 중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성비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1년 96.9, 96.1에서 2016년 각각 98.4, 97.0으로 각각 1.5p, 0.9p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은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가구주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지표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남성이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여성비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해당 지표 값이 2011년 69.2에서 2016년 82.0으로

29) 스트레스 인지율은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변경하여 성비로 산정함.

높아졌다. 그리고 비빈곤 가구주 성비의 경우 지표 값이 2011년 84.8에서 2016년 89.8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에는 40.1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47.0으로 상승했다가 2016년 44.2로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된다.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성비의 지표값은 2011년 69.6으로 시작해 2016년 66.7로 2.9p 하락했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의 지표값은 2011년 58.8에서 2016년 61.6으로 2.8p 상승했다. 즉,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악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건수가 남성 피해자 건수 보다 더 많이 상승한데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3) 성평등의식 및 문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인 가족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1.9, 2015년 78.5, 2016년 82.7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14년부터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 분야는 성평등지수의 상승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가족 분야의 가장 주된 상승요인은 육아휴직 성비 지표 값의 높은 상승으로 2011년 24.7에서 2016년 92.7로 68.0p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도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된 주된 요인은 육아휴직자 성비의 지표가 상승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1년 84.1에서 2014년 87.7까지 상승하다가 2016년 87.3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분야의 하위지표인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지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3.1p, 7.7p 상승한데 반해 성별정보화 격차 지표는 1.3p 하락한데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³⁰⁾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동시에 개선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혹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세부 사업 수준에서 국가성평등지표와 연계하고 있다. 연계를 위해 활용된 주요 정책 목록은 <표 V-1>과 같다.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성평등 정책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1, 인용 및 수정.

성평등 정책은 국가성평등지표와 연계하기 위해 정책연번을 두고 있다. 정책 연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경우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지표와 관련되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은 중과제 수준을 정책 번호로 부여하고 세부과제 내용을 세부사업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9-9-9'는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이외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참고로 정책연계는 기존 보고서에서 연계했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변경하여 수정하여 수록했고 이외 정책은 2016년 연계표와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성

30) 본 절은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51-161 부분을 인용 및 수정한 것임.

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성평등 확산이라는 국정과제와 다양한 분야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일터 내 임금차별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경제활동참가율	2-1	고용 기회의 성평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중 직종의 남성 진출 확대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국정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새일센터 확대	
성별 임금격차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국정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국정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임금격차 해소
	9-9-9	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강화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상용근로자 비율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국정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2, 인용 및 수정.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움직임을 지원하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이나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분야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구성 지표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3년 이래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V-3>의 의사결정 분야와 양성평등정책들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향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육성과 같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하락 추이에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인 시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등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필요가 있다.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회의원 비율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국정 66	실직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대표성 제고
	9-9-9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속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관리직 비율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업의 성평등 조직혁신 지원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국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대표성 제고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3, 인용 및 수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별격차가 비교적 낮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남성이 더 길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 격차가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V-4>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정책은 교육수준을 높이는 정책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 교육 등으로 추진되며, 재직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차원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정책은 세부사업별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은 현 시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평등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생학습체계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해 기존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정책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평균 교육년수	국정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국정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국정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취약계층 교육 지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국정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국정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지원
	1-2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9-9-9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사업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4, 인용 및 수정.

복지 분야의 경우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별로 보면 여성가구주 빈곤율의 경우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비빈곤율의 성비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은 여성 가입자 수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세 연금의 가입률이 남성은 63.7%인데 비해 여성은 52.3%로 11.4%p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표 V-5>는 복지 분야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빈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개선이 되지 않은 지표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향후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남성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비빈곤 가구주 비율	국정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국정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국정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국정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정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9-9-9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고용률	국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차별없는 균형인사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5, 인용 및 수정.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별격차 또한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지표별로는 여성의 지표 값이 남성에게 비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지표별 정책과제를 검토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건강증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여성 건강 개선에 접근하고 있다.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건강관련 삶의 질(EQ-5D)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국정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검진 수검률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예방적 건강관리
스트레스 인지율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6,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하다가 2015년 이래로 다시 상승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이유는 여성 대상 폭력(특히 성폭력)이 증가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으로 2015년 이래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이유 또한 동일하게 여성 대상 폭력의 감소와 불안감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의식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5-2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력 제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강화
	5-3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젠더폭력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문제 해결
	국정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젠더폭력 근절)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국정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7,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의 성평등 정책들을 살펴보면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대응

력 제고 및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도 기반마련과 다양한 젠더폭력을 대응하는 전략들로 요약된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정책과제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해진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군 장병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성폭력 처벌 강화로 주로 젠더폭력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시행으로 최근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피해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정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가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분야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자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여 성평등 목표점인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10%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아 출생성비는 완전출생성비 상태로 접근했다. 이에 비해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 성별격차는 높은 편은 아니나, 만족비율은 남녀모두 60%미만으로 나타나며,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성별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절대적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이다.

<표 V-8>은 가족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을 연계한 표이다. 가족 분야의 정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성이 육아에 당연히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곧 자연스러운 육아휴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의 차원에서 육아·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국정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육아·돌봄 지원 확대
	9-9-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포용적 가족관 형성
9-9-9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육아휴직자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9-9-9	공무원 출산, 양육지원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 확대
	9-9-9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9-9-9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9, 인용 및 수정.

문화·정보 분야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지표 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개선되었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시간이 더 길고 그 차이도 여전히 크다. 하지만 여가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지, 여가만족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성비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정보의 접근, 역량, 활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보화 격차는 남성의 경우 2014년 이래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점차 하락하면서 성별 격차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와 정책을 연계해 보면 <표 V-9>와 같다. 여가는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이 추진되며, 정보 분야는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과제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여가시간에 대한 성별차이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없다.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긴 여성의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 시간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과 성별 수요를 반영한 여가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만족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정보화 격차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여가시간 성비	국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국정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관광산업 육성
	9-9-9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농촌축제 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강화 및 여성 참여 유도
			여성농업인 주도의 소규모 문화활동 (문화·예술·교양·스포츠강좌 등) 지원
			농촌지역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 지원 강화 추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포상 등 계획 수립			
여가만족도 성비	국정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성별 정보화 격차	국정 7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출처: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60, 인용 및 수정.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점검함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 중 불평등이 심화된 분야와 지표, 혹은 개선 정도가 높지 않은 지표는 중앙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집중 점검·관리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를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하락하는 지표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개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 하여금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는 국가성평등지수 웹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³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제4항은 국가성평등지수를 관보 혹은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혹은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독일의 경우 개발된 성평등 지수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Gender Equality Ma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GSIS)을 통해 성평등 지표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V-1] 참조). 이 서비스는 국가, 지역, 국제성평등지수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편리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구와 연계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듯 향후 성평등지수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시의성을 갖추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12.1.(<http://www.law.go.kr/>)

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초정보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 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

보고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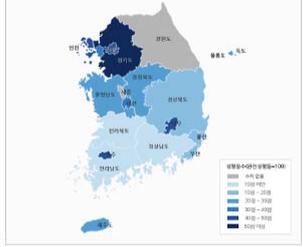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변화 추이
State-level Gender Equality Index trends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성평등지수

보고서 다운로드



국제성평등지수



국가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으로 구성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입니다.

지역성평등지수란?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입니다.

국제성평등지수란?

국제성평등지수는 UNDP가 1995년 남녀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를 처음 소개하면서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경제포럼(WEF), Social Watch,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보기

해당분야를 선택하시면 각 분야 성평등지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변화 추이

* 최근 5개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변화 추이입니다.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지수	67.4	68.0	68.4	68.9	70.1
가족	59.6	60.8	62.8	66.7	70.0
복지	68.2	69.8	69.6	69.0	71.6
보건	92.0	89.4	92.8	92.7	95.4
경제활동	68.9	69.9	70.4	71.1	71.5
의사결정	19.1	20.2	21.5	23.9	25.4
교육직업훈련	91.5	91.2	91.4	93.3	93.4
문화 및 정보	84.1	84.9	85.8	87.4	87.1
안전	64.2	65.4	60.8	55.1	55.4

[그림 V-1]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셋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2015년을 전후하여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다. 즉,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인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을 기반으로 분야와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기존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강화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지표를 점검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성평등지수의 지표 개편의 주기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가 더 체감 적이고 정교하게 개편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12~2017), 『공무원연금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2~2017), 『교육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2012~2017), 『국민연금통계연보』.
- 경찰청(2017), 『범죄분석』.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대검찰청(2012~2016), 『범죄분석』.
- 보건복지부(2012~2017), 『건강보험통계』.
- 보건복지부(2012~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사학연금관리공단(2012~2017), 『사학연금통계』.
- 주재선·김태홍·전기택·한진영(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7), 『2016년 한국의 성인지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질병관리공단(2012~2017), 『지역사회건강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12~2017), 『고용보험통계』.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통계청(2012~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2~2017), 『사회조사』.
- 통계청(2009, 2014),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12~2017), 『인구동향조사』.
- OECD(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 UNDP(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 <통계DB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10), 성인지통계시스템 DB
- 통계청(2017.10), 국가통계포털(KOSIS)



부 록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23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6
<부록 3>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165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가. 경제활동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61.8	61.5	60.8	61.0	61.1	61.3	61.5	62.4	62.6	62.8
여성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51.8	52.1
남성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73.8	7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부표 1-2〉 임금격차

(단위: 천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127	2,259	2,270	2,360	2,454	2,567	2,660	2,754	2,820	2,892
여성	1,582	1,681	1,693	1,772	1,862	1,958	2,033	2,092	2,119	3,289
남성	2,381	2,528	2,546	2,648	2,750	2,878	2,986	3,122	3,215	2,203
임금격차	66.4	66.5	66.5	66.9	67.7	68.0	68.1	67.0	65.9	67.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1)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

2) 임금격차=여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남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100.

〈부표 1-3〉 상용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8,620	9,007	9,390	10,086	10,661	11,097	11,713	12,156	12,588	12,974
여성	2,816	2,954	3,051	3,421	3,739	3,985	4,264	4,525	4,731	4,965
남성	5,804	6,053	6,338	6,666	6,922	7,112	7,449	7,630	7,857	8,0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13,183
여성	3,851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5,044	5,081
남성	6,328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7,997	8,102
여성비율	37.8	37.5	36.3	37.2	37.1	37.6	37.9	38.5	38.7	3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5〉 고용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60.3	60.4
여성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9.5	49.9	50.2
남성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1.4	71.1	7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050	4,382	4,426	4,571	4,686	4,791	4,966	5,123	5,203	5,323
여성	1,788	1,901	1,969	2,030	2,104	2,172	2,302	2,409	2,505	2,555
남성	2,262	2,481	2,457	2,542	2,581	2,619	2,664	2,714	2,698	2,769
여성비율	44.1	43.4	44.5	44.4	44.9	45.3	46.4	47.0	48.1	4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7〉 30대 고용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0대 전체	72.9	72.9	71.3	72.0	72.2	72.7	73.2	73.9	74.2	74.6
30대 여성	54.8	54.7	52.7	53.7	53.7	54.5	55.5	56.3	56.9	58.3
30대 남성	90.3	90.3	89.1	89.5	89.8	90.3	90.2	90.9	90.9	9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6	2.7	3.1	3.1	2.8	2.9	3.0	3.3	3.4	3.7
여성	2.8	2.9	3.1	3.6	3.0	3.3	3.4	4.0	3.7	4.2
남성	2.6	2.5	3.1	2.9	2.6	2.7	2.9	2.9	3.2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4년제 이상 졸업자.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9	5.9	6.2	6.2	6.1	6.2	6.4	6.0	6.2	6.4
여성	4.1	4.1	4.4	4.4	4.3	4.4	4.6	4.5	4.6	4.8
남성	6.7	6.7	7.1	7.0	7.0	7.1	7.3	6.9	7.1	7.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88.8	184.5	189.0	187.0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여성	182.9	178.3	182.9	181.2	174.0	166.4	159.9	157.1	165.0	163.2
남성	192.3	188.2	192.6	190.6	185.0	178.3	173.0	171.0	179.2	176.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층 전체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5	42.3
여성	43.7	43.0	41.8	42.0	42.1	42.0	41.3	42.5	43.2	43.8
남성	41.5	40.1	39.0	38.7	38.8	38.7	38.1	38.9	39.8	4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민연금	34.8	35.9	36.1	36.4	38.2	38.7	38.6	38.6	37.9	37.4
건강보험	35.9	36.9	39.7	38.3	41.3	42.0	43.1	42.6	42.7	43.1
고용보험	33.9	35.9	39.3	37.8	40.6	41.1	41.5	42.6	42.3	4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사업장 수	791	791	790	833	832	919	1,074	1,204	1,143	1,153
이행 사업장 수	440 (55.6%)	476 (60.2%)	523 (66.2%)	578 (69.4%)	604 (72.6%)	683 (74.3%)	877 (81.7%)	903 (75.0%)	605 (52.9%)	940 (81.5%)
어린이집 설치	253 (32.0%)	269 (34.0%)	284 (35.9%)	312 (37.5%)	326 (39.2%)	359 (39.1%)	534 (49.7%)	635 (52.8%)	578 (50.5%)	729 (63.2%)
수당	147 (18.6%)	160 (20.2%)	195 (24.7%)	208 (25.0%)	231 (27.8%)	253 (27.5%)	242 (22.5%)	175 (14.5%)	-	-
위탁	40 (5.0%)	47 (6.0%)	44 (5.6%)	58 (6.9%)	47 (5.6%)	71 (7.7%)	101 (9.4%)	93 (7.7%)	27 (2.4%)	211 (18.3%)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개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장 유지율	67.3	67.6	69.0	71.2	74.6	76.4	75.5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	20,342	27,521	35,457	46,262	53,688	58,694	68,383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13,696	18,596	24,466	32,933	40,053	44,817	51,61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기준.

나. 의사결정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	2008	2012	2016
전체	299	299	300	300
여성	39	41	47	51
남성	260	258	253	249
여성비율	13.0	13.7	15.7	17.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1-16〉 5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2,641	22,673	22,947	23,371	24,029	24,432	24,143	24,694
여성	2,230	2,392	2,644	2,896	3,239	3,635	3,762	4,146
남성	20,411	20,281	20,303	20,475	20,790	20,797	20,381	20,548
여성비율	9.8	10.5	11.5	12.4	13.5	14.9	15.6	16.8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주: 2005~2012년도는 일반직(1~5급), 2013년도는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으로 분류가 달라짐.

〈부표 1-17〉 관리직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601	549	546	562	515	464	403	397	353	331
여성	53	52	47	53	52	51	46	44	37	32
남성	548	497	499	509	463	413	358	352	316	298
여성비율	8.8	9.5	8.6	9.4	10.1	11.0	11.4	11.1	10.5	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단위: 명)

구분	근로자 전체			관리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5년 12월(1,000인 이상)	1,597,617	458,584	1,139,033	169,983	14,178	155,805
2006년 12월(1,000인 이상)	1,748,552	536,445	1,212,107	166,009	15,373	150,636
2007년 12월(500인 이상)	2,430,320	775,922	1,654,398	217,717	22,887	194,830
2008년 12월(500인 이상)	2,566,715	825,850	1,740,865	254,598	35,836	218,762
2009년 12월(500인 이상)	2,598,082	846,957	1,751,125	230,008	29,404	200,604
2010년 12월(500인 이상)	2,731,934	933,286	1,789,648	270,234	34,616	235,618
2011년 12월(500인 이상)	2,897,173	986,053	1,911,120	287,062	33,280	253,782
2012년 12월(500인 이상)	3,050,363	1,055,336	1,995,027	292,978	37,227	255,751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위촉위원수	9,205	9,462	9,867	8,875	7,647	7,585	6,873	8,305	7,632	7,725
여성위원수	2,473	2,558	2,428	1,983	1,900	1,949	1,902	2,630	2,633	2,805
여성위원비율	26.9	27.0	24.6	22.3	24.8	25.7	27.7	31.7	34.5	37.8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1-20〉 초·중·고등학교 교장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전체	5,710	5,761	5,791	5,818	5,830	5,855	5,875	5,897	5,934	5,962
	여성	589	653	747	832	895	977	1,095	1,299	1,701	2,058
	남성	5,121	5,108	5,044	4,986	4,935	4,878	4,780	4,598	4,233	3,904
	여성비율	10.3	11.3	12.9	14.3	15.4	16.7	18.6	22.0	28.7	34.5
중학교	전체	2,682	2,731	2,777	2,800	2,837	2,859	2,880	2,907	2,934	2,940
	여성	343	394	463	493	522	556	577	618	680	713
	남성	2,339	2,337	2,314	2,307	2,315	2,303	2,303	2,289	2,254	2,227
	여성비율	12.8	14.4	16.7	17.6	18.4	19.4	20.0	21.3	23.2	24.3
고등학교	전체	2,064	2,106	2,129	2,177	2,199	2,223	2,278	2,286	2,299	2,297
	여성	126	122	126	139	155	174	199	204	218	228
	남성	1,938	1,984	2,003	2,038	2,044	2,049	2,079	2,082	2,081	2,069
	여성비율	6.1	5.8	5.9	6.4	7.0	7.8	8.7	8.9	9.5	9.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계	68,062	69,975	70,464	71,954	75,674	78,211	86,656	88,163	90,215	93,371
	총(학)장	361	357	356	356	383	372	415	409	413	397
	교수	29,857	30,992	31,500	32,297	33,804	34,744	38,830	39,977	41,239	42,306
	부교수	15,526	16,158	16,212	16,447	17,398	17,804	19,971	19,924	20,013	20,155
	조교수	13,903	13,727	13,591	13,899	14,316	14,875	27,440	27,853	28,550	27,513
	전임강사	8,415	8,741	8,805	8,955	9,773	10,416	-	-	-	-
여성	계	13,104	13,878	14,479	15,393	16,605	17,774	20,018	20,947	21,984	22,403
	총(학)장	38	40	42	42	47	42	40	45	43	47
	교수	4,061	4,231	4,367	4,574	4,785	4,981	5,644	5,958	6,245	6,568
	부교수	2,694	2,938	3,134	3,289	3,594	3,887	4,505	4,689	4,864	5,174
	조교수	3,274	3,425	3,599	3,948	4,223	4,578	9,829	10,255	10,832	10,614
	전임강사	3,037	3,244	3,337	3,540	3,956	4,286	-	-	-	-
남성	계	54,958	56,097	55,985	56,561	59,069	60,437	66,638	67,216	68,231	70,968
	총(학)장	323	317	314	314	336	330	375	364	370	350
	교수	25,796	26,761	27,133	27,723	29,019	29,763	33,186	34,019	34,994	35,738
	부교수	12,832	13,220	13,078	13,158	13,804	13,917	15,466	15,235	15,149	14,981
	조교수	10,629	10,302	9,992	9,951	10,093	10,297	17,611	17,598	17,718	16,899
	전임강사	5,378	5,497	5,468	5,415	5,817	6,130	-	-	-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의 합.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됨.

〈부표 1-22〉 공무원 수

(단위: 명,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6	582,837	255,202	43.8	272,584	75,608	27.2
2008	599,037	289,388	48.3	274,626	79,746	29.0
2010	622,737	293,917	47.2	341,421	110,791	32.4
2011	621,313	292,038	47.0	343,722	112,770	32.8
2012	622,424	299,539	48.1	347,165	116,441	33.5
2013	621,823	299,101	48.1	354,630	120,873	34.1
2014	634,051	310,860	49.0	357,492	126,483	35.4
2015	637,654	315,290	49.4	363,691	132,981	36.6
2016	650,149	323,575	49.8	371,253	139,942	37.7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공무원단 전체	980	901	948	936	976	1,033	991	1,011	1,031	1,051
고위공무원단 여성 수	10	13	18	22	31	38	37	34	38	52
여성 비율	1.0	1.4	1.9	2.4	3.2	3.7	3.7	3.4	3.7	4.9

자료: 안정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주: 2014년부터 인사혁신처 자료를 활용함.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전체	20	16	24	17	17	17
여성장관 수	1	2	3	2	1	2
여성 비율	5.0	12.5	12.5	11.8	5.9	11.8

자료: 안정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기관수	109	111	117	302	316	323
전체 임원	1,257	1,307	1,356	3,149	3,204	2,983
여성 인원	111	112	126	367	390	375
비율	8.8	8.6	9.3	11.7	12.2	12.6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주: '13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4년부터 공공기관 전체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자

(단위: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226,569	3,262,925	3,264,782	3,355,470	3,470,034	3,602,476	3,676,876	3,812,820	3,874,167
여성	1,170,042	1,192,048	1,202,411	1,247,857	1,300,274	1,355,845	1,388,896	1,435,866	1,454,054
남성	2,056,527	2,070,877	2,062,371	2,107,613	2,169,760	2,246,631	2,287,980	2,376,954	2,420,113
여성비율	36.3	36.5	36.8	37.2	37.5	37.6	37.8	37.7	37.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다. 교육·직업훈련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전체	10.3	10.5	11.2	11.6	12.1
여성	9.4	9.8	10.5	10.9	11.4
남성	11.2	11.5	12.1	12.4	12.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재분석.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계	여성	남성
2010	79.0	80.5	77.6
2011	72.5	75.0	70.2
2012	71.3	74.3	68.6
2013	70.7	74.5	67.4
2014	70.9	74.6	67.6
2015	70.8	74.6	67.3
2016	69.8	73.5	66.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고등교육기관 진학자.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A)	남성(B)	외국인	분류불능	여성비율 (A/(A+B))
2006	2,875,555	698,756	2,176,799	20,009	18,049	24.3
2008	3,987,065	1,151,546	2,835,519	19,314	270	28.9
2009	4,878,247	1,433,593	3,425,726	17,841	1,087	29.5
2010	4,208,310	1,404,051	2,791,245	13,005	9	33.5
2011	3,308,391	1,134,368	2,147,316	26,693	14	34.6
2012	3,419,898	1,154,786	2,239,825	25,282	5	34.0
2013	3,557,559	1,530,028	2,002,954	24,566	11	43.3
2014	3,399,908	1,554,207	1,845,298	-	403	45.7
2015	2,836,142	1,080,408	1,755,734	-	-	38.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분석.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근로자능력개발지원(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0	69.3	67.8	70.7
2011	69.7	68.2	71.0
2012	69.0	67.9	69.9
2013	68.6	68.0	69.0
2014	67.7	67.5	67.8
2015	67.5	67.9	67.1
2016	67.3	68.4	66.3
2017	67.6	69.0	66.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적령 인구수: 만 18~21세.

2) 취학률 = 적령학생수 / 적령인구수.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80,341	293,967	298,883	294,952	301,606	322,413	334,643
여성	134,161	141,329	145,079	144,003	149,125	160,348	167,933
남성	146,180	152,638	153,804	150,949	152,481	162,065	166,710
비율	47.9	48.1	48.5	48.8	49.4	49.7	50.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2008	653	11.3	1,207	19.8	394	14.4	594	22.2	122	5.8	120	5.5
2009	747	12.9	1,374	22.7	463	16.7	636	23.7	126	5.9	135	6.0
2010	832	14.3	1,623	26.9	493	17.6	687	25.6	139	6.4	174	7.6
2011	895	15.3	1,964	32.7	522	18.4	698	25.7	157	7.0	195	8.5
2012	978	16.7	2,382	39.3	556	19.4	713	26.2	176	7.8	205	8.9
2013	1,096	18.6	2,730	45.1	577	20.0	724	26.6	199	8.7	221	9.7
2014	1,299	22.0	2,981	49.2	618	21.3	763	28.1	204	8.9	235	10.3
2015	1,701	28.7	3,295	54.3	680	23.2	811	30.1	218	9.5	258	11.3
2016	2,058	34.5	3,455	56.7	713	24.3	850	31.8	228	9.9	316	13.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2006	교수	13.5	20.1	5.7	8.4	17.0	31.3	26.1
	부교수	16.8	22.4	9.6	9.5	24.7	31.6	33.6
	조교수	22.4	27.7	15.4	13.0	29.7	32.5	42.9
2008	교수	13.6	20.6	6.6	8.7	17.2	31.6	27.8
	부교수	18.3	23.0	12.3	10.7	27.1	32.4	37.2
	조교수	25.0	31.1	19.5	15.5	31.9	32.5	47.1
2010	교수	13.9	20.5	7.2	8.5	18.3	31.8	28.9
	부교수	19.9	25.8	14.0	11.4	28.1	31.9	40.9
	조교수	28.2	34.0	24.9	16.3	34.1	36.6	48.2
2011	교수	13.9	20.3	7.6	8.2	18.8	31.8	30.1
	부교수	20.6	26.7	15.7	11.8	28.4	31.7	43.4
	조교수	29.4	35.8	26.0	17.1	35.9	36.9	49.8
2012	교수	14.1	20.7	7.9	8.4	19.0	31.8	30.9
	부교수	21.8	28.1	16.8	12.6	29.5	32.4	46.0
	조교수	30.7	37.3	27.4	17.8	39.0	36.6	50.7
2013	교수	14.5	21.2	8.4	8.6	19.7	32.1	33.1
	부교수	22.6	29.8	18.4	12.7	30.1	32.5	46.2
	조교수	35.8	40.0	30.8	20.9	50.4	36.9	54.0
2014	교수	14.9	21.5	8.7	8.8	20.5	32.6	32.9
	부교수	23.5	30.0	19.8	13.3	31.0	33.1	47.1
	조교수	36.8	40.7	30.9	21.1	53.2	38.4	54.6
2015	교수	15.1	22.3	9.2	9.0	20.8	32.8	33.2
	부교수	24.3	31.0	21.0	13.7	32.6	33.2	48.5
	조교수	37.9	42.1	31.8	21.5	55.9	38.6	54.2
2016	교수	15.5	22.7	9.9	9.1	21.4	32.6	36.1
	부교수	25.7	33.0	22.2	14.1	35.8	33.1	51.0
	조교수	38.6	42.0	32.9	21.7	57.6	38.9	56.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단위: 천 원)

구분	교육비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8	계	233	242	241	206	249
	여성	235	244	238	215	257
	남성	231	241	243	197	240
2009	계	242	245	260	217	269
	여성	243	243	252	234	282
	남성	241	248	267	204	257
2010	계	240	245	255	218	265
	여성	247	246	253	242	285
	남성	234	244	257	197	247
2011	계	240	241	262	218	259
	여성	247	246	253	242	281
	남성	234	236	269	197	240
2012	계	236	219	276	224	265
	여성	238	215	276	235	276
	남성	235	223	276	214	254
2013	계	239	232	267	223	262
	여성	243	233	271	233	268
	남성	235	230	264	214	257
2014	계	242	232	270	230	269
	여성	251	235	276	251	284
	남성	234	229	265	209	254
2015	계	244	231	275	236	276
	여성	250	229	282	252	286
	남성	239	233	269	221	267
2016	계	256	241	275	262	304
	여성	263	244	287	273	312
	남성	249	239	264	251	296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여성														
2006	73.4	70.3	62.7	59.1	71.4	70.1	70.2	68.0	77.1	72.3	68.1	64.0	84.4	83.2	79.0	77.4
2008	73.4	70.1	63.3	59.3	72.2	70.6	65.7	64.2	77.7	73.3	69.3	64.5	85.4	84.4	79.3	77.8
2009	73.0	70.1	62.7	58.8	72.0	71.0	64.7	63.2	76.8	73.6	69.3	65.0	85.3	84.6	78.4	77.0
2010	55.0	51.9	44.3	43.6	54.8	55.2	52.9	55.4	64.7	59.8	52.5	49.4	72.2	71.4	36.1	33.3
2011	67.6	64.5	58.9	57.6	65.2	64.8	63.7	66.7	76.4	71.6	64.3	61.5	83.2	83.9	54.9	51.8
2012	68.1	65.7	59.7	59.1	65.0	64.8	66.3	69.1	76.0	71.3	64.6	62.6	82.0	82.5	58.6	56.4
2013	67.4	65.1	57.9	56.7	63.9	63.7	67.9	70.4	74.9	70.1	63.8	61.6	80.8	81.1	59.6	57.7
2014	67.0	65.2	57.3	56.4	63.9	63.4	68.6	70.8	73.1	68.7	63.6	61.5	80.8	81.4	59.6	57.8
2015	67.5	66.1	57.6	57.1	64.3	64.0	68.6	71.2	72.8	69.5	63.9	62.0	82.2	82.8	61.9	6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주: 전문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총괄임. 2010년 이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임.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5	3,881	850	21.9	182	18	9.9	727	71	9.8	2,972	761	25.6
2006	3,896	937	24.1	182	14	7.7	736	79	10.7	2,978	844	28.3
2007	3,945	1,012	25.7	180	14	7.8	752	88	11.7	3,013	910	30.2
2008	4,150	1,185	28.6	180	16	8.9	784	119	15.2	3,186	1,050	33.0
2009	4,173	1,278	30.6	181	17	9.4	788	119	15.1	3,204	1,142	35.6
2010	4,202	1,373	32.7	124	7	5.6	860	139	16.2	3,218	1,227	38.1
2011	4,196	1,491	35.5	132	17	12.9	852	157	19.4	3,212	1,317	41.0
2012	4,246	1,587	37.4	167	20	12.0	838	175	20.9	3,241	1,392	42.6
2013	-	-	-	-	-	-	866	178	20.6	3,239	1,444	44.6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및 기타 포함.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7.2	21.6	27.6	26.4	28.0	30.5	32.4	35.6	30.2	36.8	40.6	35.7
여성	15.2	19.5	29.4	28.4	30.5	32.3	34.0	39.4	31.3	36.1	39.8	37.1
남성	19.4	23.8	25.7	24.4	25.5	28.7	30.7	31.8	29.1	37.5	41.3	34.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7~2015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각 연도.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모든 국가 기술 자격 증	전체	22,971,529	23,828,228	24,578,448	25,212,506	25,742,540	26,338,264	26,927,995	27,576,064
	여성	6,325,221	6,714,424	7,048,298	7,310,373	7,515,071	7,750,273	7,976,341	8,228,544
	남성	16,646,308	17,113,804	17,530,150	17,902,133	18,227,469	18,587,991	18,951,654	19,347,121
	여성 비율	27.5	28.2	28.7	29.0	29.2	29.4	29.6	29.8
기술사	전체	35,612	37,708	39,637	41,305	42,712	44,070	45,154	46,233
	여성	639	732	835	927	994	1,081	1,140	1,210
	남성	34,973	36,976	38,802	40,378	41,718	42,989	44,014	45,023
	여성 비율	1.8	1.9	2.1	2.2	2.3	2.5	2.5	2.6
기능장	전체	17,038	19,015	21,357	24,418	27,974	31,811	35,465	39,142
	여성	652	811	916	1,037	1,200	1,349	1,528	1,706
	남성	16,386	18,204	20,441	23,381	26,774	30,462	33,937	37,436
	여성 비율	3.8	4.3	4.3	4.2	4.3	4.2	4.3	4.4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주: 1975년부터 각 연도까지 각각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수임.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단위: 천 명, %)

구분	성별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직업훈련 참여자	참여비율
2007.3	전체	8,995	6,184	31.3
	여성	1,772	1,401	20.9
	남성	7,223	4,784	33.8
2008.3	전체	9,205	6,815	26.0
	여성	1,840	1,477	19.7
	남성	7,365	5,338	27.5
2009.3	전체	9,230	3,031	32.8
	여성	1,777	437	24.6
	남성	7,453	2,594	34.8
2010.3	전체	9,262	3,208	34.6
	여성	1,773	471	26.6
	남성	7,489	2,737	36.5
2011.3	전체	9,458	3,511	37.1
	여성	1,828	507	27.7
	남성	7,630	3,004	39.4
2012.3	전체	9,524	3,787	39.8
	여성	1,839	545	29.6
	남성	7,685	3,242	42.2
2013.3	전체	9,768	4,764	48.8
	여성	1,864	680	36.5
	남성	7,904	4,084	51.7
2014.3	전체	10,107	5,099	50.5
	여성	1,990	814	40.9
	남성	8,118	4,285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라. 복지

〈부표 1-40〉 빈곤 가구주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10.1	10.0	9.1	9.3	9.4	9.5	10.1
여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20.1	21.9	17.6	17.5	17.3	18.8	18.0
남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8.3	7.8	7.5	8.0	8.2	8.0	8.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주: 1) 빈곤 가구주 가구는 전가구(농어가가구 제외)의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빈곤율을 사용함.

2) 빈곤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가구 비율로 설정함.

3) 1인 가구와 농어가 가구는 제외함.

4)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추계한 것임.

〈부표 1-41〉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계	14,432,362	14,597,002	14,881,086	15,448,980	16,317,211	16,999,768	17,518,908	17,915,989	18,432,294	19,080,383
	여성	5,144,778	5,305,735	5,556,287	5,951,043	6,497,813	6,970,843	7,282,238	7,574,426	7,938,292	-
	남성	9,287,584	9,291,267	9,324,799	9,497,937	9,819,398	10,028,925	10,236,670	10,341,563	10,494,002	-
국민연금*	계	13,159,939	13,309,906	13,571,581	14,129,092	14,986,354	15,663,881	16,169,339	16,554,121	17,056,789	17,659,255
	여성	4,637,367	4,780,656	5,014,961	5,397,122	5,931,615	6,395,846	6,692,641	6,967,593	7,315,852	7,707,145
	남성	8,522,572	8,529,250	8,556,620	8,731,970	9,054,739	9,268,035	9,476,698	9,586,528	9,740,937	9,952,110
공무원연금	계	1,021,771	1,030,256	1,047,897	1,052,407	1,057,958	1,064,472	1,072,610	1,081,147	1,093,038	1,107,972
	여성	396,414	408,547	420,966	428,179	435,467	445,641	454,954	468,031	480,124	493,705
	남성	625,357	621,709	626,931	624,228	622,491	618,831	617,656	613,116	612,914	614,267
사학연금	계	250,652	256,840	261,608	267,481	272,899	271,415	276,959	280,721	282,467	313,156
	여성	110,997	116,532	120,360	125,742	130,731	129,356	134,643	138,802	142,316	-
	남성	139,655	140,308	141,248	141,739	142,168	142,059	142,316	141,919	140,151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주: 국민연금가입자 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부표 1-42〉 장애인 고용률

(단위: %)

구분	2008	2010	2011	2013	2014	2014	2015	2016
계	37.7	36.0	35.5	36.0	36.6	37.0	34.8	36.1
여성	23.7	23.0	22.7	20.9	22.5	19.8	21.0	20.8
남성	47.6	45.6	44.8	46.9	46.9	49.4	44.7	4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482,719	1,458,198	1,379,865	1,300,499	1,258,582	1,237,386	1,554,484	1,539,539
여성	638,061	626,798	594,955	562,115	547,324	543,391	854,262	839,804
남성	844,658	831,400	784,910	738,384	711,258	693,935	700,222	699,73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5	여성	53.7	28.9	9.1	6.3	2.0
	남성	18.8	31.6	18.3	21.8	9.5
	전체	35.1	30.3	14.0	14.6	6.0
2000	여성	39.4	31.7	10.4	14.4	4.1
	남성	13.4	30.0	16.0	28.8	11.6
	전체	23.5	30.7	13.9	23.3	8.7
2005	여성	29.1	35.5	13.4	16.9	5.1
	남성	7.8	27.7	18.7	31.3	14.4
	전체	16.5	30.8	16.6	25.5	10.6
2008	여성	28.9	38.4	11.8	16.4	4.6
	남성	7.8	29.2	18.8	30.1	14.1
	전체	16.5	33.0	15.9	24.4	10.2
2011	여성	22.1	40.2	15.1	16.6	5.9
	남성	4.4	27.5	20.6	31.0	16.5
	전체	11.8	32.9	18.3	25.0	12.0
2014	여성	21.0	36.8	14.2	19.3	8.6
	남성	4.7	23.0	17.7	34.5	20.2
	전체	11.6	28.8	16.2	28.1	1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주: 25세 이상 장애인.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967,326	2,246,965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여성	743,682	901,408	1,048,979	1,052,781	1,050,669	1,047,506	1,045,582	1,043,464	1,053,463
남성	1,223,644	1,345,557	1,468,333	1,466,460	1,460,490	1,463,606	1,448,878	1,446,943	1,457,58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8,536,966	9,385,239	10,131,058	10,675,437	11,152,354	11,571,213	11,930,602	12,363,063	12,655,202
여성	2,960,097	3,374,119	3,820,635	4,105,637	4,367,654	4,599,514	4,815,795	5,064,769	5,244,088
남성	5,576,869	6,011,120	6,310,423	6,569,800	6,784,700	6,971,699	7,114,807	7,298,294	7,411,1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마. 보건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격차(여성/남성)
2005	0.939	0.926	0.953	0.972
2007	0.931	0.909	0.952	0.953
2008	0.937	0.918	0.955	0.961
2009	0.948	0.931	0.964	0.975
2010	0.948	0.931	0.966	0.964
2011	0.947	0.932	0.962	0.969
2012	0.948	0.934	0.963	0.970
2013	0.945	0.929	0.962	0.966
2014	0.948	0.934	0.963	0.970
2015	0.950	0.940	0.962	0.97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세 이상.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60.0	65.3	66.0	68.2	72.6	72.9	72.1	74.8	76.1	77.7
여성	56.3	62.9	64.0	66.5	71.0	71.3	70.3	73.1	74.6	76.5
남성	63.0	67.3	67.8	69.6	73.9	74.2	73.7	76.2	77.5	7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주 :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전체	43.8	51.6	47.2	46.8	48.5	44.3	42.4	47.7	46.3
여성	42.9	46.7	44.7	42.6	41.4	40.2	39.0	43.7	42.3
남성	53.6	56.7	53.9	51.1	49.8	48.5	47.2	51.8	5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부표 1-50〉 요양급여 (청구)수급자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506,065	9,322,539	10,452,402	11,062,559	11,981,351	12,742,633	14,039,627	13,897,278
여성	4,643,349	5,100,227	5,732,406	6,113,060	6,662,258	-	-	-
남성	3,862,721	4,222,312	4,719,996	4,949,499	5,319,093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단위: 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79.2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여성	82.5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남성	75.9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자료: 통계청, 「생명표」.

〈부표 1-52〉 모성사망비

(단위: 출생아 10만명당,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모성사망수	72	58	60	74	81	48	50	48	38	34
모성사망비	15	12	13.5	15.7	17.2	9.9	11.5	11.0	8.7	8.4
모성사망률	0.5	0.4	0.45	0.55	0.61	0.37	0.38	0.37	0.30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출산율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0
청소년 출산율	2.2	1.7	1.7	1.8	1.8	1.8	1.7	1.6	1.4	1.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1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세 이상	34.6	35.1	27.1	31.0	29.8	27.9	27.0	23.8	25.5	29.6
	65세 이상	30.5	31.2	26.8	25.5	22.0	23.2	21.2	22.0	17.0	18.5
여성	19세 이상	34.6	35.2	30.3	33.3	31.4	30.4	30.3	25.7	27.2	30.5
	65세 이상	33.9	36.8	33.9	30.6	29.4	29.8	27.4	28.3	21.0	23.2
남성	19세 이상	34.6	35.0	23.7	28.6	25.1	25.4	23.5	21.8	23.6	28.6
	65세 이상	25.1	22.8	16.3	18.0	11.4	13.8	12.3	13.2	11.4	12.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주: 19세 이상 인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여성	남성										
위	8,935	17,885	9,900	20,119	10,405	21,532	9,961	20,367	9,767	20,087	9,662	19,545
대장	8,757	12,762	10,116	15,367	11,138	17,441	11,131	16,739	10,796	16,182	10,879	15,911
간	3,931	11,554	4,097	12,054	4,356	12,358	4,143	12,201	4,120	12,058	4,025	11,732
유방	11,966	36	13,604	62	16,087	74	17,336	62	18,304	77	-	19,142
자궁 (경부, 체부)	5,150	-	5,566	-	5,731	-	5,899	-	5,714	-	-	3,582

자료: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2015)

(단위: %)

구분	비만	고혈압	당뇨병 (30세 이상)	이상지혈증
전체	34.1	30.4	10.6	16.5
여성	28.8	26.9	9.4	22.1
남성	39.6	34.2	12.0	16.9
구분	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B형 간염 (10세 이상)	빈혈 (10세 이상)	만성콩팥병 (30세 이상)
전체	12.3	3.3	6.8	4.1
여성	4.9	2.9	10.4	3.9
남성	20.8	3.7	3.2	4.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단위: 일)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0.8	0.8	0.7	0.6	0.6	0.7	0.8
여성	0.8	0.7	0.6	0.6	0.6	0.7	0.9
남성	0.9	0.8	0.8	0.6	0.6	0.8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0세 이상 인구, 평균외병일수.

〈부표 1-58〉 자살 생각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1	19.1	22.8	14.4
2005	18.5	23.0	13.9
2007	15.0	20.4	9.4
2008	17.4	22.9	11.8
2009	16.4	22.2	10.5
2010	15.0	20.3	9.5
2011	13.9	17.5	10.1
2012	13.3	17.2	9.4
2013	4.6	5.7	3.5
2015	5.1	6.3	3.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주: 1) 19세 이상.

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바. 안전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전체	11.3	13.8	9.5	13.2
여성	9.2	11.4	7.4	10.6
남성	13.4	16.2	11.7	15.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60〉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5	18,583	14,847	3,736	79.9
2010	25,333	20,930	4,403	82.6
2011	28,097	23,544	4,553	83.8
2012	26,135	22,381	3,754	85.6
2013	29,019	25,400	3,619	87.5
2014	24,959	21,722	3,237	87.0
2015	33,145	29,617	3,528	89.4
2016	24,808	21,751	3,057	87.7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 2016년은 경찰청 자료.
 주: 미상 제외.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05	11,757	10,365	24.1
2006	13,573	12,501	27.7
2007	13,634	12,361	27.7
2008	15,094	13,577	30.5
2009	16,156	14,902	32.5
2010	19,939	17,652	39.8
2011	22,034	18,591	43.4
2012	21,346	17,892	41.9
2013	26,919	23,839	52.6
2014	29,863	28,420	58.2
2015	31,063	29,981	60.3
2016	29,357	28,197	56.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단위: 건, %)

구분	처분인원	기소	기소율
2004	17,294	2,429	14.0
2005	15,498	2,161	13.9
2006	13,531	1,972	14.6
2007	12,807	1,757	13.7
2008	13,370	1,841	13.8
2009	12,193	1,262	10.4
2011	6,227	1,103	17.7
2013	19,561	2,959	15.1
2015	44,819	3,856	8.6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83	100	100	159	327	312
남성 피해자	5	10	6	6	24	26
여성 피해자	78	90	94	153	303	286
여성 비율	94.0	90.0	94.0	96.2	92.7	91.7

자료: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주: 불상은 제외.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 수	33,747	36,705	49,151	76,551	29,510	23,758	18,190	17,469	23,672	20,489
처 분 계	31,794	38,542	49,288	77,682	30,639	22,467	19,186	17,918	22,971	20,770
기 소	6,587	7,169	8,177	12,388	5,839	5,506	5,831	6,548	9,027	8,151
불 기 소	23,019	28,655	39,418	61,572	22,419	15,409	11,684	9,590	11,660	9,831
기 타	2,188	2,718	2,693	3,722	2,111	1,552	1,671	1,780	2,284	2,788

자료: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주: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3세 미만	1,180	1,057	1,127	1,172	1,208	1,272
13세~20세	6,218	6,883	7,834	8,719	8,322	7,753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13세 미만은 13세미만자 대상 성폭력특별법 위반 건수임.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단위: 개소,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영방법	계	16	16	17	18	18	18	18	18
	위탁	13	13	14	15	15	15	15	15
	직영	3	3	3	3	3	3	3	3
종사자수	계	146	181	192	224	222	235	253	269
	상근직	146	181	192	224	222	235	253	269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사. 가족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3:30	1:27
여성	5:14	2:50	4:53	2:36	4:41	2:34	4:33	2:30
남성	0:54	0:27	0:55	0:31	1:04	0:36	1:08	0:4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인구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5,913	44,333	41,862	49,932	51,644	50,596	45,234	43,712	42,456	39,636
여아	21,283	20,462	19,532	23,676	24,656	24,183	21,747	21,151	20,654	19,112
남아	24,630	23,871	22,330	26,256	26,988	26,413	23,487	22,561	21,802	20,524
성비	115.7	116.7	114.3	110.9	109.5	109.2	108.0	106.7	105.6	107.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	56.1	54.8	55.7	54.6	56.5
여성	47.7	54.6	53.1	54.2	56.6	54.7
남성	53.1	57.7	56.6	58.2	53.8	58.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의 만족정도, 15세 이상 인구. (2016년에는 13세 이상 인구)

〈부표 1-70〉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185	29,145	35,400	41,733	58,136	64,071	69,618	76,831	87,339	89,795
여성	20,875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82,467	82,179
남성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여성	남성									
비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1	0:01	0:00	0:01	0:02	0:01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0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0: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요일평균 노인부양 시간.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가구	10,739,411	11,120,410	11,546,820	12,110,142
여성가구주	439,662	624,815	1,079,082	1,397,378
남성가구주	10,299,749	10,495,595	10,467,738	10,712,764
여성가구주 비율	4.1	5.6	9.3	11.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1	어린이집수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아동수(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이용률	83.2	90.8	79.4	82.1	82	84.9	83.9	76.8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아동수(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이용률	86.4	91.8	80.3	83	84.9	90.9	83.5	77.8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아동수(현원)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이용률	83.4	90.8	77.9	82.3	82.1	86	81.2	77
2014	어린이집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아동수(현원)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이용률	83.1	88.5	76.3	80	81.9	87.1	80.6	76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아동수(현원)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이용률	81.1	87.9	73.5	77.4	79.4	86.1	84.0	75.6
2016	어린이집수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아동수(현원)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이용률	82.1	89.1	73.9	77.5	80.4	87.6	83.9	75.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41,104	72,2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금액	46,041	166,631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247,33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아. 문화·정보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미취업자	요일평균	6:59	7:01	6:45	6:13
	여성	6:12	6:17	6:03	5:38
	남성	8:46	8:42	8:23	7:33
취업자	요일평균	3:56	4:08	3:54	3:36
	여성	3:20	3:41	3:23	3:15
	남성	4:15	4:25	4:11	3:5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인구.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계	21.8	19.3	27.0	26.0	27.2
여성	20.5	18.0	25.8	24.9	26.9
남성	23.2	20.7	27.1	27.1	27.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여성	94.7	94.4	94.0	94.4	96.4	95.3	93.6
남성	105.3	105.8	106.0	105.6	103.6	104.8	106.4
여성/남성×100	89.9	89.2	88.7	89.4	93.1	90.9	88.0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주: 전체를 100.0으로 두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준을 구함, 종합지수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0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2011	계	58.6	-	25.2	25.0	2.6	81.8	-	26.4	20.7	24.3
	여성	59.2	-	28.7	30.2	3.3	85.5	-	28.4	24.4	14.9
	남성	58.0	-	21.4	19.6	1.9	77.8	-	24.3	16.8	34.2
2013	계	63.4	-	21.7	24.2	2.4	85.9	-	25.8	19.4	22.0
	여성	63.8	-	25.0	29.2	3.0	88.1	-	27.3	22.8	12.8
	남성	63.0	-	18.2	18.9	1.8	83.6	-	24.2	15.9	31.6
2015	계	66.8	-	20.6	22.4	1.8	88.1	-	26.6	19.1	21.1
	여성	67.7	-	23.5	27.1	2.2	90.2	-	28.4	22.3	12.8
	남성	65.8	-	17.6	17.4	1.2	85.8	-	24.7	15.7	30.0
2017	계	66.5	-	20.8	22.6	1.9	88.4	-	25.1	20.3	25.2
	여성	67.1	-	24.3	27.5	2.6	90.4	-	27.2	24.5	15.5
	남성	66.0	-	17.1	17.4	1.3	86.2	-	22.9	16.0	35.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2011년 이후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 변수 없음.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48,850	512,381	525,199	513,850	518,364	525,638	574,465	580,202
여성	198,781	216,106	220,938	207,041	208,959	231,832	245,281	247,861
남성	250,069	296,275	304,261	306,809	309,405	293,806	329,184	332,341
여성비율	44.3	42.2	42.1	40.3	40.3	44.1	42.7	4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구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한달에 2~3번 정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매일
2010	전체	41.5	4.4	8.8	9.5	11.7	5.2	6.6	2.9	5.6
	여성	40.5	2.9	4.8	8.3	12.7	4.9	6.8	2.9	4.9
	남성	42.5	5.9	12.7	10.7	10.7	5.5	6.5	2.9	6.2
2012	전체	35.0	5.0	8.3	7.4	10.6	4.2	6.4	2.3	4.0
	여성	34.9	3.0	5.1	6.4	11.5	4.1	6.7	2.1	4.1
	남성	35.1	7.0	11.5	8.5	9.7	4.3	6.1	2.6	3.9
2014	전체	43.5	10.8	11.2	10.2	12.7	5.2	5.9	4.0	5.5
	여성	43.9	7.9	8.2	9.2	14.4	5.3	6.2	3.8	5.0
	남성	43.2	13.7	14.3	11.2	11.0	5.1	5.7	4.3	6.0
2015	전체	45.3	9.6	10.6	10.4	12.7	6.0	6.5	2.5	7.2
	여성	46.7	6.1	7.2	10.8	14.0	5.7	6.9	2.2	7.1
	남성	44.0	13.2	14.1	10.1	11.5	6.4	6.1	2.7	7.2
2016	전체	49.3	11.0	10.2	12.3	16.9	4.6	9.8	2.5	3.1
	여성	49.3	10.0	7.4	11.4	18.3	4.4	9.9	2.2	3.1
	남성	49.2	12.0	13.1	13.2	15.5	4.8	9.8	2.7	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주: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컴퓨터 활용 여부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주 평균 사용시간	
2005	전체	74.2	72.8	13.3
	여성	68.7	67.2	12.1
	남성	79.7	78.5	14.3
2010	전체	78.4	77.8	14.7
	여성	73.1	72.4	13.5
	남성	83.7	83.2	15.8
2012	전체	78.7	78.4	16.3
	여성	73.7	73.2	14.8
	남성	83.8	83.6	17.5
2013	전체	75.8	82.1	13.9
	여성	70.6	78.0	12.4
	남성	81.0	86.2	15.3
2014	전체	74.1	83.6	13.6
	여성	68.4	79.8	12.3
	남성	79.7	87.3	14.9
2015	전체	73.4	85.1	13.6
	여성	68.2	81.9	12.4
	남성	78.6	88.4	14.8
2016	전체	72.2	88.3	14.3
	여성	66.9	85.6	12.9
	남성	77.6	91.0	15.6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만 3세 이상, 단, 2006년 이전은 만 6세 이상.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① 경제 활동 분야 (21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 활동 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 업자 제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정규직근로자의 비율	임금근로자 중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한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부가 조사(근로형태별)」	반기별 (3월,8월)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수준	동일직종 및 경력년수별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비율	고용노동부 *미생산	-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30대 고용률	만 30대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 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	1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 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5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성별 청년층 고용률	15~29세 경제활동인구수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현재 취업자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고용노동부 *미생산	-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1년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시간제 선택이 자발적이고 임금, 승인, 4대 보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근로자 규모	고용노동부 *미생산	-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맞벌이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통계청 *미생산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유형별(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의무 이행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1년
② 의사 결정 분야 (13개)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에성의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IPU	비주기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공식통계 없음	비주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년
③ 교육 직업 훈련 분야 (14개)	평균 교육년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 (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재적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여성비율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여성비율 혹은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 여성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1년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유학생))*100으로 계산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부, 내부자료	1년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부, 내부자료	-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2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실태조사』	1년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④ 복지 분야 (7개)	비빈곤 가구주 비율	전체 가구 중 비빈곤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비빈곤 가구주: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지 않는 가구(시장소득 기준이며 1인가구 제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3년 (1년)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⑤ 보건 분야 (12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하는 비율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주관적 건강상태	15세 이상 인구의 자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상태 평가로 건강한 상태 비율(매우좋다+좋은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건강수명 성비	건강수명은 출생 시 기대수명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햇수를 뺀 기대수명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모성사망비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 10만 명당 수치로 계산 한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⑥ 안전 분야 (9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사회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비율 ※ 가족폭력이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또는 미검률	전체 성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발생된 성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가정폭력 재범률	전체 가정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가정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⑦ 가족 분야 (9개)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만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점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핀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설립주체별로 제공되는 보육시설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출산휴가 사용 건수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산업 중 하나인 출산전후 휴가를 피보험자가 사용한 건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⑧ 문화 정보 분야 (9개)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교제 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여가만족도	13세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정보화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년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부록 3>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³²⁾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1995년 UNDP가 GDI와 GEM을 발표한 이래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성평등지수를 발표하게 된다. 2017년 현재 한국정부에서 관심있게 점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는 WEF의 GGI와 UNDP의 GII이다. 그런데 두 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상반된다. 즉, GGI는 2017년 한국의 GGI 순위는 144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권을 보이지만 GII는 2017년 발표에서 115위 중 10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두 지수의 서로 상반된 결과는 지표구성과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공표될 때 마다 국내 언론은 물론 관련 공무원, 연구자, 여성관련 NGO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GI와 GII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한국의 순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1) 성격차지수의 특징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³³⁾이 각국의 성격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통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의 부문에 대한 성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지수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GI는 ‘수준’보다 ‘격차’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

32) 김태홍 외(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89-140. 인용 및 수정

33)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에 있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 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함.

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하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GGI는 수단(means)에 따른 차이보다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한다. GGI는 성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GGI는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 증진에 더 관심이 있다. GGI는 여성의 권한부여 수준이 아닌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의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지표구성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GI의 첫 번째 영역인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부표 3-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지 표	측정 내용	산식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frac{15\sim64\text{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sim64\text{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경영자 의견조사*를 통해 측정	7점 척도의 설문조사(KDI 실시) (Executive Opinion Survey)
추정소득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인구의 결합으로 추정된 소득의 성비	$\frac{\text{여성 추정소득}}{\text{남성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	$\frac{\text{관리직 중 여성비율}}{\text{관리직 중 남성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비율 성비	$\frac{\text{전문직 중 여성비율}}{\text{전문직 중 남성비율}}$

주: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지표 구성은 크게 문해율과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문해율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가장 기초적 능력이다. 취학률은 대상연령 집단이 학교에 얼마나 재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로 구분하고 제시하고 있어 교육성취 영역은 4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부표 3-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지 표	측정 내용	산식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성비	$\frac{\text{여성문해율}}{\text{남성문해율}}$
초등교육 취학률	초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초등학교 취학률}^*}{\text{남성 초등학교 취학률}}$ * $\frac{\text{6~11세 초등학교 재적학생수}}{\text{6~11세 인구}}$
중등교육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중등학교 취학률}^*}{\text{남성 중등학교 취학률}}$ * $\frac{\text{12~17세 중등학교 재적학생수}}{\text{12~17세 인구}}$
고등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고등교육 취학률}^*}{\text{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 $\frac{\text{고등교육 재적학생수}}{\text{18~22세 인구}}$

주: 1)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구성 지표는 출생아 성비와 건강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이다. 출생아 성비는 남아 선호가 강한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낙태와 같은 여성실종(missing women) 현상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선정되었다. 건강기대수명은 폭력, 질병, 영양 결핍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실된 수명을 제외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 즉, 이 지표는 한 국가의 삶의 질을 반영한 기대수명을 측정할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부표 3-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지 표	측정 내용	산식
출생 성비	출생아 성비	$\frac{\text{여아출생아수}}{\text{남아출생아수}}$
건강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성비	$\frac{\text{여성 건강기대수명}}{\text{남성 건강기대수명}}$

주: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수장이란 총리 혹은 대통령의 직급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현재 시점에서 지난 50년 간 남녀의 재직기간으로 측정한다.

〈부표 3-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지 표	내용 및 산정방법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중/국회의원 남성비중	$\frac{\text{국회의원 중 여성비율}}{\text{국회의원 중 남성비율}}$
장관 비율	장관 여성비중/장관 남성비중	$\frac{\text{장관 중 여성비율}}{\text{장관 중 남성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여성 재직년 수/남성 재직년 수	$\frac{\text{지난 50년간 여성 국가수장 재직기간}}{\text{지난 50년간 남성 국가수장 재직기간}}$

3)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ILO와 UNDP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UNESCO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CIA의 World Factbook과 WHO 자료를, 정치 권한 부여 영역은 IPU와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ILO, UNESC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부표 3-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부문	지 표	자료원
경 제 참여와 기 회	경제 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주요노동시장지표(KILM)
	유사업무 임금수준	세계경제 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추정소득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7/2008) 방법론에 기초하여 WEF에서 집계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ILO, LABORSTA DB
	전문·기술직 비율	ILO, LABORSTA DB
교 육 성취도	문해율	UNESCO 교육통계지표;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초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중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고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건 강과 생 존	출생 성비	UNPD,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정 치 권 한 부 여	국회의원 비율	IPU,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장관 비율	IPU,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WEF에서 산정

자료: WEF(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p. 4. 번역

4) 측정방법

GGI는 성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hard data)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soft data)인 척도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다음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 1단계 :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하고,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한다.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을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하여 성비를 산정한다.
- 2단계 :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지표별 표준편차의 변화(1%p 변화)를 이용한다.
- 3단계 : 각 영역별 지수(점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별 값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 4단계 : 종합지수는 각 영역별 평균값을 단순 평균해 산정한다.

* 산정된 지수 해석 시 유의사항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지표별 가중치는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차원의 점수 산정에만 활용된다. 그리고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국가의 성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한다.

〈부표 3-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 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 +0.221+0.149 +0.121) ×(1/4)
	유사업무 임금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문해율	0.191	(0.191+0.459 +0.230+0.121)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0.307	(0.307+0.693) ×(1/4)	
	건강 기대 수명	0.693		
정치 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0.310	(0.310+0.247 +0.443)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출처: 주재선 외(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95. 재인용.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GI 수준

한국의 2017년도 GGI점수는 0.650점으로 2016년의 0.649점에 비해 0.001점 상승한다. 하지만 한국의 GGI 순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개선으로 인해 전체 144개국 중 118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보면 4개의 분야 중 경제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분야의 순위는 각각 2단계씩 상승하고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은 각각 3단계와 8단계 하락한다. 경제참여와 기회는 점수가 하락함에도 순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적 성취는 점수와 순위가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정치적 권한은 성격차 점수와 순위가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3-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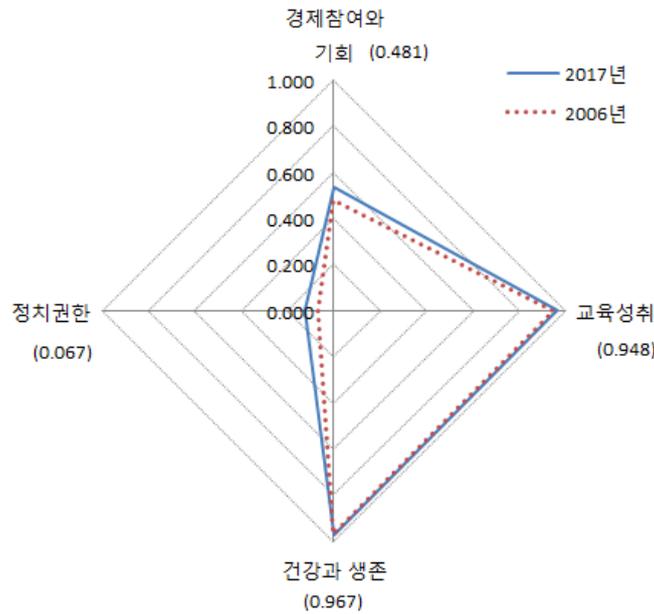
연 도	순 위	점 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27(90위)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17-2006 점수변화	0.034 ↑		0.052 ↑	0.012 ↑	0.006 ↑	0.060 ↑

지표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2017년 14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순위 상승하고 6개 지표가 순위 하락, 3개의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사업무 임금성비, 전문직, 장관비율, 국가수장 재직기간 등의 지표는 상승하며,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학교 취학률, 출생성비, 국회의원 비율 등은 순위가 하락한다. 유사업무 임금성비는 전년대비 0.014점이 높아졌고, 장관비율은 0.037점, 국가수장 재임기간은 0.010점 높아졌다. 한편 전문직 지표는 2015년 통계활용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2016년에도 크게 개선된 후 2017년은 점수 개선 없이 순위 개선만 약간 높아졌다. 반면 임금격차의 증가로 인해 추정소득은 점수하락으로 인해 2016년 120위에서 2017년 121위로 하락하며, 관리직 비율,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점수는 소폭 개선되지만 순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3-8〉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 GGI 비교

4개 분야, 14개 지표	순 위			점 수			
	2016	2017	증감	2016	2017	증감	
전 체	116	118	2↓	0.649	0.650	0.001↑	
경제 참여 및 기회	123	121	2↑	0.537	0.533	0.004↓	
	경제 활동 참가율	91	91	-	0.731	0.732	0.001↑
	유사업무 임금성비	125	121	4↑	0.524	0.510	0.014↓
	추정소득	120	121	1↓	0.450	0.447	0.003↓
	관리직 비율	114	117	1↓	0.117	0.117	-
	전문직 비율	78	76	2↑	0.928	0.928	-
교육 적 성취	102	105	3↓	0.964	0.960	0.004↓	
	문해율	66	-	-	0.993	-	-
	초등학교 취학률	79	84	5↓	0.994	0.995	0.001↑
	중등학교 취학률	99	101	2↓	0.991	0.992	0.00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12	112	-	0.754	0.765	0.011↑
건강 과 생존	76	84	8↓	0.973	0.973	-	
	출생성비	125	132	7↓	0.935	0.935	-
	건강기대수명	1	1	-	1.060	1.060	-
정치 적 권한	92	90	2↑	0.120	0.134	0.014↑	
	국회의원 비율	90	97	7↓	0.205	0.205	-
	장관 비율	128	115	13↑	0.063	0.100	0.037↑
	국가수장 재임기간(50년간)	29	28	1↑	0.094	0.104	0.010↑

2006년 첫 발표 이래 GG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 개선은 매우 낮다. 2006년과 비교하면 4개 분야별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선수준은 매우 낮아, 종합순위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점수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하여 0.034점 상승에 그쳐서, 종합순위는 2008년 이후 100위권으로의 재진입을 못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2006년 대비 경제참여와 성취가 0.052점, 교육적 성취가 0.012점, 정치적 권한 0.060점, 건강과 생존이 0.006점 순으로 개선정도가 높았으나, 순위로 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분야는 동기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록 그림 3-1] 부문별 GGI 비교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OECD회원국의 GGI 수준을 보면 34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가 1위부터 5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순위 118위로, OECD회원국 내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34개 국가 중 33번째로 터키 다음에 위치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노르웨이가 0.816점을 기록해 전체 8위지만 OECD 회원국 중 첫 번째 순위이고, 스웨덴, 슬로베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점수는 0.533점으로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0.265점 낮으며, 전체 1위(브룬디)와는 0.378점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4개국 중 핀란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등 15개 국가가 완전 평등상태인 '1'점을 기록하여 한국은 0.960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순위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은 고등교육취학률의 통계적 문제 때문이다. 즉, 고등교육취학률은

총취학률로 산정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취학률은 남녀가 모두 높은 수준이나,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 휴가자가 취학률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성격차가 큰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일본의 5개 국가가 완전평등 상태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높은 0.973점을 보이나 OECD 회원국 중 20위로 높은 순위는 아니다. 단, 건강과 생존 분야는 국가 간 성격차는 거의 없어, 순위는 큰 의미를 가지 못한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0.750점으로 1위이며, 노르웨이가 0.530점으로 다음으로 높다. 이에 비해 한국은 0.134점으로 OECD 회원국 중 29위를 한다. 한국의 정치적 권한 분야 점수는 아이슬란드와 비교하여 무려 0.616점이 더 낮다.

〈부표 3-9〉 GGI 1위 국가와 한국 간의 점수격차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영향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영역별 1위 (a)	1	0.878	1	0.911	1	1.000	1	0.980	1	0.750
1위 국가 (b)	1	0.878	14	0.798	57	0.995	114	0.969	1	0.750
대한민국 (c)	118	0.650	121	0.533	105	0.960	84	0.973	90	0.127
점수격차 1(a-c)	-	0.228	-	0.378	-	0.040	-	0.007	-	0.623
점수격차 2(b-c)	-	0.228	-	0.265	-	0.035	-	-0.004	-	0.623

〈부표 3-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7년)

국가명	종합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	1	0.878	14	0.798	57	0.995	114	0.969	1	0.75
노르웨이	2	0.83	8	0.816	38	0.999	80	0.973	4	0.53
핀란드	3	0.823	16	0.793	1	1	46	0.978	5	0.519
스웨덴	5	0.816	12	0.809	37	0.999	112	0.969	8	0.486
슬로베니아	7	0.805	13	0.801	1	1	1	0.98	11	0.44
아일랜드	8	0.794	50	0.71	1	1	96	0.971	6	0.493
뉴질랜드	9	0.791	23	0.768	43	0.998	115	0.969	12	0.43
프랑스	11	0.778	64	0.683	1	1	54	0.977	9	0.453
독일	12	0.778	43	0.72	98	0.97	70	0.975	10	0.447
덴마크	14	0.776	36	0.728	1	1	95	0.971	16	0.406
영국	15	0.77	53	0.705	36	0.999	100	0.971	17	0.404
캐나다	16	0.769	29	0.744	1	1	105	0.97	20	0.361
스위스	21	0.755	31	0.743	63	0.993	90	0.972	28	0.314
스페인	24	0.746	81	0.657	45	0.998	81	0.973	22	0.354
벨기에	31	0.739	46	0.716	1	1	63	0.976	37	0.264
네덜란드	32	0.737	82	0.657	1	1	108	0.97	25	0.323
포르투갈	33	0.734	35	0.73	70	0.992	55	0.977	43	0.24
호주	35	0.731	42	0.724	1	1	104	0.97	48	0.232
에스토니아	37	0.731	38	0.726	1	1	36	0.979	52	0.218
폴란드	39	0.728	55	0.702	31	1	1	0.98	49	0.23
이스라엘	44	0.721	65	0.681	1	1	98	0.971	47	0.232
미국	49	0.718	19	0.776	1	1	82	0.973	96	0.124
오스트리아	57	0.709	80	0.66	84	0.988	72	0.975	54	0.216
룩셈부르크	59	0.706	76	0.667	1	1	86	0.973	66	0.184
칠레	63	0.704	117	0.573	39	0.999	47	0.978	36	0.266
슬로바키아	74	0.694	79	0.662	1	1	1	0.98	89	0.135
그리스	78	0.692	73	0.67	76	0.991	89	0.973	88	0.136
멕시코	81	0.692	124	0.518	53	0.996	58	0.977	34	0.276
이탈리아	82	0.692	118	0.571	60	0.995	123	0.967	46	0.234
체코	88	0.688	92	0.643	1	1	1	0.98	91	0.13
헝가리	103	0.67	68	0.675	68	0.992	36	0.979	138	0.035
일본	114	0.657	114	0.58	74	0.991	1	0.98	123	0.078
한국	118	0.65	121	0.533	105	0.96	84	0.973	90	0.134
터키	131	0.625	128	0.471	101	0.965	59	0.977	118	0.088

자료: WEF(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가. 성개발지수 소개

1) 성개발지수의 특징³⁴⁾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에 처음 시작하여 2009년까지 매년 발표를 해왔다. 기존의 GDI가 HDI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의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표 3-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9년 155개국 중 25위	2015년 3그룹
발표기간	1995년-2009년	2014년(2013년 기준)~2017년(2015년 기준)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 • 초중고 취학률 • 1인당 추정소득(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 • 기대 교육년수 • 1인당 추정소득(GNI)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성불평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반영하여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 • 성별 격차를 이용하여 측정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에서의 성취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34) GDI 지표구성은 작년과 변화가 없어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91-95을 인용함.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표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률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부표 3-12〉 GDI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설명
건강한 삶	출생시 기대여명	0세의 평균 기대수명
교육(지식)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적절한 표준 삶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와 바로와 리(Barro & Lee, 201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대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세계 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

〈부표 3-13〉 GDI 지표별 자료원

지 표	자 료 원
출생시 기대여명	-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database.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 Barro, R.J., and J.-W. Lee.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revision. www.barrolee.com . -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 –.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New York. www.unicef.org/statistics/index_24302.html . - ICF Macro. 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www.measuredhs.com .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추정소득 (PPP\$)	- HDR 연구진이 세계노동기구(ILO),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세계은행, IMF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Key Indicators on the Labour Market:8th edition. Geneva. 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 - UN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ashington, DC. http://data.worldbank.org .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ashington, DC.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index.aspx .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산정된다.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W_m \cdot EA_f}{W_f/W_m \cdot EA_f + EA_m}$$

여기서 S_f : 여성의 임금비율, W_f/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 인구 중 여성비중이다.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GDI는 지표의 표준화를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최소값(Max(x))과 최대값(Min(x))을 설정하고 있다. 각 지표의 최대·최소값은 <부표 3-14>와 같이 활용하고 있고 표준화는 다음과 같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x - \text{Min}(x)}{\text{Max}(x) - \text{Min}(x)}$$

한편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하여 측정한다.

〈부표 3-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 표		최 소 값	최 대 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22.5	87.5
	남자	17.5	82.5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comef})^{1/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Incomem})^{1/3}$$

넷째 단계는 GDI의 산정으로 여성 HDI와 남성 HDI의 비(ratio)로 산정한다.

$$GDI = \frac{HDI_f}{HDI_m}$$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DI 수준³⁵⁾

GDI의 경우 2014년에는 점수에 따른 순위를 발표했지만, 2015년 발표부터는 순위 대신 점수의 범주를 제시하고 이를 그룹으로 묶어 발표하고 있다. 그룹은 성별수준의 절대적 차이에 따라 5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즉 성별수준의 차이가 2.5%미만이면 1그룹, 2.5%~5% 미만이면 2그룹, 5%~7.5% 미만이면 3그룹, 7.5%~10% 미만이면 4그룹, 10%이상이면 5그룹으로 범주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대신 그룹으로 범주화로 변경한 이유는 GDI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성비 비교보다는 HDI 개발수준에서 성별의 절대차이를 보여주고 이를 감소시키는

35)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pp. 220-224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것이 더 중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우리나라는 여성 HDI가 0.863, 남성 HDI가 0.929로 GDI 점수는 0.929이고 성별 HDI 차이 기준으로 3그룹에 속한다. 성별 HDI는 2014년에 비해 여성이 0.002p, 남성이 0.003p 상승하지만 남성의 HDI가 여성에 비해 높게 상승함에 따라 남성의 HDI에 대한 여성의 HDI는 0.929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다.

지표별로 보면, 한국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여성은 85.2세, 남성은 78.8세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여성은 0.2세 증가한 반면 남성은 0.3세 증가하여 남녀의 격차는 2014년 6.5년에서 2015년 6.4년으로 감소하였다. 교육관련 지표 중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여성이 11.5년, 남성이 12.9년으로 1.4년의 격차를 보였으며, 기대 교육년수는 여성이 15.8년 남성이 17.3년으로 성별격차는 1.5년으로 평균 교육년수보다 0.1년 더 크게 나타났다.

〈부표 3-15〉 한국의 GDI 수준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2011 PP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5	3그룹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4	3그룹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3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2013)		(2013)		(2002~2012)		(2000~2012)		(2013)	

주: 연도는 통계 생산 기준이며, ()는 기준 연도 중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한편 추정소득(PPP\$)은 여성이 연 21,308달러인 반면 남성은 46,018달러로 여성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추정소득은 전년대비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하여 성별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소득을 위해 사용한 통계는 국민총소득,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 남성임금기준 여성임금비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5,936천 명 여성이 11,370천 명으로 0.438을 기록한다. 이는 2000년 성비 0.411와 비교하여 0.027p 상승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경제활동인구의 성비 개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3-16〉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전 체	22,134	23,743	24,748	25,501	25,873	26,536	25,936
여 성	9,101	9,860	10,256	10,609	10,802	11,149	11,370
남 성	13,034	13,883	14,492	14,891	15,071	15,387	15,543
여성비중	0.411	0.415	0.414	0.416	0.418	0.420	0.438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 2016.12.3.

이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2015년 월평균임금은 2,362천 원, 남성은 3,780천 원으로 여성임금이 남성의 62.5%이고 2014년 63.5%와 비교하면 1.2%p 하락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추정소득의 성별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이 되었다.

〈부표 3-17〉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천 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여 성	1,167	1,673	2,019	2,204	2,368	2,362
남 성	1,855	2,630	3,159	3,404	3,718	3,780
임 금 비	62.9	63.6	63.9	64.7	63.7	62.5

주 :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2016.12.1.)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OECD국가의 GDI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순위는 넓게 퍼져있다. GDI 점수 기준으로 에스토니아가 1.032로 1위이며 한국은 0.929위로 34개국 중 33위에 위치해 있다. HDI 성별수준 차이로 구분해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에스토니아는 2등급이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 등 총 15개 국가가 성별 HDI 차이가 2.5% 미만인 1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2등급 국가는 스페인,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 16개로 나타나며, 네덜란드가 한국과 동일한 3등급으로, 터키가 4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부표 3-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5)

국 가 명	등급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대한민국	3	0.929	0.863	0.929	85.2	78.8	15.8	17.3	11.5	12.9	21,308	47,934
에스토니아	2	1.032	0.878	0.851	81.4	72.2	17.3	15.7	13.0	12.2	21,976	31,347
폴란드	1	1.006	0.857	0.852	81.5	73.6	17.2	15.5	11.9	12.0	18,928	29,658
슬로바키아	1	0.991	0.838	0.846	80.0	72.7	15.5	14.4	12.0	12.3	20,173	33,770
스웨덴	1	0.997	0.909	0.911	84.0	80.6	16.6	15.1	12.4	12.2	40,328	52,181
핀란드	1	1.000	0.895	0.895	83.8	78.2	17.6	16.5	11.5	11.1	32,069	45,882
노르웨이	1	0.993	0.944	0.951	83.7	79.7	18.3	17.1	12.8	12.7	59,800	75,314
슬로베니아	1	1.003	0.890	0.888	83.5	77.6	18.1	16.7	11.9	12.2	25,654	31,726
미국	1	0.993	0.915	0.922	81.6	76.9	17.3	15.8	13.2	13.2	42,272	64,410
프랑스	1	0.988	0.892	0.902	85.2	79.4	16.6	15.9	11.5	11.8	31,742	44,776
포르투갈	1	0.980	0.833	0.850	84.0	78.2	16.5	16.6	8.9	8.9	21,095	31,673
캐나다	1	0.983	0.911	0.926	84.1	80.2	16.8	15.9	13.3	12.9	33,288	52,026
체코	1	0.983	0.869	0.883	81.6	75.9	17.6	16.1	12.1	12.6	20,997	35,543
헝가리	1	0.988	0.830	0.840	78.8	71.6	16.0	15.2	12.0	12.1	17,787	29,567
호주	1	0.978	0.927	0.948	84.6	80.5	20.9	20.0	13.4	13.0	34,271	51,386
아일랜드	1	0.976	0.909	0.931	83.1	79.0	18.6	18.6	12.5	11.9	33,497	54,135
벨기에	1	0.978	0.881	0.901	83.4	78.5	16.7	15.9	11.2	11.6	32,416	50,358
스페인	2	0.974	0.870	0.894	85.4	80.0	18.0	17.4	9.6	10.0	24,382	41,500
아이슬란드	2	0.965	0.905	0.938	84.2	81.2	20.1	17.9	12.2	12.6	30,530	43,576
덴마크	2	0.970	0.910	0.938	82.3	78.5	20.0	18.4	12.6	12.9	36,857	52,293
이스라엘	2	0.973	0.884	0.909	84.2	80.8	16.5	15.5	12.8	12.7	23,323	39,239
룩셈부르크	2	0.966	0.881	0.911	84.1	79.6	14.0	13.7	11.6	12.3	47,539	77,291
칠레	2	0.966	0.829	0.858	84.7	79.0	16.6	16.1	9.8	10.0	14,955	28,556
영국	2	0.964	0.890	0.924	82.7	78.9	16.7	15.9	13.2	13.4	26,324	49,872
이탈리아	2	0.963	0.865	0.899	85.7	80.9	16.7	15.9	10.5	11.0	22,910	44,844
독일	2	0.964	0.908	0.942	83.4	78.7	16.9	17.3	12.9	13.6	35,878	54,440
일본	2	0.970	0.887	0.914	86.9	80.4	15.2	15.5	12.6	12.4	25,385	49,818
뉴질랜드	2	0.963	0.896	0.930	83.7	80.3	20.0	18.5	12.6	12.5	24,413	41,718
그리스	2	0.957	0.844	0.883	84.0	78.2	17.1	17.3	10.3	10.8	17,304	32,683
스위스	2	0.974	0.926	0.951	85.1	81.0	16.0	16.1	13.3	13.5	46,798	66,116
멕시코	2	0.951	0.737	0.775	79.4	74.6	13.5	13.1	8.2	8.6	10,710	22,115
오스트리아	2	0.957	0.870	0.909	84.0	79.1	16.2	15.6	10.8	11.8	29,829	57,888
네덜란드	3	0.946	0.895	0.946	83.5	79.9	18.2	18.1	11.6	12.2	30,117	62,773
터키	4	0.908	0.724	0.797	78.7	72.3	14.0	15.0	7.0	8.8	10,648	27,035
평균	-	0.974	0.875	0.898	83.3	78.1	16.5	15.9	11.5	11.8	28,397	44,732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³⁶⁾

1) 성불평등지수의 특징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젠더에 기초하여 얼마나 불리한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세 영역간의 성취에 있어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개발의 잠정적인 손실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GI의 특징을 보면 첫째, 남녀비교 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인 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해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지수 값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사망비 상승 등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I는 불평등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GII는 다른 성불평등 지수와 달리 소득변수가 제외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지수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성불평등 격차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과 국가별

36)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02-106을 인용함.

소득관련 통계가 종종 부재함에 따라 대체변수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지표구성

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성권한 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서 정치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영역에서 교육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GE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표 3-19〉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내용
생식보건 영역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권한 영역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시장 영역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의원연맹, Barro & Lee,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국제노동기구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유엔의 모성사망 추정집단의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부표 3-20〉 GII의 지표별 자료원

지표	자료원
모성 사망비	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World Bank). Maternal mortality data. www.childinfo.org/maternal_mortality_ratio.php .
청소년 출산율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
여성의원 비율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ww.ipu.org/wmn-e/classif-arc.htm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경제활동참가율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Key Indicators on the Labour Market:8th edition. Geneva. 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

주: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p. 271.

4) 측정방법³⁷⁾

GII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³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로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0과 극단 값을 처리하고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성별로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즉, 첫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0'과 극단적인 값의 처리이다. 왜냐하면 기하평균은 '0'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이에 최소값은 구성 지표 값이 '0'일 경우 0.1%로 값을 설정하였다. 반면 모성사망비는 최소값 10, 최대값 1,000을 기준으로 절단하였다. 최대값 1,000의 경우 모성사망비가 1,000을 초과하는 국가는 모성보건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규범적인 가정에 기초한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아 10만 명당 1~10명이 사망하는 국가는 동일한 보건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여기서 MMR=모성 사망률, AFR=청소년 출산율, PR_F =여성의원비율, PR_M =남성의원비율, SE=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인구비율, LFPR=경제활동 참가율이다.

37) 김태홍 외(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10-111을 인용, 수정·보완함.

38)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함. 불평등혐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음.

②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성별 합산하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영역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

③ 각 지수에 대해서 산술평균값의 기하평균을 산정하는 과정

세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 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bar{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loyment} \cdot \overline{Labourmarket}}$$

$$\text{여기서, } \overline{Health} = (\sqrt{(10/MMR) \cdot (1/AFR)} + 1)/2,$$

$$\overline{Employ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overline{Labourmarket} = (LPFR_F + LPFR_M)/2 .$$

④ 성불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불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으로 $HARM(G_F, G_M)$ 을 $G_{\bar{F}, \bar{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bar{F}, \bar{M}}}$$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³⁹⁾

1) 한국의 GII수준

2015년 기준 GII에서 한국은 전체 155개국 중 10위로, 2014년과 비교하여 13단계 상승하였다. GII 점수⁴⁰⁾는 2015년 0.067로 전년대비 0.058p 하락한다. 한국의 순위 주된 상승요인은 모성사망비의 하락에 기인한다.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의 수로 2014년 27명에서 2015년 11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지표별로 보면 청소년출산율이 2014년 2.2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감소했고 여성의원비율은 16.3%으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는 남녀 모두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하고 성별 격차도 크게 감소한다. 중등이상 교육인구를 보면 2014년은 여성 77.0%, 남성 89.1%로, 성별차이가 12.1%p였으나 2015년은 여성 88.8%, 남성 94.6%로 성별차이가 5.8%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모두가 하락하나 성별차이는 소폭 줄어들었다.

〈부표 3-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연도	순위/대상	점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15	10/155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5)	(2015)	(2015)	(2005-2015)		(2015)	
2014	23/152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3)	(2010/2015)	(2014)	(2005-2014)		(2013)	
2013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0)	(2010/2015)	(2013)	(2005~2012)		(2012)	

주: () 안은 통계 기준 연도이며, 괄호 안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39) 본 내용은 2016년 12월 15일 현재 GII가 공표되지 않아,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07-110을 수정 보완함.

40) GII점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OECD 회원국의 GII 수준

GII의 점수는 성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것으로 읽는다. 2015년 기준 공표한 GII의 순위를 보면, 스위스가 0.040으로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0.041), 네덜란드(0.044), 스웨덴(0.048), 아이슬란드(0.051), 노르웨이(0.053), 슬로베니아(0.053), 핀란드(0.056), 독일(0.066) 등이 10위권 이내에 속했고 한국은 모성사망비 등의 개선으로 인해 10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21위를 보이며, 칠레(0.322, 65위), 터키(0.328, 69위), 멕시코(0.345, 73위) 등의 국가들은 성평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부표 3-22〉 OECD 회원국의 GI 현황(2015년 기준)

국 가 명	순 위	점 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대한민국	10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스위스	1	0.040	5	2.9	28.9	96.1	97.4	62.7	74.8
덴마크	2	0.041	6	4.0	97.4	89.1	98.5	58.0	66.2
네덜란드	3	0.044	7	4.0	36.4	86.2	90.3	57.5	70.2
스웨덴	4	0.048	4	5.7	43.6	87.8	88.3	60.9	68.2
아이슬란드	5	0.051	3	6.1	41.3	100.0	97.2	70.7	77.5
노르웨이	6	0.053	5	5.9	39.6	96.1	94.6	61.2	68.5
슬로베니아	6	0.053	9	3.8	27.7	96.5	98.3	52.2	63.0
핀란드	8	0.056	3	6.5	41.5	100.0	100.0	55.0	62.1
독일	9	0.066	6	6.7	36.9	96.4	97.0	54.5	66.4
벨기에	12	0.073	7	8.2	42.4	80.1	57.7	48.2	59.3
룩셈부르크	13	0.075	10	5.9	28.3	100.6	99.4	52.2	66.1
오스트리아	14	0.078	7	7.1	30.3	98.7	99.2	54.7	66.0
스페인	15	0.081	5	8.4	38.0	70.9	76.7	52.3	64.8
이탈리아	16	0.085	4	6.0	30.1	79.1	83.3	39.3	58.1
포르투갈	17	0.091	10	9.9	34.8	50.8	52.2	53.6	64.2
캐나다	18	0.098	7	9.8	28.3	100.0	100.0	61.0	70.3
프랑스	19	0.102	8	8.9	25.7	79.7	85.5	50.7	60.1
이스라엘	20	0.103	5	9.7	26.7	87.3	90.3	58.9	69.4
일본	21	0.116	5	4.1	11.6	93.0	90.6	49.1	70.2
그리스	23	0.119	3	7.5	19.7	63.7	71.7	43.9	60.0
호주	24	0.210	6	14.1	30.5	91.4	91.5	58.6	70.9
아일랜드	26	0.127	8	10.4	19.9	86.8	82.2	52.4	67.8
체코	27	0.129	4	9.9	19.6	99.8	99.8	51.1	68.2
에스토니아	28	0.131	9	13.1	23.8	100.0	100.0	55.4	69.5
영국	28	0.131	9	14.6	26.7	81.3	84.6	56.9	68.7
폴란드	30	0.137	3	13.4	24.8	81.1	86.9	49.1	65.3
뉴질랜드	34	0.158	11	23.6	31.4	98.8	98.7	62.4	73.1
중국	37	0.164	27	7.3	23.6	69.8	79.4	63.6	77.9
슬로바키아	39	0.179	6	20.2	18.7	99.2	99.5	51.4	68.3
미국	43	0.203	14	22.6	19.5	95.4	95.1	56.0	68.4
헝가리	49	0.252	17	18.0	10.1	95.6	97.9	46.4	62.5
칠레	65	0.322	22	47.8	15.8	76.1	76.9	50.7	74.6
터키	69	0.328	16	27.6	14.9	43.5	64.8	30.4	71.4
멕시코	73	0.345	38	62.8	40.6	56.1	59.0	45.4	79.5

3. 국제 성평등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 정책⁴¹⁾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경제, 의사결정, 교육, 복지, 안전 등 8개 분야를 포괄하여 측정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5년 간 꾸준히 상승추이를 보이며,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 사용자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는 국제성평등지수의 측정방식의 문제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 등에서 여성지위가 취약하고 국제사회에 비해 지표의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본 절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국제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노력들을 정리하고 있다.

가. 성불평등 지수(GII)의 개선 노력과 성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청소년 출산율은 매우 낮고 2010년 이래 매년 하락하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GII 발표하는 청소년 출산율은 매우 높게 제시
 - GII 청소년 출산율: 2010~2015년 5.8명
 - 한국 통계청이 조사한 청소년 출산율: 2010년 1.8명 → 2015년 1.4명

□ 원인

- GII의 청소년 출산율은 UNDP에서 세계인구전망을 통해 추계된 장기추계전망치를 활용함.
 - 하지만 이 전망치는 장기추계에 있어 청소년 출산율이 상승할 것을 가정하고 추계되었기에 한국 통계청의 실제 통계와 일치하지 못함.

□ 개선제안

- 2012년 UNDP 추계담당자와 한국 청소년 출산율 추계의 문제점을 논의

41) 김태홍 외(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27~140. 인용.

- UNDP는 장기인구추계에서 한국의 문제점 제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
 - ※ 2010-2015년 추계치 : 기존 5.8 → 개정 2.2
- 이를 통해 한국의 GII는 2012년 0.153(27위/148개국)에서 2013년 0.101(17위/152개국)로 순위 상승

〈부표 3-23〉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연도	기존	개정
1995-2000	3.0	3.0
2000-2005	2.2	2.2
2005-2010	2.3	2.1
2010-2015	5.8	2.2
2015-2020	6.3	2.4
2020-2025	6.6	2.5
2025-2030	7.0	2.6

나. 성격차지수(GII)의 개선 노력과 성과

1) 출생성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출생성비(여아/남아)는 2011년 이후 자연 출생성비(0.94)에 도달하였음에도 GGI에서는 2012년부터 0.93으로 동일하게 측정
 - GGI 산정에서 한국의 출생성비(CIA 통계 활용): 2015년 0.93(128위/145개국)
 - 한국 통계청이 조사한 출생성비: 2015년 0.95
 - ※ 참고로 출생성비는 여아 대비 남아 출생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GGI 산정에서는 남아 대비 여아 출생수로 전환하여 사용

□ 원인

- GGI 산정 시 활용하는 CIA(The CIA World Factbook) 자료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와 차이 존재)

- CIA는 통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나, 한국의 2010년 통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음.

〈부표 3-24〉 출생성비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IA 통계 (GGI 산정 시 활용)	Male/Female	1.07	1.07	1.07	1.07	1.07	1.07
	Female/Male	0.93	0.94	0.93	0.93	0.93	0.93
한국 통계 (통계청 발표)	Male/Female	1.069	1.057	1.057	1.053	1.053	1.053
	Female/Male	0.935	0.946	0.946	0.950	0.950	0.950

주: CIA에서는 Male/Female 통계만 발표, Female/Male 통계는 WEF에서 산정

□ 개선제안

- 국가별 공식통계를 활용해 출생성비를 발표하는 UN 통계 활용 요청
 - UN 통계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
 - ※ 한국 통계청은 매년 출생아 수를 성별 구분하여 UN에 제출
 - ※ UN 통계DB의 한국 출생성비(남아/여아)
 - : 2010년 1.07 → 2011년 1.06 → 2012년 1.06 → 2013년 1.05

기존 자료원	변경 자료원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The CIA World Factbook 2014, data updated weekly	UN, 통계DB - STATISTICAL DATABASES - Demographic Yearbook

2)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성비

□ 현황 및 문제점

- GGI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중등학교 취학률은 남성이 여성 보다 높게 추정
 - 한국의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중등학교 취학률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 초등학교 취학률(2014년 기준): GGI(여성 97%, 남성 98%), 한국 통계(여성 96.1%, 남성 96.6%)
- ※ 중등학교 취학률(2014년 기준): GGI(여성 97%, 남성 98%), 한국 통계(여성 95.9%, 남성 95.4%)

□ 원인

- WEF는 GGI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산정 시 UNESCO 통계를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GGI와 UNESCO 통계 간 차이 존재
 -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부표 3-25〉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단위: %)

구 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여성	남성								
초등학교 취학률	GGI	97	98	99	99	100	99	97	97	99	98
	UNESCO	95.99	96.61	98.45	98.10	99.82	99.91	97.53	97.19	99.04	98.43
중등학교 취학률	GGI	97	98	99	98	96	94	86	85	98	96
	UNESCO	95.68	96.58	96.93	95.61	95.05	94.69	88.18	85.57	99.76	98.79

주: 통계 생산년도 기준이며,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 통계임
출처: WEF, Gender Gap Report, 각 년도;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또한, UNESCO 통계도 한국의 실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UNESCO에서 취학률 산정 시 재적학생수는 한국이 제출 자료*를 활용하나, 학령인구수는 UN(Population Division)의 인구추계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 ※ 한국은 UOE(UNESCO/OECD/Eurostat) 국제교육통계조사 자료로 초·중등학교 연령별 인구수(장래인구추계)와 학생수(교육통계연보)를 매년 OECD에 제출

〈부표 3-26〉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한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 (UOE 국제교육통계조사)			UN 인구추계	취학 적령인구 수 차이 (c-b)
	재적학생 수(a)	취학 적령인구 수(b)	취학 적령인구 수(c)		
초등학교 (6~11세)	여성	1,303,543	1,343,262	1,358,051	14,789
	남성	1,410,670	1,444,410	1,460,119	15,709
중등학교 (12~17세)	여성	1,743,096	1,795,179	1,821,709	26,530
	남성	1,916,988	1,974,977	1,984,818	9,841

출처: 한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재적학생 수: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학령인구 수: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UN 인구추계(UN Population Division(<http://esa.un.org/unpd/Download/Standard/Interpolated>); UNESCO Statistical Institute(<http://data.unesco.org>))

- 즉, UN 인구추계에서 중등학교 취학 적령 여성인구가 과다하게 추계되어 현실과 다르게 여성보다 남성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높게 측정되는 문제 발생
- ※ 한국의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나, 이는 취학 적령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중등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부표 3-27〉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구분	GGI			UNESCO			한국 통계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초등학교 취학률	97%	98%	0.99	95.99%	96.61%	0.99	97.04%	97.66%	0.99
중등학교 취학률	97%	98%	0.99	95.68%	96.58%	0.99	97.10%	97.06%	1.00

주: 1) 초등학교취학률 = $\frac{6\sim 11\text{세 초등학교 재적학생수}}{6\sim 11\text{세 인구}}$,

중등학교취학률 = $\frac{12\sim 17\text{세 중등학교 재적학생수}}{12\sim 17\text{세 인구}}$

2) UNESCO Statistical Institute의 경우 2014년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류임. 이에 이 부분에 대해 UNESCO와 협의 진행 중

- 개선제안
 - GGI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을 지표 산정 시 UNESCO 통계를 정확히 인용해 줄 것을 요청
 - 취학 적령인구 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UNESCO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

3) 유사업무 임금성비

- 현황 및 문제점
 - GGI에서 한국의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수준은 2015년 0.55(116위/145개국)로 낮게 측정되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
 - 이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업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0.63보다 훨씬 낮은 수치
 - ※ 통상 ‘유사업무 임금성비’는 ‘임금성비’ 보다 크게 나타나야 함.

〈부표 3-28〉 임금성비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GI) 유사업무 임금성비 (WEF 산정, 설문조사)	0.51 (128위/135국)	0.54 (117위/135국)	0.52 (120위/135국)	0.51 (125위/142국)	0.55 (116위/145국)
(한국 통계) 임금성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0.633	0.644	0.640	0.631	0.628

주 : 임금성비=여성 월급여액/남성 월급여액,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 원인
 - 유사업무에서 남녀 임금이 동등한가에 대해 한정된 집단(기업 CEO) 대상 주관적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로 측정하므로 실제 각국의 임금성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가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동등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국가일수록 남녀 임금격차도 크다고 답변할 개연성이 높음.

한국의 고위경영자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개요

▶ **(목적)** WEF가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력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
 ▶ **(조사수행)**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 **(대상/규모/방법)** 기업 최고 경영자(CEO), 'Top 3 manager'로 제한/100명/방문 조사
 ▶ **(유사업무 임금성비 조사문항)**

귀국에서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정도, 작업조건 등의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
 남성의 임금이 비해 1 2 3 4 5 6 7 남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아주 낮다

-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헝가리 등에서 객관적 통계 조사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보다 GGI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로 측정한 '유사업무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헝가리의 경우 OECD 통계 조사에서는 캐나다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작게 나타났으나, GGI의 '유사업무에서 임금격차'는 캐나다보다 더 큰 것으로 측정

〈부표 3-29〉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구분		2012	2013	2014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동등 수준 (WEF, 국가별 설문조사)	한국	0.54	0.52	0.51
	캐나다	0.71	0.73	0.72
	헝가리	0.47	0.48	0.50
임금성비(중위값) (OECD, 국가별 통계 분석)	한국	0.637	0.634	0.633
	캐나다	0.805	0.807	0.808
	헝가리	0.887	0.913	0.962

- 개선제안
- **(1안)** 유사업무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유지 하되,

- 응답자의 정확한 질문내용 이해를 돕고,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답변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변경 요청

기 존	<p>귀국에서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정도, 작업조건 등의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p> <p>남성들의 임금에 비해 아주 낮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p>
----------------	---



변 경	<p>귀국에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규모, 직급, 근속연수, 근로시간, 학력 등이 유사할 때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입니까?</p> <p>남성들의 임금에 비해 아주 낮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p>
----------------	---

- (2안)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국가별 객관적 통계 자료 활용 요청
 - ILO, OECD의 통계DB를 활용하거나, 국가별로 공식 발표하는 성별임금격차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

Abstract

2017 Gender Equality Report in Korea

Jae-Seon Joo
Tae-Hong Kim
Ho-Joong Bae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which indicates that customs and systems in Korea still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it appear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vel of gender inequality, its sources, and the level of improvement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 the nation as a whole. Therefore in 2009,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onducted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gender equality indicators which select in major fields carrying our gender equality policies, develop and measure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to review overall level of gender equality in Korea.

The value of the South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is designed to rise from '0.0' (perfectly unequal) to '100.0' (perfectly equal) a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mproves. According to this measure, the nation's Gender Equality Index stood at 72.7 in 2016, a sligh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t 70.2.

In terms of sector, public health marked the highest level of gender equality(97.0) in 2016, followed b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93.7), culture and information(87.3), family(78.0), economic activity(72.4) and welfare(72.0). The decision-making(26.5) area showed the lowest level of gender equality, followed by safety(64.1). Compared to 2011, family sector made the greatest progress, decision-making, public health, welfare, culture and information, economic activity. Meanwhil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was aggravated. In addition, the scores of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are 64.2, 77.7 and 82.7 respectively in which the degree of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awareness and culture of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elfare, etc., are included.

However, according to the trend in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South Korea has made constant progress in gender equality.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ranking is little dropped. This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lthough the level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indicators have improved overall, the pace of progress in reducing the gender gap is slow. It is also due to severe inequality in certain areas, including decision-making sector, safety sector. As a result, South Korea's ranking is gradually progressing in the UNDP's GII. However, it remains within the low ranking group in the WEF's GGI of which only considers the gender gaps when estima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restructured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in July, 2015. And in order to make possible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the national level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develop and disseminat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which the degree of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awareness and culture of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elfare, etc., are included. Furthermo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annually examine and publicly

announce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which is developed to indicate the degree of national gender equality by utilizing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According to measurement results of 2016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it appears necessary to focus on a continuous and structural policy effort to reduce gender discrepancies in the areas of decision-making. And in terms of safety,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of serious crimes is rapidly increasing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cases of aggravated felony such as murder, armed robbery, and sexual assault.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structurally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of serious crime.

연구보고 2017-31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7년 12월 20일 인쇄

2017년 12월 22일 발행

발행인 : 정 현 백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